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성과보고서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023



발간사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9년간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 등의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2023년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2023년도 연구성과보고서」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 '생활권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등 인구감소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미래에 맞이하게 될 지방행정 트렌드를 선도적으로 제안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성과보고서에는 연구원에서 수행한 53건의 연구 결과 (기본연구과제 12건, 정책연구과제 20건, 정책이슈리포트 12건, 자체연구 6건, 지침연구 2건)와 71회의 정기간행물(이슈와 포럼 3회,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12회, 지방의정브리프 12회, 인포그래픽스 6회, 카드뉴스 6회, 지방행정연구 4회, 세계지방자치동향 12회, 유튜브 16회) 등을 요약·종합한 것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이번 성과보고서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발간에 앞서 소중한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 자문위원님,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국정과제위원회 등 관계자님을 비롯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진과 직원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권한대행

주 재 복





I. 연구원 소개

1. 연구원 개요	14
2. 조직 현황	17



II. 연구보고서

1. 기본연구과제

자치분권제도

우수과제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21
▶ 전대욱, 권오철, 김필	
2)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4
-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 주희진, 고경훈, 정기용	

지방행정혁신

최우수과제

3)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설계에 관한 연구	29
▶ 강영주, 김지수, 박해육	
4)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연구	32
▶ 이경은, 이재용, 김수동	

- 5)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실태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관리방안 36
▶ 최지민, 유자영

지방재정경제

- 6)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발채무 관리제도 개선방안 38
▶ 김성주, 김진, 전영준
- 7) 재정분권 수준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40
▶ 유보람, 홍근석, 이서희

지역균형발전

- 8) 로컬브랜딩을 활용한 골목상권 육성방안 43
▶ 김도형, 양원탁
- 9) 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46
▶ 윤소연, 김민영

우수과제

- 10)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49
▶ 이원도, 유수동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우수과제

- 11) 해상교량 개통으로 인한 섬지역 생활환경 변화 연구 52
▶ 김지훈, 김상기, 김성규
- 1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 : WTP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55
▶ 송지영, 이민기, 정연백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자치분권제도

- 1) 온천도시 유형화 제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59
 - ▶ 전대욱, 최인수
- 2)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 특별자치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62
 - ▶ 주희진, 고경훈, 정기용

지방행정혁신

우수과제

- 3) 이북5도위원회 실질적인 역할·기능 강화 방안 연구 66
 - ▶ 김수동, 이재용
- 4) 재난·안전 중심의 읍·면·동 기능개선 모델 방안 연구 69
 - ▶ 유자영, 최지민, 원혜연

우수과제

- 5)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타당성 분석 71
 - ▶ 이경은, 유자영, 황선영

지방재정경제

- 6)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74
 - ▶ 김성주, 김진
- 7)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정정책 결정을 위한 재정지표 및 예측모형 개발 -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76
 - ▶ 김성주, 전영준
- 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및 효율화 방안 78
 - ▶ 홍근석, 유보람

지역균형발전

- 9)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81
 - ▶ 김민영, 이소영

- 10)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84
 ▶ 이원도, 이소영, 홍근석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11) 자체타당성 검토 개선 연구 : 운영수지 분석을 중심으로 86
 ▶ 송지영, 김성규, 이민기, 조현민, 이정희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부산광역시

- 1)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중심형 정책지표 개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91
 ▶ 이경은, 최지민, 유자영

대구광역시

- 2) 대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94
 ▶ 김민영, 양원탁

인천광역시

- 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97
 ▶ 유보람, 홍근석

광주광역시

- 4) 광주광역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100
 ▶ 김지수, 김수동

대전광역시

- 5)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102
 ▶ 김필, 전대욱, 김해솔

울산광역시

우수과제

- 6) 도시 물순환 회복력 향상 방안 연구 105
 ▶ 윤소연, 김도형

경기도

- 7) 경기도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력 운영에 관한 연구 107
▶ 윤소연, 김민영

강원특별자치도

- 8)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110
▶ 유보람, 신두섭

충청북도

- 9)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113
▶ 권오철, 금창호

4. 정책이슈리포트

서울특별시

- 1) 서울특별시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119
▶ 김필, 주희진

부산광역시

- 2)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부산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122
▶ 여효성, 양원탁

대구광역시

- 3)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125
▶ 양원탁, 김민영

인천광역시

- 4)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방안 연구 128
▶ 홍근석, 전영준

광주광역시

- 5) 광주광역시 디지털 전환 혁신 방안 131
▶ 이재용, 이경은, 김수동

대전광역시

- 6)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연구 134
▶ 정기용, 주희진

경기도

- 7)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경기도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137
▶ 여효성, 이원도

강원특별자치도

- 8)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139
▶ 이원도, 윤소연

충청북도

- 9)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141
▶ 윤소연, 이원도

전북특별자치도

- 10)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143
▶ 김민영, 윤소연

경상남도

- 11)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대책 146
▶ 유자영, 이경은, 안혜경

제주특별자치도

- 12) 제주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툴(tool) 개발 149
▶ 전대욱, 김해솔

5. 자체연구과제

기획조정실



핵심과제

- 1)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 153
▶ 유수동, 최지민, 이서희, 윤소연, 강희송, 문혜리

자치분권제도실

- 2)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기초 연구 156
▶ 주희진, 최인수, 전대욱, 박재희

지방행정혁신실

- 3) 디지털 기반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및 실효성 향상 방안 연구 161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 이재용, 강영주, 김지수, 이경은, 김수동

지방재정경제실

- 4) 지자체 기반의 지역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 164
▶ 이서희, 전성만, 유보람, 전영준

지역균형발전실

-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 - 지방소멸대응전략 167
▶ 이소영, 이제연, 김도형, 양원탁, 윤준호, 최민정
-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170
▶ 양원탁, 이소영, 김도형, 김민영, 김진언, 김나현

6. 지침연구과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문지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175
▶ 김남주, 심대용, 조현민, 김진호, 심환희
- 2)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발전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178
▶ 함윤주, 김도영, 박소연



Ⅲ. 정기간행물

1.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185
2. 지방의정브리프	186
3. 인포그래픽스	187
4. 카드뉴스	188
5.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189
6. 지방행정연구	192
7. 세계지방자치동향	195
8. 연구성과 콘텐츠(유튜브)	199



Ⅳ. 부록

2023년도 연구과제 수행목록

1. 기본연구과제	202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203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204
4. 정책이슈리포트	205
5. 자체연구과제	206
6. 지침연구과제	206
7. 수시연구과제	207
8.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207
9. 수탁연구과제	207
10. 타당성조사과제	2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연구성과보고서



I 연구원 소개

1. 연구원 개요
2. 조직 현황

I

연구원 소개



1. 연구원 개요

▶ 설립목적

- 「민법」 제32조 및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역량 제고 및 지원

▶ 주요 연혁

- 1984.09. ● (재단법인)지방행정연구소 개소
- 1986.02 ● (재단법인)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개칭
- 1986.05.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 공포(법률 제13809호)
- 2014.11.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지방재정법·행정자치부 고시)
- 2016.12. ● 청사이전(서울 서초동 → 원주 혁신도시)
- 2020.06.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7호)
- 2020.10. ●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1호)
- 2021.11.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원주 이전
- 2023.01.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2023.07. ● 지방자치분권연구센터 설치(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9조제4항)
- 2023.12. ● 지방규제연구센터 설치(지방규제혁신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 미션 및 비전·핵심가치

미션

고품질 정책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비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수준
정책연구기관



▶ 경영목표

3대 경영목표	6대 추진전략	18대 실천과제
I. 현장 중심 고품질 정책연구 수행	1. 연구품질 개선	1-1.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편성방식 개선
		1-2. 연구과제 수행방식 개선
		1-3. 연구과제 품질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2. 연구환경 조성 및 구성원 역량강화	2-1. 연구자료의 체계적 관리·활용 체계 (디지털 집현전) 구축
		2-2. 전산시스템 강화를 통한 연구수행 지원
		2-3. 역량개발 프로그램 확대·신설
II. 소통·협업 기반 성과 공유체계 강화	3. 대내 소통 및 협업 시스템 구축·운영	3-1. 직원참여형 의사결정체계 구축
		3-2. 건설적 노사협력 관계 정립
		3-3. 윤리·인권 경영체계 구축
	4. 대외 네트워크 내실화 및 연구성과의 체계적 확산·홍보	4-1. 국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연구성과 확산
		4-2. 국제기구 공동연구 및 협업 확대
		4-3. 지역사회 지원·봉사활동 강화
		4-4. 뉴미디어를 활용한 연구성과 홍보·활용 체계 구축
		4-5. 연구성과의 체계적 확산·홍보
III. 연구원 제도 개선 및 운영 효율화	5. 경영혁신 체계 구축	5-1. 효율적 연구원 운영을 위한 법령·규정 등 제·개정
		5-2. 조직혁신을 위한 상시 체널(경영혁신 TF) 구축 및 운영
	6. 조직·인사·재정 혁신	6-1. 연구조직 및 공간 효율화 방안 마련
		6-2.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평가제도 운영
		6-3. 효율적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6-4. 연구인사 역량 강화

▶ 주요사업

구분	사업	분야		
연구원	연구사업	연구사업	기본연구과제	행정안전부 정책연구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정책이슈리포트
			수시연구과제	자체연구과제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연구관련사업	학술행사	국내세미나(연구원 주최·유관기관 협력)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포럼	
			지방의정아카데미	국정목표 실천 경진대회
			공모사업(도전, 작은연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국제협력	일본 CLAIR 및 전문기관 교류협력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 협력	
			국제세미나	
		발간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지방의정브리프
			인포그래픽스	카드뉴스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지방행정연구
세계지방자치동향	연구성과물 콘텐츠(유튜브)			
수익사업	수탁용역 연구과제			
지방 투자사업 관리센터	조사사업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 자체타당성조사 검토		
		출자·출연 타당성 검토		
		투자사업 이력관리	센터연구과제	
		센터정책과제	타당성조사 지침개정	
	조사관련사업	세미나 개최	공무원 교육	내부 역량강화
	조사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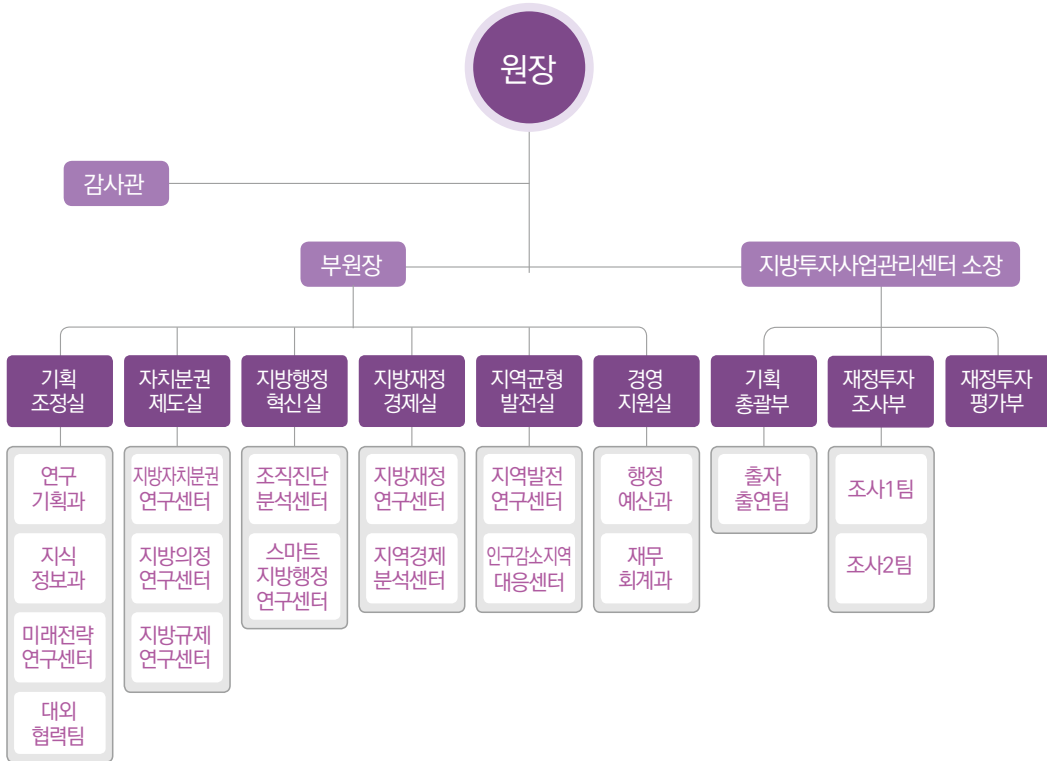
▶ 2023년도 예산 : 26,418백만 원

(단위 : 백만 원)

구분	세 입		세 출		
일반 회계	계	13,352	계	13,352	
	1. 정부출연금	3,354	1. 인건비	7,107	
	2.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4,150	2. 연구사업비	1,240	
	3. 순수자체수입	가. 기금회계전입금	1,267	3. 연구관련사업비	1,121
		나. 수탁연구용역수입	4,000	4. 경상운영비	1,184
		다. 잡수입	50	5. 수탁용역사업비	2,600
	4. 전기이월금	531	6. 예비비	100	
특별 회계	계	13,066	계	13,066	
	1. 정부출연금	200	1. 인건비	2,542	
	2. 지방투자사업타당성조사 수수료	11,951	2. 조사사업비	8,149	
	3. 지방공기업투자사업조사 수수료	870	3. 조사관련·지원사업비	110	
	4. 잡수입	45	4. 경상운영비	665	
	5. 전기이월금	-	5. 예비비	100	
			6. 총당금회계 전출금	1,500	

2. 조직 현황 (2023.12.31. 기준)

▶ 조직도



▶ 정·현원 현황

구분	원장	연구직	전문직	투자분석직	행정직	공무직	계
현원/정원	0 / 1	60 / 63	1 / 1	20 / 20	19 / 19	11 / 12	111 / 116

II

연구보고서

1. 기본연구과제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4. 정책이슈리포트
5. 자체연구과제
6. 지침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자치분권제도

-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21
- 전대욱, 권오철, 김필
- 2)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24
- 주희진, 고경훈, 정기용

지방행정혁신

- 3)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설계에 관한 연구 29
- 강영주, 김지수, 박해욱
- 4)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연구 32
- 이경은, 이재용, 김수동
- 5)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실태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관리방안 36
- 최지민, 유자영

지방재정경제

- 6)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발채무 관리제도 개선방안 38
- 김성주, 김진, 전영준
- 7) 재정분권 수준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40
- 유보람, 홍근석, 이서희

지역균형발전

- 8) 로컬브랜딩을 활용한 골목상권 육성방안 43
- 김도형, 양원탁
- 9) 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46
- 윤소연, 김민영
- 10)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49
- 이원도, 유수동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11) 해상교량 개통으로 인한 섬지역 생활환경 변화 연구 52
- 김지훈, 김상기, 김성규
- 1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 : WTP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55
- 송지영, 이민기, 정연백

★ 우수과제

1-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주제어 지방자치제도 | 지방분권 | 인구감소대응

연구책임 전대욱 • 연구진 권오철, 김필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 대응을 위한 자치분권 제도의 변화 필요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행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제도적 정비 필요
 -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정책으로서, 지방행정의 계층·구역에 대한 조정 및 중앙-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재배분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의 모색 필요
 - 아울러 구조적인 체제개편 외에, 자치단체 간 수평적인 기능 협력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한 자치단체 기능보완 및 공공서비스 역량제고 방안 등 모색 필요
- 본 연구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변화방향을 탐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개편 및 제도개선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함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 계층·구역의 조정 방안, 자치단체 간 기능 재배분 및 협력제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지향적인 자치분권 제도 변화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

II 연구의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방소멸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치분권 제도에 관한 개념·이론

- 지역 인구감소·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지방행정으로의 영향 등 제도적 영향요인
 -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및 저출산·고령화가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동향 및 자치분권 제도의 변화 방향 논의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대응정책과 지방행정체제 등 분권전략의 변화

- 인구감소 완화정책 및 적응정책의 견지에서 자치단체의 대응전략 논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계층·행정구역 개편 방안 논의

- 지방행정의 계층 및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이론 및 정책추진 동향 분석
 - 지방행정 계층의 유연화, 행정구역 폐·치·분·합 등 정책흐름에 관한 동태적 분석 제시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향, 광역·기초단위의 개편(안) 및 법제개선안 제안
 - 광역시·도 통합에 관한 (통합)광역단체-직접수행, (통합)광역단체-행정청 및 일반시 전환 등의 추진방안 제언 및 논의
 - 인구감소지역 군의 광역관리사무 도 위탁 수행 등 기능개편, 군의 협력기구 설치를 통한 공동수행, 자치구 광역통합 기능수행체계 등 기초단위에서의 인구감소대응 개편방안 논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배분 방안 논의

- 인구감소가 지방행정의 주요 기능에 미치는 영향 및 기능별 재배분 방안 조사·분석
 - 89개의 인구감소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주요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행정의 영향요인, 자치단체 주요 기능별 파급효과 및 대응을 위한 기능 재배분의 방향 등 조사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행정의 주요 기능 변화 및 대응방안 논의
 - 보건·복지, 일반행정 등 인구감소로 인한 업무량·난이도의 증가가 예측되며, 산업경제 및 문화·관광·체육 등은 주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능으로 파악됨
 - 지역맞춤형 분권제도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치단체의 기능수행 및 정부수준 간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를 통한 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 필요성, 기능별 재배분 방안 등 논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간 수평적 기능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행태 및 활성화 요인의 조사·분석
 - 인구감소지역 공무원 설문조사 및 선진 사례분석을 통해, 자치단체 간 업무협약,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협력 행태 등 제도 활성화 방안 조사·분석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자치단체간 수평적 기능 협력의 전략적 추진방안 제시
 - 상황적응적 추진과 책임성 확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구조적 효율화보다 사업별로 기능적 협력의 필요성, 인구감소와 관련된 포괄적인 기능협력의 필요성 등 활성화 전략 제언
 -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광역·기초 간 수직적 협력의 필요성 및 협력주체의 명확화, 의료·건강 인프라 조성, 보육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력 등의 기능적 협력의 우선적 추진 방안 등 제시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으로서 자치분권 제도의 전환

- 인구감소 대응 완화정책을 넘어선 적응정책으로서의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방향 제언
 - 인구감소 완화를 위한 프로그램 위주의 대응정책을 넘어 감소된 인구에 맞는 지방행정체제 및 기능수행 방안 제시를 통해, 인구감소·지방소멸이라는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전략 도출
 -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맞춤형 분권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통해 분권형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제시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기능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안
 -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및 개정안 도출 및 제언 등

1-2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주제어 지방의회 | 자율성 제고 | 자치입법권

연구책임 주희진 • 연구진 고경훈, 정기용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율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 존재

-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지방과 지방의회의 자율성(autonomy)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 현장과 학계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기대한 만큼 제고되지 못하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실정임

지방의회의 자율성 제약 요인 검토를 통한 지방의회 자율성 수준 진단

- 평가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자율성 수준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의 발생 방식에 따라 공식적/비공식적 통제 및 발생 관계에 따라 수직적/수평적 제약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자율성 수준을 진단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의회 자율성 수준 진단을 위한 이론적 논의

-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을 제약의 원인과 제약 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실태분석 및 수준을 진단함
 - 실태분석은 문헌 검토 등을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수준진단은 전문가 및 지방의회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FGI 등을 토대로 분석을 실시함
- 지방의회의 자율성 제약 요인이 기인되는 위치에 따라 Wright에 따른 정부 간 관계를 토대로 기관 간의 관계 위치를 수직적 제약과 수평적 제약으로 구분
 - 수직적 관계는 의회 간 관계로서 지방의회와 국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의 관계를 의미함
 - 수평적 관계는 정부 내 관계로서 동일 지방정부 내에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의미함
- 지방의회 자율성 제약 방식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함
 - 공식적 통제는 법과 제도 등에 의하여 통제되는 방식으로 각종 법과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자율성이 제약되는 방식을 의미함
 - 비공식적 통제는 구조적인 제약 규정 등은 없지만 지방의회의 운영 과정 혹은 운영하는 환경에서 비공식적으로 적용되는 정형화된 규칙이나 관행에 의한 통제를 의미함

표 | 지방의회 자율성 실태분석 및 수준진단의 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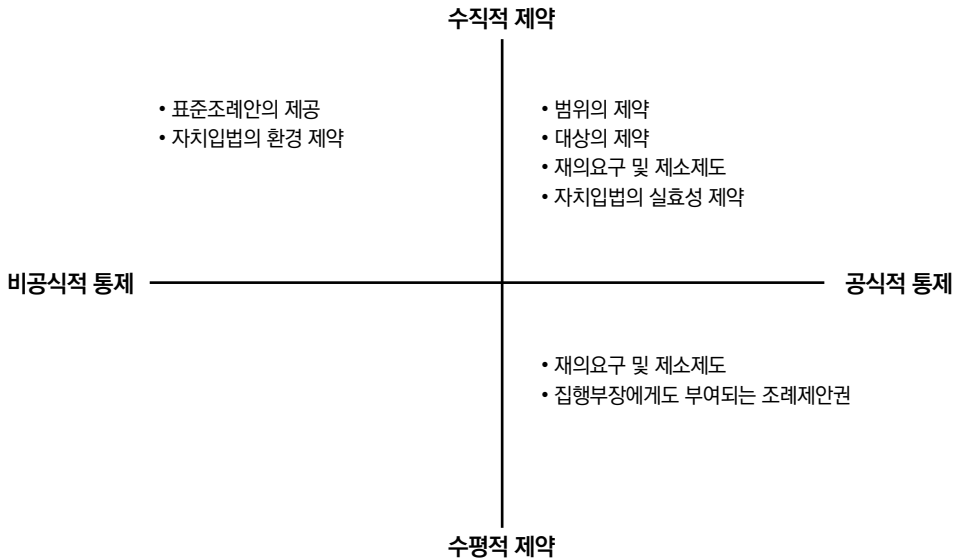
자율성 제약 방식	자율성 제약 원인 기관	지방의회-국회	광역의회-기초의회	지방의회-집행부
		수직적 제약 (의회 간 관계)		수평적 제약 (정부 내 관계)
공식적 통제	법·제도에 의한 통제			
		• 국회 및 광역의회의 감독과 통제로 인한 제약		• 집행부에 의한 제약
비공식적 통제	지방행정의 정형화된 규칙과 관행에 의한 통제			
		• 국회 및 광역의회의 감독과 통제로 인한 제약		• 집행부에 의한 제약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제약 실태분석

- 자치법규 등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의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 자치입법권의 제약 방식은 대체로 공식적 통제에 의한 제약이 주로 발생함
 - 자치입법권은 주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약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주로 나타나고 있음
-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치입법권의 자율성 제약은 수직적 제약이 수평적 제약보다 더 많이 발생함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있어서 공식적 통제와 수직적 제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에 의한 사전적 통제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함

| 그림 |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율성 제약 요인: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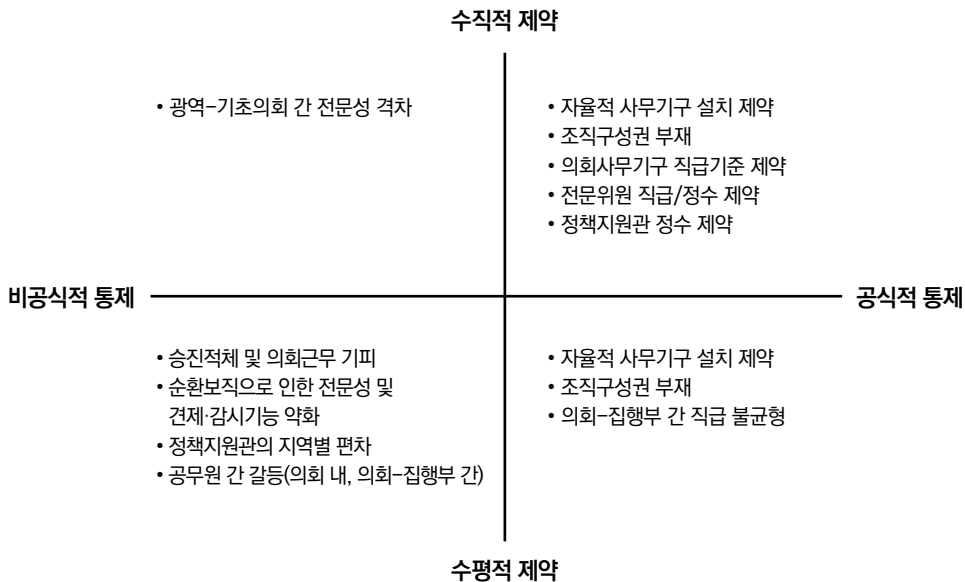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제약 실태분석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한 여러 조직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에 대한 자율성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자치조직권의 제약 방식의 측면에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가 함께 나타나고 있음
 - 공식적 통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의회사무기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공식적 통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운영적 측면’은 비공식적 방식에 의한 통제 역시 발생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은 법과 규정에 의한 제도에 의한 공식적 통제뿐만 아니라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운동을 제약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함

-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치조직권은 수직적 제약과 수평적 제약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 상급기관에 의한 수직적 제약으로 인하여 1차적으로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사전적으로 제약을 받는 동시에 수평적 제약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의 수직적 제약은 주로 공식적 통제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는 반면, 수평적 제약은 규정에 의한 공식적 통제와 더불어 조직 내부에서 적용되고 있는 비공식적 통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자율성 제약 요인: 종합



지방의회 자율성 수준 진단

-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 모두 국회 및 집행부에 비하여 지방의회의 자율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자치입법권의 경우 자치입법의 범위 및 대상의 제약 및 제재수단 마련의 어려움이 중요도와 시급성, 난이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남
- 자치조직권의 경우 정원관리권의 부재로 인한 조직구성권의 문제,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의 제약, 의회-집행부 간 직급 불균형 등 전반적으로 중요도, 시급성, 난이도가 높게 나타남
 - 특히 비공식적 통제와 수평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치조직권의 경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에 따라 중요하게 인식하는 자치조직 제약요인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회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율성도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자치입법권 자율성 확대 방안

-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역량 강화,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자치입법절차의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계 재정립(재의요구제도의 정비) 등을 제시함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 방안

-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제도 정비, 인사시스템의 정비, 지방의회에 대한 조직구성권 부여,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함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방안

-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의 권한·위상 확대를 위한 기관구성 형태 논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입법 환경 개선 등을 제시함

최우수과제

1-3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설계에 관한 연구



주제어 지방분권 | 조직관리 | 책임성

연구책임 강영주 • 연구진 김지수, 박해욱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분권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자율성 확대 요구와 필요성

-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주민수요 대응을 위해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필요
 - 인구 감소, 기후 위기, 팬데믹 발생과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유연성과 자율성 확대 필요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설계 제안

- 지자체 조직관리 자율성 제고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책임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관리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효성 있는 책임성 확보 수단 설계 필요

II 연구의 주요 내용

현행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의 운영 실태

-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의 분류
 - 조직관리에도 거버넌스 관점과 정책 단계별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두 가지 거버넌스-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계층제(법적) 거버넌스, 지방정부와 주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정책 3단계-정책기획 단계, 정책집행 단계, 정책평가·환류 단계-로 나누어 보고자 하였음

- 상위기관에 의한 통제 수단-국회·중앙부처·감사원의 통제수단, 기준인건비제도 등-과 지자체 자체적인 통제 수단-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조직관리위원회, 자체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정보공개제도, 주민참여제도, 민관합동조직진단반 등-들을 거버넌스별, 정책 단계별로 분류하였음

• 현행 수단의 충분성 평가

- 현재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들은 계층제(법적) 거버넌스 차원에서의 수단으로만 치우쳐 있으며 평가환류단계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환류 단계의 수단들은 직접적이고 강한 수단인 반면 기획단계의 수단들은 강제성이 없는 임의적인 수단이 대부분임
- 최근 도입된 민관합동조직진단반 제도는 기획, 집행, 평가·환류 단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으나 아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지자체가 많음
- 따라서 지자체 조직관리 정책 단계별 수단 보완과 실효성 제고 및 네트워크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재설계가 필요함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재설계 방안

• 지자체 조직관리 정책 주체들의 책임성 인식 분석

- 지방의회 의사록 자료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자체에서 논의되는 책임성의 개념을 탐색해 본 결과, 법적 책임성, 전문적 책임성, 민주적 책임성, 결과적 책임성, 절차적 책임성 등 다양한 차원의 책임성 논의 확인
-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시민단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적용하여 책임성에 관한 인식 분석 결과, 합리주의자, 참여주의자, 책임이양옹호론자, 직업윤리주의자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속의를 통해 신뢰 기반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함을 의미

• 거버넌스별, 정책단계별 책임성 확보 수단 재설계

- 지자체 조직관리의 목표를 정책단계별로 살펴본다면, 정책기획단계에서는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와 기능 설정을 하는 것이고,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조직의 환경 변화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미세 조정하는 것이며, 정책평가·환류 단계에서는 당초 계획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재검토하는 것임
- 계층제(법적) 거버넌스 차원의 재설계를 위해 일본, 독일 사례와 국내의 지방재정관리제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정책기획단계에서는 정기적 사무재평가 사업 도입 등,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모니터링 강화 등, 정책평가단계에서는 지방조직관리 정보공시 5대 지표 개선 등을 제안
-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의 재설계를 위해 미국, 영국의 사례와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원회 사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참고하여 정책기획단계에서는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강행 규정 마련 등, 정책집행단계에서는 민원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법에 기반한 조직설계기법 마련 등, 정책평가단계에서는 전문평가위원회, 시민배심원의 조직평가 참여 방안, 주민모니터링단의 참여 방안 등을 제안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자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의 실행방안: 제도 설계 및 관리 방안

- 표준조례안 마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선, 기타 법규 제개정 등을 통한 법제도 설계 방안
 - 지자체 조직관리 주민 참여에 관한 표준조례안 마련,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실효화 방안, 조직관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기준인건비 패널티 부여시 복수기준 제시 등을 포함한 기구정원 규정 개선, 사무재평가 제도화를 위한 (가칭)공공사무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
- 컨설팅 지원 방안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공유 및 주민 참여 방안
 - 지자체 조직관리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자원 풀(pool) 관리 및 연계, 기준인건비 산정에 관한 전문기관의 지원 필요
 - 주민 참여 활성화의 핵심은 참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므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온라인상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필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 지자체는 각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조직건전성에 관한 조직학습 필요
 -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국가 전체 관점에서의 조직관리 기준을 평균적인 틀로 삼고, 자체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해 적정 규모 등 조직건전성의 내용에 관한 조직학습 필요
- 공무원·시민·청소년 각각에 대한 맞춤형 교육 필요
 - 관리, 통제 중심의 책임성 확보 기제에서 소통, 협력 중심의 책임성 확보 기제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소통 능력, 행정과 조직관리에 관한 이해 능력, 공공행정에 관한 참여와 관심도 등이 높아져야 하며 이는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가능

1-4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연구



주제어 스마트지방행정

연구책임 이경은 • 연구진 이재용, 김수동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디지털 전환 시대, 전체 국가뿐 아니라 지역 단위의 디지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정부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노력이 필요함
 - 정부는 디지털 정책 입안 및 집행 주체, 디지털 혁신 촉진자, 디지털 정부 혁신 이니셔티브의 추진자, 디지털 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의 수호자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국가 단위의 디지털 전략을 지역 사회의 고유한 상황과 요구에 맞게 수정한 지역 단위의 디지털 전략이 필요함
 - 지금까지의 디지털 혁신 정책들은 주로 국가 전체 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왔으며,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핵심 주체 역시 중앙정부로 한정되는 경향이 강함
 - 그러나, 국가 단위의 디지털 전략은 특정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자원의 차이를 고려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유효한 성과를 보인 전략이 다른 지역에서는 유효한 성과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준비도' 측정을 위한 모형 및 지표체계 필요

- 지역 단위의 디지털 정책 및 전략을 추진하는 핵심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국가 단위의 디지털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여 집행하는 수동적 행위자를 넘어 지역 사회의 고유한 상황과 요구에 맞게 디지털 정책을 조정하고 새롭게 기획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주도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맥락을 반영한 가운데 디지털 혁신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모형 및 지표체계가 필요함

- 기존의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지표들은 대부분 국가, 중앙정부기관, 민간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관련 지표는 주로 스마트시티라는 특정 정책에 집중되어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간 디지털 혁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역량 및 자원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가 우선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높음

II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및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에 대한 개념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 정책, 서비스 등을 개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광범위한 혁신 과정을 의미함
 -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음
 - 더 나아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지방행정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고,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운영 측면에서의 효과성과 적실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지방행정을 혁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총체적인 변화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이러한 역량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기존 연구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리더십, 전략, 인적·물적 자원, 기술 및 데이터, 거버넌스 등과 관련이 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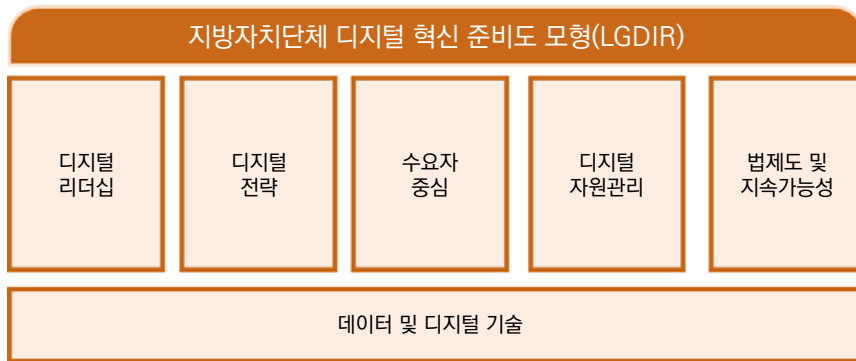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및 지표체계 개발

- 본 연구에서는 Malcolm Baldrige(MB) 모형을 기반으로 앞서 정의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의 개념 정의와 지방행정혁신 및 디지털 혁신의 성공요인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역 단위의 디지털 혁신 사례 분석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LGDIR) 모형을 개발하였음

- MB 모형은 일반적인 조직혁신과 조직 성과관리를 위한 도구이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준비도 측정이라는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LGDIR) 모형의 7가지 주요 요소를 디지털 리더십, 디지털 전략, 시민 중심, 인적자원 및 조직문화, 운영, 데이터 및 플랫폼 관리, 디지털 혁신 성과로 재구성함

| 그림 |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LGDIR)



- 이후 LGDIR 모형의 핵심 요소에 대한 측정 항목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 체계를 설계함
-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진이 최초로 개발한 LGDIR 모형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증 과정을 수행하였음
 - 전문가들은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행정학, 정책학, 법학 등을 전공한 교수와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검토 및 평가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였음
 - 전문가 타당성 검증 결과, LGDIR 모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검토 및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수정 요청 사항과 연구진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LGDIR 모형 및 측정체계를 완성하여 제시하였음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방자치단체 현재 디지털 혁신 준비도 수준에 대한 진단으로 미래 역량 강화

-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LGDIR 모형은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가짐
 -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의지 및 능력의 현재 수준(AS-IS)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둘째, 본 연구 모형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진단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 또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전반적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가 가진 주요 강점과 지자체 간 격차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셋째,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디지털 전환에 이르는 여정에 필요한 조직의 미래 역량(TO-BE)을 밝힘으로써 각 지자체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의 발전을 위한 제언

-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학술적 노력이 필요함
 - ▲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관련 이해관계자들(전문가 및 중앙·지방 공무원 포함)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 이를 모형 및 지표체계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 ▲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측정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와 실무 전문 조직 지정, ▲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에 대한 가중치 설정 연구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성과에 대한 측정 모형 개발 후 LGDIR 모형과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성과 모형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수행, ▲ 다양한 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혁신 관련 측정 항목들을 조사하고, 이들 중 중복된 내용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양식을 제시하여 조사, ▲ 실제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를 측정할 경우 전체적인 응답 현황을 관리하여 취합할 총괄 부서를 지정하되, 사전에 측정 문항별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총괄부서가 측정 문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관 부서로부터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답의 출처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조치, ▲ LGDIR 모형의 개별 지표들에 대해 정책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LGDIR 진단 결과별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1-5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실태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관리방안



주제어 조직관리 | 지방자치제도

연구책임 최지민 • 연구진 유자영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공공부문의 적정규모 관리를 위한 과학적 인력관리론의 중요성 대두

-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적정규모 관리를 강조하고 있음
- 행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인력 수준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 과정의 성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에 근거한 유용한 정보의 추출과 이를 정부와 지자체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에 좌우됨

지역맞춤형 인력관리를 위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인력 간 관계에 대한 심화연구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인력관리방안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차별적으로 작동하는 “지방행정기능에 대한 이해”, 인력관리의 “지역수요의 반영” 등이 전제되어야 함
- 인구 규모와 법적 지위로 지자체 유형을 구분하는 지금의 방식에 인구의 변동이나 행정 수요의 변동을 반영하여 ▲행정수요 증가형, ▲정체형, ▲감소형 등으로도 구분될 필요가 있음

II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인력관리에 필요한 핵심요소에 대한 문헌검토

- 맞춤형 인력인력관리는 “지역 맞춤형”, “적정인력규모의 산정” 그리고 “적정인력의 배분과 관리”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됨을 확인함

지역유형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동, 인력의 변동, 행정수요와 인력 간 관계규명

- 현재 지역유형화의 방식과 차별화되는 지역의 유사성을 포착하고 유의미한 인력관리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특성을 도출함
- 인구감소를 가져온 도시의 성장유형에 근거하여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행정수요의 특징이 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봄

데이터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인력관리 제도의 제안

- 제도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
-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인력관리를 위한 인력 산정제도의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역맞춤형 인력 산정모형의 개발과 적용

-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원증감분에 대한 산식은 변화와 변화의 관련성에 기반한 모형을 개발함
 - 3개 지역별로 별도 산정된 회귀방정식 사용시계열로 구축된 행정수요 지표의 변화량을 독립변수로 하여 총정원의 변화량(정원증가분)을 적정인력으로 추정
 - 행안부 9대 지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현재 제도와 제도적 안정성 동일 지역유형화 방식의 간소화 및 유형축소

인력 추정모형의 적정성 판단

- 신규모형은 지역의 성장과 쇠퇴라는 구조적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기존 모형보다 적은 추정오차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현행 정원관리의 적정성 유지와 관리의 논리를 보완함

1-6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발채무 관리 제도 개선방안



주제어 우발채무 | 채무부담행위 | 디폴트(채무불이행)

연구책임 김성주 • 연구진 김진, 전영준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민자유치 위해 적극적인 우발채무 원인행위 및 관리 사각지대

- 민선 8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등의 일환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해왔으나 관리 차원에서는 사각지대 발생
 - 이 과정에서 우발채무가 발생되어 왔지만, 전국 단위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우발채무에 따른 파장이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는 문제 발생

- 2022년 말 강원중도공사 spc 사업과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파장이 지역을 넘어 국가, 민간영역, 다른 나라와의 신용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연구진의 문제의식이 있음

II 연구의 주요 내용

우발채무와 관련한 문제점 분석

- 우발채무 관리제도로써 지방재정관리제도의 한계,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공개 내용 및 공개 시기, 담당 공무원 전문성 문제, 근본적으로는 우발채무 사업 자체의 불안정성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우발채무 관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민간분야의 우발채무(부채) 관리현황, 일본과 미국의 우발채무(부채)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종합함

우발채무 관리방안으로서 지자체 자체 관리방안, 제도 개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

- 우발채무의 지자체 자체 관리방안
 - 지자체 재무제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런 내용을 재정공시를 통해 충분히 알림
 - 차세대 이호조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지자체 스스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방안
 -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 우발채무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 포함범위의 재점검
 - 우발채무 포함범위에 BTO 사업의 포함 여부 재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우발채무가 누락되지 않고 관리되기 위해 약정사항들을 누락 없이 관리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우발채무 관리 강화로 지자체의 잠재적 재정위기 감소

- 우발채무의 지자체 자체 관리강화와 우발채무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최근 불가피하게 지역소멸, 지역경제 회복, 도시개발 등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보증채무행위 확대에 따른 재정위기 감소

우발채무 관리 필요성 및 지자체 전문성 강화 인식 제고

- 민간과 중앙정부, 외국사례의 우발채무 관리 사례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단위의 우발채무 관리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지자체 자체 강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매뉴얼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필요성 인지

1-7 재정분권 수준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주제어 재정분권 | 재정분권 측정지표 | 재정 자율성

연구책임 유보람 · 연구진 홍근석, 이서희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분권 수준 진단 필요

-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의 재정분권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재정분권 정책은 주로 지방재정 규모 확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그 결과 규모 측면에서 재정분권 수준은 상당한 외형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설명됨
- 형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포함되지만,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비지방재원을 제외하여, 보다 실질적인 의미의 재정분권 수준 논의 필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 반영한 재정분권 지표 개발 통해 재정분권 수준 점검 필요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측정지표에 따라 재정분권 수준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분권 지표 선택 어려움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반영한 재정분권 지표 개발을 통해 현재 재정분권 수준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며, 우리나라 재정분권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한 재정분권 개념 재정의 및 적정 지표 설계

- 세입 측면에서 최소한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되는 재원의 규모가 충분한 상태를 재정분권으로 정의하였으며 비지방재원을 제외한 세입 규모를 재정분권 측정지표로 활용함

- 세출 측면에서 지출 결정권(사용 용도와 규모에 관한 결정권)이 주어진 재원의 규모가 충분한 상태를 재정분권으로 정의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 비중을 세출분권 지표로 활용함

세입 측면에서 재정분권 수준 진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세입분권 수준은 2011년부터 21년간 유사한 패턴으로 감소
 - 특히, 2013년 이후 광역과 기초 모두 세입분권 수준이 큰 폭으로 감소함
 -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의 5%에서 11%(+6%p)로 상향 조정하였고, 지방소득세 부과방식을 기존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sur-tax)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세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역의 세입분권 수준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기초자치단체는 자치구와 시 지역의 세입분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군지역의 경우 시 및 자치구와 비교하여 세입분권 수준이 낮았고, 격차도 크게 나타남

세출 측면에서 재정분권 수준 진단

- 지방자치단체 단위별(광역, 기초), 유형별(시, 군, 구), 동일 유형 특성별(인구수) 세출분권 수준에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됨

재정분권 수준 종합 분석 결과

- 세출분권과 세입분권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군지역의 세입-세출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세입분권의 경우 시와 자치구 수준이 비슷하고, 군지역의 분권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세출분권의 경우 시, 군, 구 분권 수준에 큰 차이가 없고 군지역의 세출분권 수준은 자치구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실질적인 지방재원 역할이 가능한 세원을 중심으로 세입분권 강화 논의 필요

- 세입 측면에서 재정분권 정책은 실질적 의미에서 지방 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원을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으로 가지 않는 비지방재원을 축소하고,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입규모 확대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출 자율성이 높은 자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출분권 강화 논의 필요

- 세출분권 측면에서 자율성 높은 자원 규모를 확대하고 자원 규모의 확대가 다양한 지역사업(자체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이양을 통해 세출 측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제도적 노력이 있었으나 아직 그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세출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1-8

로컬브랜딩을 활용한 골목상권 육성방안



주제어 로컬브랜딩 | 골목상권 | 장소성

연구책임 김도형 · 연구진 양원탁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새로운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주목받는 골목상권

- 2000년대 들어 성장하기 시작한 골목상권은 지역사회와 상권 방문객들의 독특한 연계 활동을 형성해 지역의 문화를 이끄는 기능을 수행
 - 2020년 이후에는 COVID-19의 확산으로 상권이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독특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지닌 핫플레이스(Hot Place)가 집중된 골목상권은 꾸준히 주목받고 있음
 - 젊은 세대가 찾고 있는 도시 내 장소는 다양한 인식과 공간 경험이 더해짐과 동시에 더욱 고유하고 독특한 장소 이미지를 형성
-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서의 활발한 정보 공유로 젊은 세대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으며, 골목상권은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장소로 더욱 주목
 - 또한 매력적인 감성과 생활문화, 장소의 서사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청년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영업자의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공간으로 부상

장소의 관점에서 골목상권 연구의 필요성 제기

- 새로운 사회문화의 트렌드를 포착하면서 창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꾸준한 지원과 방문객 유치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
 - 하지만 현재까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전략,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장소 연구는 부족한 실정
- 도시 발전과 재생의 대안으로서 골목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배경에서 장소 중심의 관점으로 본 연구를 수행

II 연구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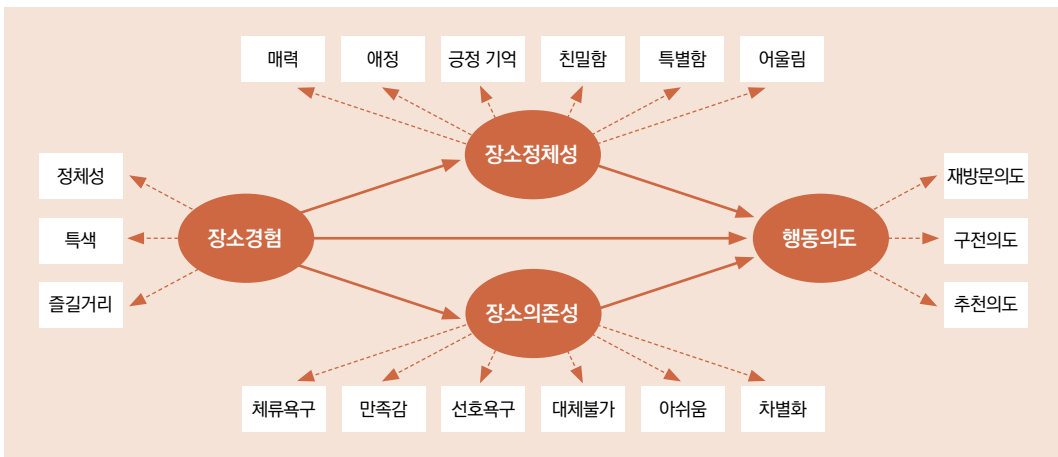
골목상권 육성 관련 정책의 검토

- 지난 20여 년 동안 상권 활성화 정책을 지속하여 추진해온 결과, 주체인 소상공인의 경영지원, 공동체의 조직화 및 역량 강화, 인프라 개선 등의 지원정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
- 최근에는 골목상권에 초점을 맞추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지역별 특화자원에 기반한 로컬브랜딩 강화로 정책이 확대되고 구체화되는 경향을 나타냄

골목상권 사례분석

- 골목상권의 사례지역에 대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계해 이를 분석하여 검증
 - 사례지역으로는 대표적인 핫플레이스로서, 강릉시 명주동, 경주시 황남동 등 2개의 상권을 선정
 - 이들 지역에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의미 있는 장소의 경험’, ‘장소정체성’, ‘장소의존성’, ‘행동의도’ 등에 대해 측정변수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 * 의미 있는 장소 : ①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장소, ② 흥미로운 작은 가게들의 특색을 즐길 수 있는 장소, ③ 골목길 사이로 놀거리, 먹거리,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한 장소

| 그림 |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



- 실증분석 결과, 의미 있는 장소를 경험할수록 장소정체성과 장소의존성이 높아지고, 장소의존성이 높을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냄
 - 어떤 사람에게 장소의존성이 높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장소보다 그 장소에 대해 더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

- 장소경험은 행동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매개변수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나타냄
- 장소경험이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음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로컬브랜딩 계획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 지역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장소의 특성을 인식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로컬브랜드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 주민을 중심으로 정책 관계자와 상인조직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지역의 문화 자원을 발굴하는 데 동참하며, 이러한 지역자원이 일정한 브랜드 가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골목상권의 조성

- 그동안 골목상권의 고유한 지역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은 로컬브랜드 개발에 필수적인 장소성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었고, 임대료 상승 및 급격한 상업화와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상권이 힘없이 몰락하는 원인으로 작용
- 지역 고유의 장소성을 발굴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구하고자 하는 장소 콘셉트의 기본방향과 합의점의 도출이 필요

지속가능한 골목산업 생태계의 구축

- 골목상권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는 지속적인 아이디어 교류와 협력이 이뤄질 네트워크 구축에 힘쓸 필요가 있음
- 상인조직을 비롯한 골목상권 커뮤니티는 장소 내부로부터 지속적인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체계를 갖춰야 함
- 골목의 문화·경제·사회적 생태계는 로컬에 관심을 가진 지역 인재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장소 경쟁력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

1-9

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주제어 재난·안전관리

연구책임 윤소연 · 연구진 김민영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신종·대형 재난의 발생에 따라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필요성 증가

- 기후변화의 가속화 및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신종·대형 재난·안전사고의 발생 증가
 -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현장대응에 혼선과 기능 공백 문제 발생
 - 개별 재난에 대응하기보다는 지역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재난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재난의 복합화·대형화를 막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대두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관리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조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재난·안전관리의 직접적인 주체이자 재난 현장에 가장 근접한 행정조직으로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현장 수요에 민첩하게 대처 가능
 - 현행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중앙정부 중심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한계 존재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가 갖는 문제점·한계점에 대한 현행화 필요
 - 다양한 시점과 내용으로 파편화되어 있는 선행연구를 종합·정리하고, 이를 현행화하여 지역 주도의 재난·안전관리 이행을 위한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 문제점·한계점 파악 필요
- 지역 주도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지역 중심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작동되기 위한 다양한 측면의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II 연구의 주요 내용

지역 주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재난·안전관리 개념 및 국가-지자체 역할 정립
 - 재난·안전관리 관련 유사 용어 비교 및 개념적 정의
 - 국내 재난·안전 관련 법령 및 조직 변천, 재난·안전관리체계 특징, 국가-지방자치단체 역할·권한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 재난·안전관리의 의의와 방향 제시
-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지역 주도 재난·안전관리 한계점 분석
 -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4가지 부문(①법령·규정, ②조직·인력, ③예산·자원, ④정보관리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 및 한계점 도출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 현황 분석

- 부문별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현황 조사·분석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4가지 부문(①법령·규정, ②조직·인력, ③예산·자원, ④정보관리 및 거버넌스)에 대하여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 현황 조사·분석
 - 선행연구 검토 결과와 현황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문제점 현행화 및 시사점 제시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증분석

- 지역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수행 및 시사점 도출
 -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수준 및 우선순위에 관한 인식조사, 주체별 재난·안전관리 역량·전문성 평가,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 운영의 한계점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지역(기초·광역)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수행
 -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지역 재난·안전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증분석

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제시

- 지역 주도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접근 방향 제시
 - 법적·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지역 주도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향 제시
- 지역 주도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및 방안 제시

- 지역 재난·안전관리 이행을 위한 권한 및 위상 확보, 재난·안전관리 인력의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세부 개선방안 제시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역 주도의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 재난·안전관리 실현에 기여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지역의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작동되기 어려운 원인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우수과제

1-10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주제어 인구감소 | 지역발전

연구책임 이원도 • 연구진 유수동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구감소시대 구조적 위험 대응의 필요성

- 총인구 감소와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양극화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 심화
 - 인구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른 구조적 변화와 함께 (지역) 정책과 밀접한 지역 간 인구이동 행태가 반영되는 지표이며, 대안적 인구기반(alternative population base)과 같이 모집단(total population)이 아닌 관심 인구집단 혹은 특정 지역 선택과 이에 적합한 측정방법 및 방식에 따라 그 규모와 특성은 다르게 나타남
 -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행안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재정적 특례를 제공하여 지자체 주도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방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또한, 인구감소지역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인구를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였고, 7개 시범지역 산정(23년도)을 거쳐 전체 인구감소지역(24년도)의 월별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임
 - (거주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과 생활반경이 중첩되는 인접 지자체와의 공동 지역활력 증진 목표(예: 생활인구 확대) 달성을 위해, 지역 간 연계협력 과제인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설정이 가능하며, 이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II 연구의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협력에 기반한 생활권 설정(안)

- 지역 간 연계성 및 상호작용 정도를 고려한 생활권 분류
 -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의 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론적 개념정립과 산정에 필요한 지침은 구체적이지 않음
 - 이에 본 연구에선 “인구감소지역의 주민 생활편의 증진 등을 위한 권역”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기본적인 공간 단위로서, 일상생활을 위한 기초 인프라, 일자리, 주거, 교육, 의료, 환경, 복지, 문화, 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영위하여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범위”로 사전적 정의를 제안하였음
 -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설정 목표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활력을 높일 수 있는 권역설정을 가능케 함
 - 또한, 이를 위해선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은 사회·경제적 기능의 유사성과 함께 공간적 접근성, 권역 내 지역 특성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권 분류
 - 인구감소지역이 맞이하고 있는 다양한 인구감소 위기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개별적인 대응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설정은 인접한 지자체 간 자율적인 연대를 통한 정책목표 공유와 구체적인 이행안 마련에 기초한 연계·협력이 요구됨
 - 본 연구에선 지역 간 연계·협력 극대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인접한 지자체 간 연계성 및 상호작용의 정도를 다양한 지역 간 흐름(flow) 빅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광역과 기초생활권 체계로 분류하였음
 - 구체적으로, 지리적 인접성 및 시계열적 연속성을 반영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새롭게 작성하여 군집 내 동질성과 군집 간 이질성을 최대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듈성(Modularity)을 기반으로 생활권을 분류하였음
 - 공간적으로 인접한 지자체와 시계열적 연속성을 고려한 군집탐색을 위해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세부 목표(예: 정주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달성에 부합하는 빅데이터를 선택, 기준점 형태로 재구축하여 활용하였음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협력에 기반한 생활권 설정(안)

• 빅데이터 기반 광역, 기초생활권 분류결과

- 통근통학 통행량 기반 생활권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기존 광역시도 행정경계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광역시의 중심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반면에 유동인구 유입량과 신용카드 거래량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권 분류에선 행정경계와 조금 더 불일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거점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시군도 확인하였음
-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는 ① 같은 광역생활권 내 대도시권과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해 배후지역으로서 상향 평준화를 위한 지역발전 정책에 주력하거나, ② 주변 배후지역과의 기능적 연계 및 주요 시설 재배치를 통해 독자적인 기초생활권역으로 발전하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현재까지 인구감소지역 생활권 설정을 통한 지역 간 연계협력 사례가 없음. 이는 인구감소지역 생활권의 모호한 개념과 미흡한 지방분권 수준 그리고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과 특례 조항에 대한 부재로 판단됨
- 이에 본 연구에선 지역 간 연계성과 상호작용의 정도를 고려한 생활권 설정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 활력 제고가 가능한 시책을 제언하였고, 단기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방문자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특례를 제안
- 특히 실질적 권한 부여, 지방분권과 인구감소지역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특례부여가 중요함을 시사하였음

 우수과제

1-11

해상교량 개통으로 인한 섬지역 생활환경 변화 연구



주제어 인구감소 | 섬지역 환경변화 | 지역발전

연구책임 김지훈 • 연구진 김상기, 김성규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해상교량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한계점 대두

- 해상교량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통행수단(선박→차량) 변화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 등 도로사업 관점에서의 분석 방식을 준용하고 있음
- 해상교량이 가지는 높은 비용적 특성, 통행량(인구)이 많지 않은 지역적 특성과 결합되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함

해상교량의 다양한 건립 효과에 대한 기초연구 필요

- 해상교량의 건립은 통행시간 또는 혼잡의 절감 외에도 통행 시간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기본적인 통행권을 제공하며, 섬지역의 인구·산업 구조 등 다양한 환경요인의 변화를 유발함
- 이에 해상교량 건설 전/후 비교를 통해 해당 섬지역의 인구, 산업구조, 토지이용, 통행, 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 변화를 확인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해상교량으로 인한 섬지역 변화 분석

- 사회경제지표 분석
 - 해상교량 건립 이후 섬 지역의 인구변화를 분석한 결과 해상교량의 건립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치나, 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연령대별 인구이동 양상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고연령층의 유입을 가속화하여 고령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유사하게 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을 보이며, 산업구조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함
- 대체로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업종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산업구조의 영향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통행분포 변화분석**

- 지역 간 통행비율을 검토한 결과 해상교량의 건립이 섬 지역의 통행 영향권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존 선박을 이용함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던 것과 달리 해상교량 건립 이후 통행 시간대가 다양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통행량 처리를 위한 용량의 증가와 통행시간 선택의 자율성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효과는 주중보다 주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 간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생활 및 관광기반시설 변화 분석**

- 건축물 유형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음식점, 소매점과 같은 서비스업종을 포함하는 상업시설의 변화와 숙박시설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료서비스업종이나 의료시설의 증가는 관측되지 않음
- 결론적으로 해상교량의 건립은 섬 지역의 토지이용 변화에 영향이 있으나, 섬 주민의 정주여건 보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이용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변화 분석**

- 연륙화된 섬과 그렇지 않은 섬 간의 세금이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집단이며, 세금의 평균 역시 연륙화된 섬이 높은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연륙화에 따른 소득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섬지역 주민 설문조사

• **섬 생활 및 생활기반시설 관련 만족도**

- 섬 생활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교통불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통불편은 이동성보다는 통행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 인한 불편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해상교량의 건립 이후 섬 주민들의 통행횟수의 증가 외에도 통행시간대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해상교량 건립 이후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의 증가를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섬 생활의 불편요인 중 하나인 의료시설의 변화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섬의 정주여건보다는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소득 및 교통부 문 변화
 - 해상교량의 건립이 섬 지역 주민들의 소득변화에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관광산업 또는 어업 등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만 해당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해상교량으로 인한 섬주민의 생활변화를 고려한 방법론 개선 필요

- 해상교량으로 인한 섬 지역의 소득과 재산가치 증가
- 통행 횟수 증가 및 통행의 자율성 증대

지속적인 섬 지역 통계자료 축적을 통한 연구 필요

- 섬 지역은 자료수집의 한계로 많은 분석이 어려운 실정
- 지속적인 섬 지역 통계를 축적하고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1-1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개선방안 연구 : WTP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주제어 조건부가치측정법(CVM) | 지방재정투자사업 | WTP 영향요인

연구책임 송지영 · 연구진 이민기, 정연백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LIMAC CVM 가이드라인(지침) 마련의 필요성 증대

- LIMAC CVM 가이드라인(지침)의 부재로 인한 타당성조사의 일관성 확보 한계
 - 현재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CVM 적용 시 분석의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함에 따라 분석과정 및 결과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CVM 적용상의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와 해결방안 모색 필요
 - CVM 적용 전 과정(설문조사 단계부터 WTP 추정 단계까지)에 걸쳐 다양한 쟁점사항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해당 쟁점사항들에 대한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됨

CVM 추정 및 분석과정, 특히 WTP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의 필요성 증대

- WTP 추정과정 및 분석모형에 대한 기초연구의 필요성
 - LIMAC에서 기수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CVM을 수행하는 방법론(특히 설문조사)에 초점을 두어 따라 설문 이후 그 결과를 모형화하여 최종 목적인 적정 WTP를 도출하는 분석과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CVM 관련 쟁점사항들이 WT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필요
 - CVM이 적용된 LIMAC 타당성조사과제의 DB를 활용, 최근 제기되고 있는 관련 쟁점사항들이 WTP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함으로써 CVM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구축이 필요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CVM 관련 이론적 고찰 및 DB구축

- CVM 관련 이론 고찰
 - CVM이 최초 도입된 배경부터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 및 지침이 정립되기까지의 여러 분석상의 전제, 기법 등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여 1)도입초기, 2)과도기, 3)현재의 방식까지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불거부자 처리·분석모형·최종지불의사 금액 처리 방법론을 분석하여 정리함
- CVM 적용 조사사업의 DB구축(LIMAC & PIMAC)
 - 그간 LIMAC 수행한 CVM을 적용한 타당성조사와 PIMAC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DB화하고, 개별사례 및 사례 간 비교분석을 수행하여 첫째, 설문시기에 따른 차이, 둘째, 영향권에 대한 차이, 셋째, 사용가치 추정에 있어 CVM 방법론 활용사례 분석을 통해 실증모형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변수화를 위한 쟁점을 도출함
 - 또한 사업유형, 설문부수, 지불수단, 오차항 분포, 분석모형 등 CVM 쟁점별 조사기관 간 차이점을 정리 분석하여 지방재정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LIMAC CVM 가이드라인 연구 필요성의 논거를 구축함

CVM의 쟁점사항 및 영향요인 도출

- CVM 쟁점사항
 -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 CVM 적용 시 그리고 해당 방법론을 이용하여 WTP를 추정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또는 발생 가능한 쟁점 및 중요 고려요인들을 CVM의 적용단계별로 구분하여 검토함
 - 단계별 쟁점사항에 대해 WTP에 미치는 영향력의 검증이 필요한 쟁점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쟁점을 구분·제시함
- WTP 영향요인 도출
 - 구축된 DB 및 쟁점사항을 바탕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지불의사금액(WT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크게 네 개의 특성(사업, 설문, 모형, 응답자 특성)을 구분하여 총 27개의 WTP 영향요인을 추출·제시함

WTP 영향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 메타분석을 활용한 WTP 영향요인 식별
 - 분석결과, ①사업규모, ②사업대상 지역, ③사업부문(공원, 운동장, 건축물, 생태하천 복원,

상수관로 등), ④최대제시금액, ⑤설문조사 실시 계절, ⑥설문조사기관, ⑦지불대상이 개인인지 가구인지의 여부, ⑧CVM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는 가치가 총가치인지 아니면 비사용가치만인지의 여부 등이 WTP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CVM 적용 관련 쟁점별 개선사항
 - LIMAC에서 수행한 CVM을 통한 WTP 추정치는 PIMAC보다 더 크고 지불거부율은 낮음
 - LIMAC의 경우 총편익화하는 과정에서 높은 WTP와 낮은 지불거부율에도 불구하고 곱하여지는 영향권 내의 가구수가 전국을 영향권으로 하는 PIMAC보다 크게 작기 때문에 B/C가 낮게 도출됨
 - 따라서 CVM의 적정 영향권 설정이 중요함(2024년도 연구주제)
 - WTP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확인된 최대제시금액의 설정, 설문조사업체의 선정에 주의가 필요함
 - CVM의 지불대상, 가치추정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설문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설문조사 시행 중에도 응답자에게 해당 사항들을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CVM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서의 활용성

- CVM 분석과정에 대한 개선 및 고도화의 단초 마련
 - 여러가지 제약 하에서도 지방재정투자사업의 WTP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CVM의 분석과정(특히 모형)에 대한 개선 및 고도화의 단초를 마련함
- 분석결과의 범용성 확보
 - LIMAC과 PIMAC의 CVM 적용 대상 사업들에 대한 DB를 확보함과 동시에 해당 DB를 활용하여 도출된 연구결과로서 범용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실증분석의 한계 및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추가연구 필요

- 메타분석의 한계
 - 제한된 관측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이 수행됨에 따라 당초 관심을 두었던 주요 변수들의 유의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CVM 적용 타당성조사과제의 지속적인 DB화가 필요함)
- 가이드라인 확립을 위한 추가연구 필요
 - CVM 관련 가이드라인은 단기간이 아닌 연차별 명확한 과제의 목표를 기초로 다양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후속과제로 CVM 적정 영향권 설정 및 계량분석 등을 제안함)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자치분권제도

- 1) 온천도시 유형화 제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59
- 전대욱, 최인수
- 2)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 특별자치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62
- 주희진, 고경훈, 정기용

지방행정혁신

- 3) 이북5도위원회 실질적인 역할·기능 강화 방안 연구 66
- 김수동, 이재용
- 4) 재난·안전 중심의 읍·면·동 기능개선 모델 방안 연구 69
- 유자영, 최지민, 원혜연
- 5)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타당성 분석 71
- 이경은, 유자영, 황선영

지방재정경제

- 6)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74
- 김성주, 김진
- 7)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정정책 결정을 위한 재정지표 및 예측모형 개발 76
-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 김성주, 전영준
- 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및 효율화 방안 78
- 홍근석, 유보람

지역균형발전

- 9)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81
- 김민영, 이소영
- 10)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84
- 이원도, 이소영, 홍근석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11) 자체타당성 검토 개선 연구 : 운영수지 분석을 중심으로 86
- 송지영, 김성규, 이민기, 조현민, 이정희

2-1 온천도시 유형화 제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경제 | 지속가능발전

연구책임 전대욱 • 연구진 최인수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온천법」에 규정된 온천도시 지정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선 기초연구

- 온천도시 지정을 통한 온천지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행정안전부는 지역 특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온천도시 지정사업을 시행
- 본격적인 지정사업에 앞선 온천도시의 발전모델과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필요
 - 온천자원이 우수한 온천지구의 쇠락에 따라, 온천자원을 활용한 기술·신산업의 촉진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 및 주요 추진모델의 점검을 위한 연구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통해 온천도시 발전모델로서의 주요 유형을 연구하고, 정부 및 지자체를 포함한 거버넌스 체계의 강화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온천도시에 관한 개념·이론적 접근 및 법제·정책 현황 리뷰

- 온천도시의 개념·이론적 접근
 - 온천도시는 온천이 가진 잠재력과 지역자원을 결합한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 획일화된 온천지구에 차별요소를 특화(브랜드화)하고 의료와 산업을 융·복합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도시를 의미하며, 지역 특화자원인 온천자원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균형발전에 적합

• 온천도시 관련 법제·정책현황 분석

- 「온천법」 제9조의 2에 따라 지난 '21.6월부터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2.2월 제2차 온천발전종합계획('23-'32)의 수립을 통해 온천도시 지정사업의 추진계획 반영
- 온천자원의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지역축제·온천산업화 등에 대한 추진의지·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온천도시 지정사업 및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온천도시 국내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온천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주요 해외도시 사례 분석

- 온천문화가 발전하고 온천도시가 활성화된 해외 성공사례에 대한 지역 특성 및 현황, 온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온천도시 발전전략, 성공요인 및 특징 등을 분석
- 일본 유명 온천도시로 알려진 유후인(由布市), 벳푸시(別府市), 쿠로카와(黒川) 및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럽의 온천도시(Great Spa Town) 등의 분석

• 국내 유명 온천관광지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한 온천도시 발전모델 시사점 도출

- 국내 유명 온천관광지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역사·문화자원, 온천자원, 의료·산업·관광 등 부문별 특성화 요인, 온천지구 및 도시 발전전략 등을 분석
- 온천도시 시범사업지인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및 보양온천·온천관광지구 지정사례인 강원 속초시, 경북 울진군 및 경남 창녕군 등을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 및 발전전략 도출

온천도시 특성화 요인 및 유형화 방안 연구

•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 등 메타분석에 의한 온천도시 특성화 요인 도출

- 온천수를 활용·연계한 의료, 산업, 문화·체육, 관광, 기타 서비스업의 활성화 등 핵심 성공요인 확보를 위한 고유성 확립, 특화상품의 개발, 문화·역사·관광자원의 산업화 등 특성요인 제시

• 온천도시 특성화 요인에 기반한 정형화된 온천도시의 발전유형 도출

- [모형1] 온천+관광도시 모형: 온천역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정 매니아층을 타깃으로 맞춤형 온천관광 프로그램 개발·제공, 비즈니스 모임·행사 등 MICE 산업과 연계전략 등
- [모형2] 온천+메디컬·건강도시 모형: 온천수 치료기관 및 보양온천 활성화, 의료적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질환 치유 프로그램 특화,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연계전략 등
- [모형3] 온천+산업도시 모형: 온천수 코스메틱 개발, 온천 전문 연구기관 설립 및 전문인력 양성, 온천시설·제품·서비스 등 표준화 및 안전성 확보, 친환경 온천 열에너지 활용전략 등

온천도시 지정사업 추진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 온천도시 추진의 기본원칙·방향 제시 및 후보도시 분석
 - 온천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및 온천문화·관광 활성화, 온천산업 활성화, 온천도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인구감소대응 다부처 사업연계 등
 - 전국 온천자원의 분포 현황에 기반하여 온천자원이 우수하고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온천도시 후보지역 15개소에 대한 특성분석 및 온천도시 발전모델을 위한 정책제언 제시
- 온천도시 거버넌스 구축방안 및 공공부문의 역할 정립
 - 온천도시 활성화를 위한 이해당사자 역할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추진 방안, 공공재로서의 온천자원 활용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추진방안, 자치단체 행·재정적 지원방안 정리
 - 온천 및 온천도시 활성화 기반조성, 관련 법제 및 규제 정비방안, 행안부·지자체의 온천도시 활성화 지원체계 마련, 온천도시 앵커시설 및 인프라 구축방안 등 제언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온천도시 지정사업을 위한 온천도시 발전모델 및 유형별 발전전략 제언

- 온천도시 지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자료구축 및 세부 추진방안 도출 및 제언
 - 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사업자, 전문가 및 온천관계자 등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이해당사자별 주요 추진·점검사항 제언
 - 「온천법」 및 시행령, 온천도시 지정사업 시행지침 등의 작성·개선방안 도출 및 제시 등

2-2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 특별자치시·도,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제어 맞춤형 자치모델 | 특별자치시·도 | 진단기준

연구책임 주희진 · 연구진 고경훈, 정기용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일반자치와는 다른 다양한 방식의 ‘특별자치’ 도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내용 미흡

- 「지방자치법」은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별자치”의 개념을 반영한 제도를 명시
- 그러나 “특별자치”가 “일반자치”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기준과 논의가 미흡한 실정

고도화된 분권 실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의 진단 및 미래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 특별자치시·도 설치에 대한 논의는 특별자치시·도의 설치에 따른 추가적인 특례를 통한 지역의 당면 현안 해결이 주목적으로 다뤄지고 있음
-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역적 수요 증대에 따라 특별자치시·도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보다 정교한 논의 필요
 - 특별자치시·도의 무분별한 설치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자치시·도의 설치와 운영을 진단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II 연구의 주요 내용

특별자치시·도 진단기준 개발

- 현재 특별자치시·도 모델은 중앙으로부터의 권한 부여로서 자치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지역 주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성 제고 필요

- 제도적 차원은 당위성(관할구역 특수성)과 체계성(행정계층 특수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운영적 차원은 자치성(기능배분 특수성)과 자율성(주민참여 특수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표 | 특별자치시·도의 진단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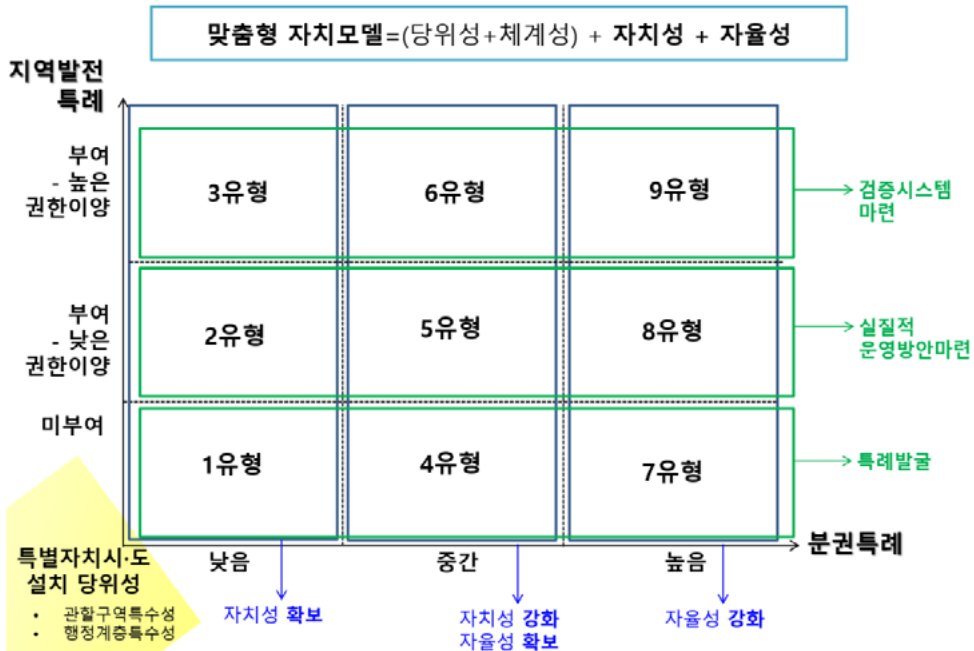
차원		행정체제의 특수성		개념	특수성 판단기준
제도적 차원	당위성	관할 구역의 특수성	지리적 특수성	타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지리적·물리적 특성의 존재 여부	• 도서지역, 접경지역 등
			지위적 특수성	타 지역과 구분되는 지역의 위상 및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지역의 당면과제 여부	• 특별자치시·도 설치 목적 및 당위성
	체계성	행정 계층의 특수성	행정계층 다양성	해당 지역의 상황과 특색에 맞는 행정계층의 다양화	• 기존 행정계층의 변화 여부 • 지역 특성을 고려한 행정계층의 선택 여부
운영적 차원	자치성	기능 배분의 특수성	자치분권 특수성	타 지역과는 구분되는 행·재정상의 자치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	• 자치입법권의 부여 여부 • 자치재정권의 부여 여부 • 자치조직권의 부여 여부 • 지방의회에 대한 특례부여 여부
운영적 차원	자치성	기능 배분의 특수성	지역발전 특수성	특별자치시·도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별도의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 지역발전특례의 부여 여부 • 권한이양 여부 및 확대가능 여부 (포괄위임)개별위임)위임 없음) • 특행기관 이관 여부
	자율성	주민 참여 특수성	주민(지역) 결정 특수성	특별자치시·도의 형태(기관구성 등), 운영방식(특례산업 발굴 등) 등 전반적 사항을 주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특별자치시·도 형태의 주민결정 가능 여부 • 특별자치시·도 운영 방식의 주민결정 가능 여부

특별자치시·도의 맞춤형 자치모델 제안

- 맞춤형 자치모델은 차등적 분권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획일적 기준의 적용보다는 보다 세분화된 기준의 적용이 필요
 -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을 토대로 부권특례의 부여 수준과 지역발전특례의 부여 여부 및 수준 등을 기준으로 9가지 유형 제시
 -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권과 결정권의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구분 가능

- 특별자치시·도 제도의 성숙에 따라 하향식 방식의 제도 운영에서 자치분권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상향식 방식의 제도 운영으로 방식의 전환 필요
- 특별자치시·도의 맞춤형 자치모델은 분권특례와 지역발전특례의 부여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필요
 - 분권특례 부여 수준에 따라 자치성 확보 위주의 전략에서 점차 자율성 확보 및 강화 위주의 전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지역발전특례 부여 수준에 따라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특례 발굴부터 특례의 실질적 운영방안 모색 등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림 | 특별자치시·도 맞춤형 자치모델(안)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범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도의 활용

- 기초 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시범 실시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에 광역·기초권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러 이해관계의

갈등, 운영방식 등에 대한 미흡으로 여전히 '논의 유보' 상태

-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단일 특별자치시·도 내의 기초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획기적 지원 제공 등을 통하여 시범 설치·운영 독려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우선 고려지역으로 검토

- 특별자치시·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토대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특례산업 등을 발굴·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새로운 지방시대에서는 지자체 수요,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모델을 기반으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지자체 등 및 새로운 자치체계를 활용하여 단순 이관이 아닌 위임, 위탁, 협업체계 도입 등 특행기관 기능정비 개념 및 방식을 확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교육자치 시범운영

-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 이해관계자 간의 관점 차이로 인하여 획일적인 적용이 불가능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에 대하여 특별자치시·도를 다양한 방식의 일반자치-교육자치 관계 모델을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맞춤형 자치모델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성과평가체계의 마련

- 본 연구는 특별자치시·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진단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수준 진단을 실시함
 - 다만, 본 연구는 특별법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발전단계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진단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해당 특별자치시·도가 발전단계에 적합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진단기준은 해당 특별자치시·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지향방향 혹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향후 실제 운영과 관련한 성과평가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우수과제

2-3

이북5도위원회 실질적인 역할·기능 강화 방안 연구



주제어 조직관리 | 이북5도위원회

연구책임 김수동 · 연구진 이재용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통일·대북정책의 변화

- 통일·대북정책의 중점 추진과제인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에 대한 내용이 이북5도위원회의 업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이에 기반하여 이북5도위원회는 통일·대북정책의 추진원칙 중 하나인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이북5도 등의 행정 및 정책환경 변화

- 고령화, 북한이탈주민 증가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이북도민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고,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효율적이고 적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에 따른 혁신 및 정체성 확립 요구

- 이북5도위원회는 조사연구, 문화재, 특화된 사업 추진 등 통일과 관련된 활동 및 정책을 수행할 여건이 구조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이처럼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이후, 이북5도위원회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II 연구의 주요 내용

이북5도 등의 업무 현황 조사

- 이북5도 등의 주요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인력 등의 재원이 부족하여 실제로 원활하게 기능하는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통일연구원, 국립문화재연구원 등 유사 기관의 주요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이북5도 등의 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북5도 등의 역할 및 기능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실향민의 고령화, 남북관계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이북5도 등의 기능 강화 및 재정립 방향 도출을 위한 면담조사

- 이북5도 등의 기능 강화 및 재정립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 결과, 이북5도 후세대에 대한 통일 비전 교육 및 육성, 이북5도위원회의 정서적·문화적 업무 강화, 이북5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이북5도 문화 연구 기능 확보,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리 교육 수행, 연구기관·협력 활성화, 문화재 및 조사연구 업무 수행체계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이북5도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기능 강화 및 재설계 방안

- 통일 교육 및 통일 인식 확산, 이북도민사회·정책 및 행정체제 조사·연구, 이북5도 문화재 관리·연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이북5도위원회의 업무 지속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급을 상향시키고, 관련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홍보·행사, 지원·관리, 교육·훈련, 조사·연구와 같은 사무기능 또는 이북도민 지원, 이북도민단체 관리, 통일 대비 교육·조사·연구, 이북5도 무형문화재와 같은 사무내용을 고려한 조직구조 개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이북5도 등과 이북5도위원회의 관계 재정립을 통하여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지휘 및 총괄 주체를 위원장 또는 사무국으로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 이북5도위원회의 업무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이북5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정적인 자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주요 업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이북5도위원회의 역할·기능 강화 및 재설계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임

기대효과

-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하여 이북5도위원회 조직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북5도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고려한 조직 개선을 통하여 이북5도위원회의 사무 지속성 확보 및 정체성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북5도위원회의 사무 및 활동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북5도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활동을 활용하여 통일문화 확산 및 인도주의적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4

재난·안전 중심의 읍·면·동 기능개선 모델 방안 연구



주제어 지방자치 | 지방행정일반

연구책임 유자영 • 연구진 최지민, 원혜연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정부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필요성

- 하향식(Top-Down) 관리체계는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한계 노정
 - 기초 자치단체 및 읍·면·동 최일선의 기능 강화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개편종합대책」 실현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읍·면·동 재난안전기능강화 모델 수립

- 시·군·구의 재난안전 환경을 구분하여 지역 맞춤형 읍·면·동 재난안전기능강화 모델 도출
 - 공공부문 인력동결을 전제로 본청 및 읍·면·동 수행기능 파악, 기능 강화 및 신설로 인한 타 기능의 축소에 근거하여 재난안전 인력확보 방안 검토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유형화

- 지역안전지수를 통한 재난안전수요 공급 파악
 - 지역안전지수의 등급은 동일 유형의 자치단체 간 비교가 가능하므로 시·군·구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자치단체의 유형화를 시도함
 - 지역안전지수에 근거한 1차 지역 유형화와 2차 재난안전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심층 분석지역을 시·군·구별 3개씩 추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면담조사를 수행함

지역맞춤형 읍·면·동 재난안전기능 강화전략 마련

- 재난예방 및 대비 단계의 다양한 정책수단 검토 및 읍·면·동별 적합한 모델 탐색
 - 지역 재난안전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종류, 참여 수준과 방식 등이 지역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제안되어야 기존의 중앙에 의한 획일적 개편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 재난안전 수요와 공급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안전 전담 기구인력 신설 모델(도시형 I), 신규 업무분장형(도시형 II, 농촌형 I), 민간자원 활용 모형(도시형 III, 농촌형 II) 등을 제안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시점별 차별적 전략의 필요성

- 3가지 모델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시점별 전략 전환
 - 현재 공공부문 인력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난안전 기능 강화가 시급하더라도 모든 도시형 하부행정기관에 재난안전전담조직 신설은 현실적이지 아니기에 조직신설형을 장기적 대안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신규업무분장형과 민간자원활용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제도적 지원 방안

- 현장 대응 수요가 높은 복지와 재난안전 중심의 읍·면·동 기능 개편
 - 시·군·구와 책임과 권한의 적절한 재배분을 전제로 한 읍·면·동의 기능개편이 진행되어야 함
- 재난안전 주체의 권한과 책임 규정
 - 재난안전 주체의 적극 행정을 위한 결과 면책 조항의 현실화가 요구됨
 - 민간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음
- 인력의 충원과 관리 방안
 - 1차적으로 방재직, 일반행정직, 복지직 구분 없이 재난안전 업무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우수한 공무원을 유입시키고 젊은 공무원들의 재난안전부서 기피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와 성과평가기제를 활용해야 함

 우수과제

2-5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타당성 분석



주제어 주민등록

연구책임 이경은 • 연구진 유자영, 황선영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정책 시행 전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필요

- 유효기간이 도입되지 않은 국가신분증 중 유효기간을 도입할 경우 그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만 17세 이상의 국민 전체가 의무적으로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임
 - 행정안전부는 2023년 7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공표하였으며, 위 예규에서는 유효기간을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신분증에 대해 운영기관의 장이 유효기간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 예규 제7조 제3항)
-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 도입, 즉 주민등록증 갱신 제도 도입이 이슈화된 이후 주민등록증 갱신의 필요성에 대해 지지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 시행 전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의 주요 내용

주민등록증 본인식별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설계

-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정책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국민 불편 및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감소시키는 것임
 - 주민등록증에 대한 유효기간 도입은 이와 같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임

- 본 연구에서는 앞서 수행한 주민등록증 일반현황 분석, 주요 쟁점 및 정책 동향 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정책 문제·목표·수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기능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도출할 수 있는 총 5가지의 정책 대안을 개발함
 - ①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통합 운영, ②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제도 개선,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 연계 갱신, ④ 2002년 2월 이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 ⑤ 실물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관련 세부 대안 설계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을 도입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입 방식은 다양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앞선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세분화하여 개발함
 - ① 일괄 적용 방식, ②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 방식, ③ 유관 신분증 소지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방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타당성 분석

-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개발한 정책대안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의 타당성을 2단계에 걸쳐 분석함
 - 1단계는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인 ‘본인식별 기능 강화’를 달성할 수 있는 총 5개의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장단점 및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여,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의 타당성을 ① 주민등록증 본인식별 기능 강화, ② 실행 용이성, ③ 국민 선택권 보장, ④ 국민 불편 최소화, ⑤ 사회적 비용 최소화, ⑥ 주민등록증 관련 업무량 증가 최소화 측면에서 평가함
 - 2단계는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을 전제로 총 3개의 세부 정책대안을 개발한 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대안별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3개 세부 정책대안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여 어떤 세부 대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지 평가함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의 타당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타당성 분석 결과, 평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 연계 갱신(1순위)’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도출되었으며,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본인식별 기능 강화’에는 1순위 대안으로 평가되었으나, 다른 모든 기준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받아 종합적으로 최하위의 정책대안으로 평가되었음
 - 2단계 타당성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연령에 따른 차등적용 방식(13명, 65.0%)’이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시 가장 바람직한 세부 정책대안이라고 응답하였음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비용 분석

-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과 관련된 3가지 세부 정책 대안에 대해 비용 추계를 실시한 결과, 유효기간 도입 첫 해, 일괄 적용 방식과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 방식은 약 4조 7,555억 원, 유관 신분증 소지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방식은 약 1조 1,371억 원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이 중에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국민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제외할 경우, 일괄 적용 방식과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 방식에서 정부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약 1조 207억 원, 유관 신분증 소지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방식에서 정부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약 2,469억 원으로 추산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들에 대한 고려 필요

-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도입하는 것만이 주민등록증 본인식별 기능의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이 아니며,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충분히 검토된 가운데 유효기간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이 6가지 평가 기준 중 5가지 기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정책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국민 의견 수렴에 대한 고려 필요

- 비용 추계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도입했을 때 사회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규모는 최소 1조 원 이상(정부부담 비용 최소 2천4백억 원 이상)으로 추산되므로, 제도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며, 국민에게 의무와 비용을 지우는 정책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만과 정책저항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임

2-6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주제어 지방교육재정 | RISE | 유보통합

연구책임 김성주 • 연구진 김진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25년 이후 지방교육재정을 둘러싼 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대응

- 2025년 이후 취학 전 유아 교육과 보육이 통합되어 기존의 지자체 사무였던 보육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될 것이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시행될 예정임
 - 이처럼 생애주기별로 대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된 향후 수요를 주시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향후 지자체 보육사업과 고등·평생교육의 성공적 시행방안 모색 필요

- 이상의 변화상황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추가 재정수요를 분석한 후 향후 지자체의 보육사업과 고등·평생교육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운영의 합리화 방안 제시가 필요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생애주기별 교육재정 분석

- 유·초·중등 교육재정은 여러 선행연구와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의 지적, 언론보도, 잉여금 규모 등으로 살펴볼 때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RISE 시행에 따라 RISE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운영되면 지자체에서의 지방비 매칭비용이 발생될 것이고 이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유보통합, RISE 시행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운영방식 개선방안 제시

- 지방교육세의 사용범위 확대
 - 중앙정부에서 교육세입의 50%를 고등·평생특별회계로 전출하기로 한 바와 같이 지방에서도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출금의 50%를 고등이나 평생교육으로 그 사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교육청으로 법정전출방식 개선
 - 교육청의 세출예산 중 인건비나 인적자원운용, 기관운영비 등 유·초·중등의 기본적인 운영비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지방세 수입의 일정을 전출방식을 수요비례 보조방식으로서의 변화 모색이 필요함
- RISE 사업의 포괄보조 방식 운영 필요
 - RISE 사업이 특정용도 국고보조사업과 같이 사업내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제시를 하게 될 경우 지역-대학 간 협력으로 인재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이라는 모종의 목적달성이 힘들어질 수 있으므로 포괄보조금(block grants) 방식으로 하여 유사사업을 블록화하고, 블록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생애주기별 지방교육재정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대응 사전 준비

- 유보통합, RISE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련된 향후 수요를 미리 예의주시할 수 있고 지방재정부담 가중에 따른 대응 가능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성공적 시행 도모

- 지방교육재정 변화 상황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추가 재정수요를 분석한 후 향후 지자체의 보육사업과 고등·평생교육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 운영의 합리화 방안 제시로 지방교육재정 변화의 성공적 안착 가능

2-7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정정책 결정을 위한 재정지표 및 예측모형 개발 -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주제어 데이터 기반 | 가용재원 | 재정예측모형

연구책임 김성주 · 연구진 전영준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단위 정책결정을 위한 지역의 신뢰 높은 데이터 뒷받침 필요

- 지역단위의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지역의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단위 통계자료의 양이 매우 적고, 질적인 부분의 신뢰문제 등 한계점 제기

지자체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가용재원 예측 모형 제시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모든 사업추진의 근간이 되는 지자체별 동원가능 예산인 가용재원의 규모 예측을 위한 지표설정 및 모형화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표를 다양하게 열어놓고 검토 및 발굴, 모형화하여 시스템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

II 연구의 주요 내용

최대 가용재원과 최소 가용재원으로, 가용재원을 범위로 제시하는 산출모형 제시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용재원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당성 높은 가용재원 산정방식의 설정이 요구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대와 최소 가용재원을 제시

- 최대 가용재원 = 총세입 - 필수적 의무지출
 = 총세입 - (행정운영경비+법정·의무적 경비+용도지정 세출)
 -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 법정·의무적 경비: 각종 법정교부금 및 법정전출금, 특정 경상이전 등
 - 세입 관련 용도지정 세출
 : 보조사업비(국비 또는 시·도비 보조금+지방비부담액), 용도지정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별조정교부금 등
- 최소 가용재원 = 총세입 - (필수적 의무지출+실제적 의무지출)
 = 총세입 - (행정운영경비+법정·의무적 경비+용도지정 세출+연례반복 사업비)
 - 연례반복 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 지방보조사업비 등

다양한 재정지표 발굴 및 제시

- (안전 및 재난분야) 재해위험이나 침수예상지구, 산사태 예상지구 정보 등을 제공, 이들에 대해 특별한 관리를 인지토록 함
- (복지분야) 시스템에서 e-호조와 행복e음을 연계하여 각종 한부모 가정 및 수급자 수, 영유아 수 등을 파악토록 하여 한부모가정 정책이나 취약계층사업 계획 수립 등을 지원토록 함
- (지역경제분야) 관광부문에 지자체 내 지역별 관광객 동향, 톨게이트 통과 수, 쓰레기량, 외부인 업종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제공을 바탕으로 즉, 쓰레기량 등으로 월별, 지역별 관광객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관련한 예산과 시책 수립이 가능토록 하는 것임
- (교통분야) 지자체의 공항이나 철도 운영현황 값 지원을 바탕으로 버스 노선이나 도로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 지원을 함
- (재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분야) 실시간 내국세 징수율과 시도세 징수율 정보 등을 제공하여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예측도를 제고시킴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가용재원을 최대~최소 범위로 제시,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따른 규모 예측 가능

- 현재 다양한 제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용재원과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 모두를 정리한 후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따라 가용재원액이 아닌 범위로 예측 가능

차세대 지방재정 정책지원시스템에 탑재 필요성이 높은 재정지표 발굴

- 안전 및 재난, 복지, 지역경제, 교통, 재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지방재정 정책결정시 우선해서 지원해야 하는 재정지표를 분야별로 발굴하여 제시, 시스템에 탑재순위가 높아야 할 재정지표의 예측을 가능토록 함

2-8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주제어 지방재정조정제도 | 재정형평화 | 보통교부세

연구책임 홍근석 · 연구진 유보람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 간 기능 조정 필요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령상 목적, 역할, 배분 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재조정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다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고,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완화를 위해 재정력·재정자주도 등 유사한 지표를 재원 배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제도 간 유사·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합리적 수준의 재정형평화 목표 설정 필요

-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재정형평화 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재정조정제도 기능 재조정 및 재정형평화 목표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체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출하고자 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 지니계수, 타일지수, 대수편차평균, 앳킨슨지수를 활용하여 지방세a(지방소비세 제외)를 기준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 배분 이전과 이후의 불평등지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음

- 먼저 1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별적인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한 후, 지니계수 세입원천 분해 기법을 통해 전체 재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재정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였음
 - 개별적인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에서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국고보조금(차등보조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종합적인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에서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고보조금(차등보조율)은 개별적인 재정형평화 효과는 존재하지만, 다른 지방재정조정제도와 함께 운영될 경우에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다음으로 지니계수 순위변동 분해 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순수한 세입격차 완화효과를 분석하였음
 - 다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조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지방소비세 포함)+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시·군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순수 세입격차 완화효과가 -0.18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보통교부세 법정률 인상 방안

-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보통교부세 조정률을 85%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재정형평화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며, 이때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규모도 함께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함
- 2021년 기준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85%로 인상되기 위해서는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2.12%p 인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통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수준을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중위값의 50% 수준까지 보장하는 보통교부세 개편 방안을 12개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시·군을 분리하여 지방세 수입에 보통교부세를 제외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원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중위값 50% 이하의 단체를 선정하고 시·군에 대해서만 중위값 50%와의 차액을 우선 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시·도와 시·군에 현행 보통교부세 방식으로 배분하는 시나리오 2-6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지니계수 순위변동 효과 분해를 통해 순수 세입격차 완화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2-6의 순수 세입격차 완화효과가 -0.00062(95.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제도 개편

-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필수적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상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재정형평화 기능에 해당하는 재원은 재정형평화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보통교부세 중심의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 추진

-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제시된 것처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 중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재원은 보통교부세이며, 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첫째,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해 2006년 이후 19.24%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22.12%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 둘째,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 수준에서 유지할 경우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2-9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주제어 인구감소 | 지역발전 | 지속가능발전

연구책임 김민영 • 연구진 이소영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시기 도래

-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여 이에 근거해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함
- 인구감소지역을 최초로 지정한 점을 감안해 행정안전부는 2년 동안(2021~2023년) 상황을 분석해 지정을 보완할 계획임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문헌 및 사례조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보완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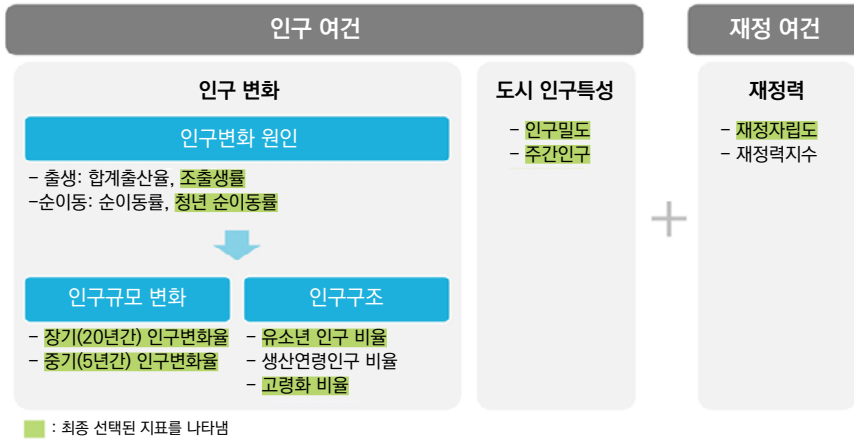
-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둘러싼 비판을 검토함
 - ‘기존 인구 예측 지표와 무차별’, ‘인구감소 관련 지수 난립’, ‘인구감소지수 산출 근거 비공개’, ‘경제적 결정요인, 체류인구 등 비교려’, ‘읍·면·동 단위 분석 필요’, ‘인구감소지역 지정 규모 기준 불명확’, ‘대도시급 지역구 선정’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이러한 비판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는 않음

- 인구감소지수가 종합지수 구축 방법론의 단계별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간한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수가 단계별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함
 - 검토 결과, 이론적 틀 구축 시 하위 구성요소 명확화, 원인 및 결과 지표 중 집중할 영역 선택, 지표 평가 기준 수립 및 이에 근거한 최종 지표 선정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재생잠재력지수 등 유사 지수를 검토함
 -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재생잠재력지수는 하나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 인구 증감을 예측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져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와는 차이가 있음
 - 산업연구원의 K-지방소멸지수의 경우 하위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이론적 틀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 인구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지역을 결정하는 해외사례를 조사함
 - 일본의 ‘과소지역’과 독일의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연방/주정부 공동과제’ 정책을 조사함
 - 향후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도시권 단위에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거나 지원 지역 수를 사전에 정하거나 인구 상한선을 두는 등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타당성 검토 기준 수립 및 평가

- 인구감소지수는 이론적 틀에 기반하고 있으나 하위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 기존 인구감소지수가 기반하고 있는 이론적 틀은 법률적 요건을 만족하며 지수 활용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으나, 이론적 틀의 하위 구성요소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
 - 다음 [그림]과 같이 같이 인구감소지수 이론적 틀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그림 | 인구감소지수의 이론적 틀



- 인구감소지수 구축 시 이론적 틀 안에서 고려할 수 있는 후보 지표를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지표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지표를 검토하는 과정을 명시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내용 타당도, 이해 용이성, 승인통계 여부, 포괄 범위, 지표 작성 주기, 비교 가능성, 중립성 등을 지표 평가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가 적합한지를 검토함
 - 검토 결과, 기준에 고려한 지표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선방안 마련

- 향후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간소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시 현재의 89개보다 축소해서 운영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인구감소지역 선정 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시 인구감소지수를 고려하도록 함

2-10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경제

연구책임 이원도 • 연구진 이소영, 홍근석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개념 도입
 - 총인구 감소, 인구 불균등 문제해결을 위한 관리, 통제와 같은 인구정책에서 지역별로 다른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대안적 인구개념 도입이 필요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인구를 포함하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인구를 포함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도입하여 인구활력 제고 및 지역활성화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23년도에 2분기(4~6월) 7개 시범지역 산정결과가 공표되었으며, 24년도에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 지역으로 확대해 월별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분기별로 공표·제공할 예정임

II 연구의 주요 내용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정책 활용 가능성
 - 수도권 인구과잉-비수도권 인구과소 현상과 같이 사회적 인구이동의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의성 있는 인구지표 작성과 지속적인 지역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작성할 수 있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고도화 과정을 거쳐 체류 및 등록외국인 인구의 인구 변인(예: 성별, 연령대별, 거주지역별)과 체류 특성(예: 숙박일 수, 방문 시간)과 같이 인구감소지역 방문 목적 및 활동 기록을 탐색하여 다양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대안적 인구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개념정립과 정책 적용 가능성 평가가 필요

•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 활용방안 평가

- 2022년도부터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보정수요를 산정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선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재정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이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보통교부세 산정에 생활인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다양한 시나리오(예: 평균, 최댓값, 최솟값, 이상치를 제외한 평균 유동인구)를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 지역별로 수요액 증감이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음

- 다시 말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지역별로 각기 다른 시계열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규모와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발굴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음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제도적 정착 및 정책 활용성 제고를 위해선 ① 광의적 개념인 관계인구를 검토하여, ②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관계의 계단”에 따른 방문-체류-정주인구 유형화와 이를 고려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선 ③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제도적 개선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는 지자체 재원 마련을 위해 관광세와 같이 ① 지자체에 사회적 부담을 가중하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과 함께 ② 국고보조사업과 같은 보조사업 시 가점부여에 활용될 수 있음

• 관계인구 단계별 개념을 도입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 1단계(관심)에선 인구감소지역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인구창출을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방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노력이 필요

- 2단계(탐색)에선 비방문 관계인구 유형(예: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마련과 함께 민간부문으로 안전하게 공유하여 다양한 플랫폼 및 신산업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참여를 끌어내는 노력이 필요

- 3단계(실행)에선 인구감소지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회성 봉사활동을 통해 밀접한 관계를 맺은 관계인구 특성 탐색을 통해 최종적으로 4단계(정착)로의 관계 확장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

2-11 자체타당성 검토 개선 연구 : 운영수지 분석을 중심으로



주제어 자체타당성 검토 | 운영수지 | 지방재정

연구책임 송지영 • 연구진 김성규, 이민기, 조현민, 이정희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자체 자체타당성 검토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
 -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투자심사 단계에서 운영수지 분석이 미흡한 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반려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계획하고 있음
- 자체타당성 검토 수행실적의 지속적인 증가
 - LIMAC은 타기관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검토(자체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해당 자체타당성 검토실적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매년 평균 약 150건 검토)

자체타당성 검토의 개선 및 투자심사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보다 객관적인 자타검토 체계 마련 필요
 - 그간 LIMAC이 수행한 방대한 양의 검토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체타당성 검토를 위한 체계 및 기준은 모호한 실정
 - 특히, 행정안전부가 제도개선 예정인 ‘운영수지 분석’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자체타당성 검토의 개선을 통한 투자심사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자체타당성 검토의 중요도 및 LIMAC의 역할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타당성 검토의 개선을 통한 투자심사의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II 연구의 주요 내용

운영수지 분석의 이론적 고찰 및 현황 분석

• 이론적 고찰

- 운영수지 분석은 타 기관의 타당성조사에서는 수행하지 않는 LIMAC만의 독특한 분석기법으로 투자심사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항목임

• 현황 분석

- 2023년 기준 운영수지 분석에 대한 검토는 총 64건이 수행되었으나, 운영수지 분석의 근거자료 및 검토 기준의 한계로 인해 '판단불가' 의견의 비중이 전체 의견의 34%를 차지
- 이는 운영비용 및 수입의 적정 원단위 산정을 통한 객관적인 검토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

운영비용 및 운영수입 분석

• 분석의 전제 및 DB구축

- 운영수지 분석 대상시설 및 시점, 지역, 운영주체를 구분하여 운영수지 분석을 수행
- 공공시설 운영현황자료(행안부)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문체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대상시설(문화 및 체육시설 한정) 및 지역, 운영주체별 운영비용과 수입 DB 구축

• 운영비용 및 수입의 적정 원단위 및 범위 도출

- 운영비용 및 수입의 원단위는 극단치(상하위 5%)를 제거한 DATA를 기반으로 평균 혹은 중위값을 기준값으로 원단위를 산정
- 운영비용 및 수입의 적정 범위는 기산정된 원단위의 분포특성을 고려하여 25분위수 ~ 75분위수 값으로 도출·설정

• 원단위 적용 가능성 검토

- 시설유형별 운영비 원단위와 운영수입 원단위를 실제 자체타당성 검토 사례에 적용하여 검토 기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 적용 가능성 검토결과, 운영비용의 경우 건축시설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비용 원단위 기준을 참고하여 의뢰시설의 운영비 규모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검토방식의 보완이 가능
- 다만, 운영수입의 경우 의뢰사에서 지자체가 제시한 운영수지 분석 항목이 보다 구체화되어야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운영수입 원단위와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즉각적 개선에는 한계가 존재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자타검토의 내실화

- 의뢰서 운영비용 원단위와 본 연구의 원단위 비교를 통해 명확한 검토결과 제시 가능
 - 기존 판단불가로 갈음되었던 검토의견에 대해 명확한 검토결과 제시가 가능해졌으며, 항목의 누락에 대해 과소로 판정하였던 부분 역시 금액 기준으로 판단 가능

한계 및 보완사항

- 특수시설유형 및 체육시설에 대한 원단위 보완
 - 부지면적 기준 대상사업(종합운동장)과 복합시설에 대한 원단위 산정 및 보완 필요
 - 문화시설 대비 분석 샘플 수가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DB확보 및 원단위 갱신 필요
- 운영수입 분석항목의 구체화
 - 운영수입 원단위 활용을 위해서는 직영/위탁, 이용객 수, 운영수입 등의 추가정보가 필요하므로 향후 검토 의뢰서상 운영주체의 구분과 시설별 이용객 수(예측치)의 제시가 요구됨
- 도출된 원단위의 지속적인 DB화와 갱신
 - 현재의 행안부 공공시설운영현황은 가장 최신자료인 2021년부터 운영비용과 운영수입을 구분하여 공표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자료 구득을 통해 본 연구에서 도출된 원단위의 갱신 및 DB화 필요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부산광역시

- 1)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중심형 정책지표 개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91
- 이경은, 최지민, 유자영

대구광역시

- 2) 대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 김민영, 양원탁 94

인천광역시

- 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 유보람, 홍근석 97

광주광역시

- 4) 광주광역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 김지수, 김수동 100

대전광역시

- 5)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 김필, 전대욱, 김해솔 102

울산광역시

- 6) 도시 물순환 회복력 향상 방안 연구 - 윤소연, 김도형 105

경기도

- 7) 경기도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력 운영에 관한 연구 - 윤소연, 김민영 107

강원특별자치도

- 8)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 유보람, 신두섭 110

충청북도

- 9)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 권오철, 금창호 113

3-1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중심형 정책지표 개발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주제어 지방분권

연구책임 이경은 • 연구진 최지민, 유자영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목표와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연계가능한 지표 개발 필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국정목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목표를 연계한 통합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성과들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특히 연구 발주처인 부산광역시가 ‘지방시대’ 구현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필요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시대 국정과제 분석 결과

- 국정목표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표를 연계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관점에서 ‘지방시대’ 국정과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지표 개발 대상에 적합한 하위과제를 선별함
- 분석 결과, 120개 ‘지방시대’ 하위 과제 중 25개의 지방시대 핵심과제와 14개의 지방시대 도전과제가 추출되었으며, 지방시대 핵심과제 키워드는 9개, 지방시대 도전과제 키워드는 4개로 압축되었음
 - 25개의 지방시대 핵심과제 주요 키워드는 ① 주민자치 강화, ② 일반자치-교육자치 연계, ③ 지방재정 자립, ④ 지방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⑤ 지방행정역량 강화, ⑥ 지역기업

- 육성, ⑦ 지역상권 육성, ⑧ 지역인재 양성, ⑨ 지역혁신 거점 개발 등 총 9개임
- 14개의 지방시대 도전과제 주요 키워드는 ① 교육자유특구, ② 기회발전특구, ③ 지방투자, ④ 공공기관 지방 이전임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 개발

- 부산광역시 중심의 지방시대 지표는 ‘지방시대 핵심과제’와 ‘지방시대 도전과제’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됨
 - (지방시대 핵심과제) 지방시대 9대 키워드 및 키워드별 국정과제 하위 과제들을 고려하여 17개의 주요 정책 수단별 성과중심의 지표를 개발함
 - (지방시대 도전과제) 4개 키워드(또는 핵심 사업)와 유사한 사업의 성과를 통해 나타난 지방 자치단체의 역량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함
- 지방시대 지표 개발 결과, 지방시대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총 101개의 지표 후보군이, 지방시대 도전과제에 대해서는 총 17개의 지표 후보군이 개발됨

지표 우선순위 및 측정 타당성 검토

- 총 118개의 지방시대 지표 후보군에 대하여 각 정책수단별 지표 우선순위 및 개별 지표에 대한 측정타당성에 대해 검토함
 -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관리해야 할 지표의 중요도를 식별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지표에 의해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임
- 지표 우선순위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1순위 및 2순위 지표들로 구성된 간소화 지표체계를 구성함
 - 지방시대 간소화 지표체계(compact model)는 총 43개의 지표로 구성됨
- 측정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설문결과, 측정타당성 기준(80%)에 미달한 지표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표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 수정·보완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표 측정방식을 수정함
 - 118개 지표 중 2개 지표에 대해서는 측정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아, 이를 지표체계에서 삭제하여 지방시대 통합 지표체계(full model)는 총 116개의 지표로 구성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 거버넌스 구축 및 주기적인 평가 필요

- 지표 개발부터 실행, 사후관리 과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표 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지방시대 지표체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표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함
 - 복수의 부서 업무와 연결되어 있는 지방시대 지표체계 및 지표관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및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함
 - 지표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장치((가칭) 지방시대 지표체계 관리위원회)가 필요함
-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가운데 정책과제의 시행기간에 따른 지방시대 지표체계의 타당성 검증에 적절한 평가 주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지방시대 지표체계의 현실적합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표체계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지표 및 지표체계의 정책 적합성, 지표 측정의 일관성, 지표 측정의 효율성, 지표의 표준화 가능성, 지표 간 우선순위 재설정 필요성 등의 기준이 평가에 고려되어야 함

3-2 대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주제어 지속가능발전 | 지역발전 | 지역경제·일자리

연구책임 김민영 · 연구진 양원탁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 미흡

- 업사이클 산업은 폐자원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고 이와 동시에 산업 육성이란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문으로 활성화 필요성이 높아짐
-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권역별 업사이클센터를 구축하고 업사이클 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입주기업 영세성, 판로 확보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 효과 창출이 제한되었으며, 대구의 한국업사이클센터도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대구 업사이클 산업 실태 점검과 대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필요

- 대구 업사이클 산업 실태 점검하고 후속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 조성된 한국업사이클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대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 활성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의 주요 내용

대구 업사이클 산업 실태 분석

- 서울, 경기 다음으로 업사이클 기업이 많이 분포해 있으나, 대구 기업은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경향이 있어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대부분 업사이클 기업은 제조업에 속하며, 연매출 3억 원 미만, 종사자 2인 미만, 개인사업자인 소규모 기업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음

- 대구에는 업사이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허브인 ‘한국업사이클센터’가 있으며, 다수의 기업이 제품 개발을 통한 사업 확대 의지가 있다는 점이 강점임

대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정책 현황 조사

- 중앙부처 중에서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업사이클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재정 지원, 팝업스토어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대구광역시는 2016년 한국업사이클센터를 개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업사이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예산 한계에 직면해 있음
- 향후 대구광역시는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와 함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소재’, ‘(시)제품 제작’에 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함
 - 한편,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년)’에 따르면 권역별 업사이클센터 목표가 ‘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에 있으므로, 대구광역시는 산업 육성만이 아니라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함

국내외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사례 조사

- 국내 사례로 서울새활용플라자,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 등을 조사함
 - 업사이클센터 역할 재정립, 환경교육 및 자원순환 교육 기능 도입, 소재 수급 지원, 제품 제작실 운영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해외 사례로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 기업 지원, 소비자 교육, 거버넌스 구축, 인증제도 등을 구분하여 조사함
 - 업사이클 과정에 시민 참여 유도, 전시장 구축, 성인 및 아동 대상 체험 활동 마련 등을 참고할 수 있음

업사이클 협회 및 사업체 인식 조사

- 업사이클 협회 2개, 대구 업사이클 사업체 6개사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업사이클 사업 장애 요인, 창업기업 업사이클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요소, 업사이클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조사함
 - 업사이클 사업 장애 요인: ▲높은 생산단가와 한정된 수요층, ▲폐자재 수급 어려움, ▲시제품 제작 및 소량 제작 시 큰 비용 발생 등
 - 창업기업 업사이클 사업 지속을 위해 필요한 요소: ▲초기 창업기업이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지원, ▲제품 개발이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다년도

- 지원사업, ▲초기 창업기업에 한해 지원금 제약조건 완화, ▲업사이클 사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소비자 인식 변화 등
- 업사이클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개별 기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컨설팅,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소비자 중심 접근, ▲안정적이고 정교한 업사이클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화, ▲기획력,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유치 등
 -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 지원 병행, ▲업사이클 기업과 제품이 소비자에게 노출될 기회 지속 마련, ▲전체 산업 영역에서 업사이클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업사이클 인증 제도 마련 등
 - 기존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한국업사이클센터의 비전과 목표 재정비, ▲자금 지원만이 아닌 체계적인 관리와 컨설팅 지원, ▲사업 단계 및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인건비 지원, ▲한국업사이클센터 공간의 전략적 재구성 등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3대 전략 13개 추진과제 제안

- <업사이클 선도 도시 '대구'>로 비전을 제안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 산업 영역 업사이클링 확산', '업사이클 기업 육성',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방향으로 설정함
- '일반기업 대상 업사이클 활동 지원', '업사이클 사업 애로사항 해결', '시민 참여 유도 및 접점 확대' 등을 3대 전략으로 제안하고 13개 추진과제를 제안함
 - 일반기업 대상 업사이클 활동 지원(3개 과제): 업사이클 제품 공공구매 제도 도입, 소재 기부 세액 공제, 재활용 인증 수수료 지원
 - 업사이클 사업 애로사항 해결(5개 과제): 창업기업·성장기업 맞춤형 지원, 창업기업 보육을 위한 사무공간 임대, 소재 수급 지원, 제품 제작실 기능 강화, 전문 컨설팅 지원
 - 시민 참여 유도 및 접점 확대(5개 과제): 대구 업사이클 제품 보조금 지원, 업사이클 매장 구축·운영, 물품공유센터 유치, 대구 내 환경교육센터 유치, 통합 환경교육 제공

단계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예산, 협력체계 등 추진 기반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서 제시한 3대 전략 13개 추진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함
 - 1단계는 '한국업사이클센터 기능 재정립', 2단계는 '기업 육성 지원', 3단계는 '기업 육성 강화 & 문화 확산', 4단계는 '전 산업 영역 업사이클링 확산' 순으로 제안함

3-3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주제어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전담기구 | 설립 타당성

연구책임 유보람 • 연구진 홍근석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가(지역) 경제 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역할과 중요성 강조

- 소상공인 사업체의 지속적 규모 확대 및 경제 주체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2020년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독립성이 법률로서 보장됨
- 지방자치단체 역시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수반하며,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관리·지원 시스템 구축 및 조직설계 필요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 2023년 사업비 기준 331,130백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운영·성과 및 사후 관리 체계 전반에 관한 통합적 관리가 어렵고, 일부 중복사업의 시행으로 예산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상황임
-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 기구 설립방안 타당성 검토

-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검토 중인 두 개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전담 기구 조직 유형 타당성 검토를 실시함

- (1안) 현행조직 (인천신용보증재단 사무 위탁) 유지 및 확대 방안
- (2안) 독립재단법인 설립 방안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내용법·제도적 타당성 분석 결과 (2안) 별도의 독립재단 설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른 부적합 사무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2안) 독립재단 신설은 (1안) 현행조직 유지에 비해 최소 1.8배에서 최대 2.0배까지의 비용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설립의 기대효과 검토 결과

-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효과분석 결과 (1안) 현행조직 유지 및 확대, (2안) 독립재단 설치 모두 주민복리증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현재 지원사무인 자금지원, 홍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폐업 및 재기 지원, 교육 지원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분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천광역시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은 양호한 편으로 확인됨
 - 재정자주도는 특·광역시 유형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재정력이 강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유형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과 자율성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예산대비채무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유사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음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두 개의 대안 모두 조직 유형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유형 선택 중요

- (1안) 현행 조직 유지는 다음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함
 -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내 6개 지역 지점을 활용하여 지역밀착형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금융·비금융의 통합 지원으로 비금융(경영지원) 지원사업 효과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다만 계약에 의한 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업무에 대한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며, 고유사무 외에 새로운 영역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이 부족할 수 있음

- (2안) 재단 형태 출연기관 설립은 다음의 장점과 단점이 존재함
 - 기관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만큼 전문성 높은 신규 인력 채용이 가능하며, 세부 추진 사업을 결정할 때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관한 고려 요소가 적으므로 사업의 다양성 및 자율성 확보가 가능함
 - 다만 신규 기관의 설치로 임대료 및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이 소요되며, 사업부서 외에 경영지원 사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적정인력 채용을 위한 비용이 수반되어 소요 예산 부담이 가중됨
 -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 추진 절차가 복잡하고,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설립 기간이 소요됨

소상공인 지원 전담기구 유형의 조속한 의사결정 필요하며, 현장 의견 수렴 채널을 통한 대상 사무 및 세부 업무 내용 확정 필요

- 시의성·실효성 측면에서의 전담 기구 조직 유형 결정이 필요하며, 조속한 조직 유형 결정과 세부 지원사업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 조직 유형 결정 이후, 구체적인 대상 사무의 영역과 세부 사업내용은 인천광역시 소공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대표를 포함한 TF 결성을 통하여 진행함으로써 현장 의견 수용할 수 있는 통로 설치 필요

3-4

광주광역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주제어 재난안전 | 지방분권 | 매뉴얼

연구책임 김지수 · 연구진 김수동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 내 대형 안전사고 경험을 토대로 재난현장에서 작동가능한 매뉴얼 개선 필요

- 광주광역시는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지역 내 대형 안전사고 경험을 토대로 재난대응체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및 다중밀집건축물 붕괴사고 등 대표적인 도시형 사회재난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필요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공통된 조치목록 및 내용에 대한 표준안 마련 및 재난총괄부서의 행동지침 발굴, 초기대응매뉴얼의 개발 필요

II 연구의 주요 내용

광주광역시 재난관리 매뉴얼 활용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재설계

- 사례분석 및 실무자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활용사례 분석
 - 광주동구 학동 학산빌딩 붕괴사고, 광주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광주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주요 사회재난 사례에서 재난관리매뉴얼이 활용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필요사항을 도출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사고” 관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편안 제시
 -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실무자 인터뷰, 국내외 재난관리매뉴얼 분석을 통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설계

초기대응매뉴얼 설계

- 갑작스러운 재난 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총괄부서와 개별 재난관리 주관부서의 역할 및 조치사항을 요약·기술한 초기대응매뉴얼 설계
 - 적용시기와 대상, 단계별 소관기관별 조치내용을 제시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광주광역시의 재난관리역량 제고

- 광주광역시 차원의 역할 제언
 - 매뉴얼을 활용한 재난대응훈련을 통해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기타 재난유형으로 확대 적용
 - 재난관리 총괄·조정기능 강화, 현장대응역량제고 및 전문성 강화 지원, 광역 차원의 재난대응 자원통합관리 및 동원체계 구축, 민간거버넌스 개발 및 보완 필요성 제시
- 국가 차원의 역할 제언
 - 광역-기초 역할을 구분한 매뉴얼 개발, 일상-비일상 업무분장표 개발, 고도화된 매뉴얼 우수화 사례 확산, 방재안전직렬에 대한 인사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자체 재난관리역량 제고 노력 필요

3-5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주제어 인구감소대응 | 지역발전 | 지역사회·공동체

연구책임 김필 · 연구진 전대옥, 김해솔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생활인구 추정을 기반으로 한 대전광역시 인프라 수요 발굴 필요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 도입된 생활인구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 필요
 - 시민의 일상적 삶에 중요한 생활인프라는 정주인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나, 정주인구의 감소에 따라 유동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를 중심으로 생활인프라를 재구축할 필요성 대두

대전광역시 행정동 단위의 생활인구 추정과 아울러 생활인프라 수요를 파악

- 행정동 단위의 생활인구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필요한 생활인프라 수요를 발굴
 - 빅데이터 분석 및 82개 행정동 담당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동별 생활인구의 유형을 파악하고, 기존 인프라 현황 분석 및 생활인구 추정 결과를 고려한 지역별 인프라 수요 발굴

II 연구의 주요 내용

생활인구와 생활인프라의 관계에 대한 개념 정립

- 생활인구 및 생활인프라의 유형 및 범위
 - 생활인구란 유동인구, 단기 체류자, 중·장기 체류자, 외국인 또는 관계자로 구분되며, 생활인프라는 교육, 보건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으로 생활인구 유형별로 인프라 수요는 구분됨
 - 생활인구 유형에 따른 생활인프라의 수요 분석은 현재까지 선행연구가 없으며, 행정동의 공무원 및 생활인구 이해당사자 인터뷰 등을 통해 공공시설 및 의료·쇼핑 등 민간인프라를 고려

대전광역시 행정동 단위의 생활인구와 생활인프라 현황 분석

- 빅데이터 및 설문조사 분석 등을 활용한 생활인구의 규모·유형 생활인프라 파악
 - '22년도 행정동별·산업분야별 월매출액 추정자료와 행정동별·세대별 유동인구 자료, 82개 행정동 283명의 공무원 설문응답, 기타 주요 생활인구 유형별 이해당사자 인터뷰, 생활인프라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활인구 규모 및 유형, 생활인프라 수준 등을 파악함
- 생활인구 및 생활인프라의 유형과 현황 분석 결과
 - 유동인구, 학생, 직장인 및 사업체 종사자, 외국인 등 주요 생활인구에 대해 행정동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거주지, 유입경로, 필요 인프라, 생활인구 유입방안 등의 차이 존재
 - 행정동별로 인프라 간 개수 및 규모에서 격차가 크므로, 필요 인프라를 중심으로 분석

생활인구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조사 및 분석

-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인프라 공급 및 필요 생활인프라에 대한 비교 분석
 - 행정동 현황과 생활인구 유형별 규모를 비교하며, 생활인구 유형에 대비한 생활인프라의 실제 현황과 필요한 생활인프라의 규모 등을 비교
- 생활인구 유형별로 수요가 높은 인프라는 행정동별·인프라별 차이를 보임
 - 초단기 유동인구에게 있어서는 문화·교통 인프라를 제외한 전반적인 생활인프라 수준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을 위한 문화인프라 및 직장인을 위한 교통·환경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 또한 군인 및 외국인 등의 장기체류자를 위해서는 복지·보육·행정서비스 등과 관련된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지원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 자치구·행정동별 인프라 구축 전략
 -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동구에서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교통인프라 중심의 전략이 유효하며, 신도심 건설 이후 쇠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중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인프라 지원 정책이, 서구에서는 전반적인 생활인구 인프라 확충이 요구됨
 - 교육·연구기관이 밀집된 유성구에서는 외국인과 장기체류자를 위한 문화 등의 생활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산업시설이 많은 대덕구에서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경제인프라 등이 중요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생활인구의 유형별 규모파악과 이에 기반한 인프라 수요 도출 필요

- 정적인 정주인구 중심에서 동적인 생활인구 중심으로 도시인프라 구축전략 전환 필요
 - 본 연구는 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인프라 조성 등 발전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소지역(행정동)별로 생활인구의 유형과 규모에 기반한 접근방법을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는 의의를 지님

인구감소대응 차원에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전략 및 제도개선안 제언

- 대전광역시 인구정책 조례 등 관련 정책추진 방안 및 법제개선안 도출 및 제언
 - 생활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유형 파악에 기초한 도시인프라 구축 전략의 도출 및 제언
 - 생활인구의 유입을 위한 지원 시책의 일환으로서 생활인프라 조성 등에 관한 근거조항 마련



3-6

도시 물순환 회복력 향상 방안 연구



주제어 지속가능발전 | 도시환경 | 물환경

연구책임 윤소연 • 연구진 김도형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 왜곡 문제 발생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표면 확장, 토양 다짐과 지표면 경사 변경 등은 지역의 수문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자연적인 물순환 왜곡을 발생시킴
 - 국토 전반에서 도시 건조화, 지하수 고갈, 수질 오염, 홍수, 폭염·열섬 등 물 환경에 관한 문제가 심화되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물관리 여건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전망

물순환 회복력 향상을 위한 통합물관리 추진 및 민간 참여 확대 필요

-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순환 역할이 강조됨
 - 2018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을 통해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고려한 통합물관리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도시 물순환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책적 성과 향상 필요
 - 물순환 회복은 토지이용과 관련이 있어 기본적으로 공공이 중심이 되어 시행할 수밖에 없으나, 시민참여가 뒷받침되지 않는 물순환 회복 정책은 성과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

II 연구의 주요 내용

울산광역시 물순환 여건 및 정책 현황조사

- 울산광역시 물순환 관련 여건 및 특성 조사
 - 울산광역시의 일반현황(지리적·지형적 특성, 토지이용 현황), 물순환 현황(토양배수등급 및 토심, 물수지), 물순환 관리시설 등 조사

- 물순환 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주요 정책 조사 및 시사점 제시
 - 울산광역시 주요 정책사업과 관련 조례·계획 등을 조사하고, 정책 추진상의 한계점 도출

국내·외 물순환 정책 동향 및 사례조사

- 국내 물순환 관련 법령·조례 및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정책 현황조사
 -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등 조사
 - 중앙부처의 물순환 관련 전략, 정책·사업, 계획수립 현황 등 조사
 - 주요 지방자치단체(서울, 광주, 충남, 수원) 물순환 정책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국외 물순환 정책 동향 및 사례조사
 - 싱가포르의 통합적 수자원 관리 정책, 민간 참여 활성화 정책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미국의 물 거버넌스 지방 분권화 전략, 물순환을 위한 책임 분담 정책 등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일본의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 시민참여 제도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호주의 물 보존·효율적 사용 등을 통한 물관리 정책 조사 및 시사점 도출

울산광역시 도시 물순환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도입, 시민 대상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개발사업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등을 통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제시
- 통합적 물순환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물순환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부서) 신설 또는 기능 확대를 통해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능적 통합 및 거버넌스 체계 마련, 울산광역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정책 제안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통합물관리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물순환 관련 정책 발굴 가능

-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물순환 여건과 정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물순환 회복력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 조사한 다양한 지역 및 국가들의 물관리 현황은 향후 울산광역시가 물순환 회복에 관한 제도·사업 등을 도입·추진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7

경기도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력 운영에 관한 연구



주제어 소방 | 안전관리

연구책임 윤소연 • 연구진 김민영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대규모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정 소방력 배치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이태원 핼러윈데이 행사장 압사 사고(22.10)를 계기로 다중운집 축제·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 확보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대규모 축제·행사에서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안전관리 주체들의 능동적·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역할수행 강조
- 현재 관련 법령 및 매뉴얼에는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으로서 소방기관의 활동 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화된 소방력 운용 및 배치기준은 부재함
 - 한정된 소방자원을 고려할 때 불규칙한 소방력 배치는 관할지역 내 출동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반대로 축제·행사 안전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대규모 축제·행사에서의 인명사고에 대비하여 소방기관이 능동적·선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소방력 운용기준 및 근거 마련 필요

II 연구의 주요 내용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체계 및 매뉴얼 검토

- 국내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 관련 법·제도·체계 조사·분석
 - 축제·행사·공연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를 검토하고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체계상 관계기관별(주최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역할 및 책임 등을 비교·분석함

- 국내 축제·행사 안전관리매뉴얼 검토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한 축제·행사 안전관리매뉴얼을 조사하고, 각각의 수립 배경 및 범위, 구성 및 특징, 주요 내용 등을 분석함

다중운집 축제·행사 현황 및 사고특성 분석

- 지역축제·행사 개최 현황 조사
 - 전국 및 경기도 내 지역별·연도별 지역축제 개최 현황을 조사·분석함
- 다중운집 축제·행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사례조사
 - 국내 지역축제 및 다중운집 공연·행사장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조사·분석함
 - 국내·외 대규모 축제·행사 사고사례에 대하여 사고원인, 위험요소, 대응과정 등을 조사·분석함
- 다중운집 축제·행사 사고특성 분석
 - 국내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 사고사례의 내용을 토대로 사고 발생유형, 원인 등을 분석함
 - 축제·행사 유형별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각 위험요소의 판단 기준을 정리함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력 운용방안 제시

- 경기도 축제·행사 소방력 동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경기도 소방력 동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최근 10년간(2014-2023) 개최된 축제·행사·공연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소방 활동실적을 조사·분석함
-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수행 및 소방력 배치기준(안) 마련
 - 재난대응부서 소방공무원 대상 설문을 통해 다중운집 축제·행사의 위험요소별 상대적 중요도, 소방 대응단계, 운집밀도 판단기준, 적정소방력 수준 등을 조사함
 -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역축제·행사의 운집 인원에 따른 사전 배치 소방력의 적정 범위를 도출하고, 위험성에 따른 추가 소방력 배치 규모를 제시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다중운집 축제·행사에서의 효율적 소방력 운영 및 안전 확보에 기여

-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다중운집 축제·행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및

체계, 다중운집 축제·행사 현황 및 사고특성, 소방력 배치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경기도 소방의 지역축제·행사 동원 현황과 실무 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지역축제·행사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다중운집 축제·행사 소방력 배치기준(안)을 마련함

- 본 연구결과는 지역축제·행사의 특성과 위험요인, 안전관리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인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다중운집 축제·행사에서의 효율적 소방력 운영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8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주제어 재정분권 | 재정분권 측정지표

연구책임 유보람 · 연구진 신두섭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고향사랑기부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기부금 모금 확대 전략 수립 필요

-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대다수의 지자체는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하는데 전력을 다함
- 사실상 기부 시행 초기 단계에서 지자체별 차별화된 모금 전략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고향사랑 기부제의 발전과 지역별 기부금 규모의 확대를 위해 모금 전략 수립은 중요한 사항임

강원특별자치도 기부 현황 및 여건·환경 분석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 전략 마련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 홍보환경 분석을 통해 홍보 타겟 설정 및 홍보 강점 파악, 강원특별자치도 기부 의사자를 대상으로 선호 답례품 유형 분석, 국내·외 답례품 사례 분석을 통한 강원특별자치도에 유용한 답례품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여건 및 역점 사업 분석을 통하여 고향사랑기부사업 우선순위 선정 필요

II 연구의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유도 방안 모색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및 해외사례 검토 결과

- 제도적 특성(경제적 혜택, 기부 접근성), 기부 대상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기부 경험과 같은 기부자 개인의 특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검토됨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현황 분석 결과

- 연령별, 거주지역별, 기부 시기별 차별화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기부 특성별 전략 구상 필요
 - 연령층이 높을수록 평균 기부금액과 기부율이 높으므로 고연령층이 보다 편하게 기부할 수 있는 채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기부자 중 상당 부분인 79.2%가 10만 원을 기부하였는데 이 구간이 전체 기부 금액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답례품 확대는 3만 원 위주의 답례품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거주지역별로는 강원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기부자와 기부금이 모금되었고 서울과 경기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한 홍보 전략과 도내에서 지역별 기부 차별화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분석 결과

- 강원특별자치도는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강점이 충분한 도시로 평가됨
 - 2019년~2022년까지 강원도 계절별 관광객 순위를 살펴보면 여름과 가을에 관광객 방문 비중이 특히 높으며, 봄과 겨울 관광객 방문 비중도 높은 편으로 확인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제도의 성과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채널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강원도 내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홍보 계획 수립이 필요함

홍보 타겟을 세분화하여 차별적 홍보 방안 구상 필요

- 홍보 타겟은 방문 관광객, 강원특별자치도민, 불특정 다수의 일반 대중으로 구분함
- 강원도는 관광지로서 강점이 큰 지역인만큼 홍보 타겟에 관광객을 포함하고, 계절별 방문객이 많은 관광지의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과 관광·여행과 연계된 소셜 커머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제 상반기 현황 분석 결과 강원도 내에서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강화가 필요함. 특히, 외부 인구 유입이 높은 지역과 거주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구분하여 홍보 방안 구상 필요

기부자 참여형 사업을 통해 기부자와의 신뢰 구축 및 관계 유지 필요

- 제도 성과에 관한 홍보 강화를 통해 기관에 대한 신뢰를 고취시킬 수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수요를 고려하여 답례품과 연계 방안 마련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는 관광지로서의 강점이 충분한 지역이므로 관광객 방문율이 증가한 관광시설을 답례품과 연계하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음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필요

- 고향사랑기금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사업’,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 필요함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으로 강원형 ‘Baby Box’ 지원 사업, 아동 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사업, 청년 U턴 지원 사업을 제안하며,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사업으로 고향사랑 도서관 운영사업을 제안함. 그 밖의 주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생태도시 강원 조성 사업, 스타트업 오피스 지원 사업을 제안함

3-9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 방안 연구



주제어 인구연구 | 인구감소 | 인구정책

연구책임 권오철 • 연구진 금창호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배경

- 충북 인구위기 심화 및 구조적 특성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필요성 증대
- 충북도의 인구정책 확대 추진 및 정책에 대한 전문적 지원/관리 필요성 확대
- 인구정책추진의 전문적 정책지원, 통계/데이터/연구 등 충북인구문제 허브 구축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요구

연구목적

- 충북도의 인구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인구문제와 관련된 교육, 데이터허브, 거버넌스관리를 추진할 전담연구센터의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 설치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

II 연구의 주요 내용

인구연구센터 설치의 필요성 검토

환경조건	기대 역할	인구 관련 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충북지역 인구문제의 영향 지속적 심화	문제특성과 이에 대한 솔루션 도출, 정책지원을 위한 적정 통계자료의 생산, 활용, 제공, 인구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및 정책플랫폼 역할	① 인구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 및 관리 필요
		②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민관대응 네트워크 마련 필요
		③ 인구문제의 다차원적 특성에 따른 학제적 대응 필요
		④ 인구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선제적 검토 필요

환경조건	기대 역할	인구 관련 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인구문제에 대한 충북도 및 중앙정부 정책 확대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개발 자문, 정책 내실화 지원, 정책분석 및 평가지원 역할	⑤ 충북형 인구정책개발 기본체계 마련 및 체계적 관리/지원시스템 필요
		⑥ 인구정책 개발의 사전영향평가의 중요성 확대
		⑦ 충북도, 시/군 인구정책의 중첩/갈등 요인 최소화 및 상생적 협력방안 연구 필요

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검토

• 정책추진 일관성 측면

구분	분석자료	타당성 평가
상위 정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 제1차 인구정책 기본계획 (2021-2025) -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전략(2023)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 관련 상위추진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인구정책연구 및 인구정책연구센터 설립 필요성 제기 - 상위정책을 통하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인구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를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구정책담당관실)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가칭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유기적 협업 관계 필수적
사업 추진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의 인구문제 의지 표명(언론보도) - 단체장 인구문제해결 의지 실천(관련 조직 및 정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직접적 의지 표명을 없지만, 인구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하여 충북도정의 제1목표를 인구정책에 두고 지속적인 의지 표명과 대응조치 추진 - 정책의 확대와 인구문제의 연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정책추진에 있어 체계적/다분야적 전문가 참여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인구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 추진전략 등의 승인을 통하여 인구정책연구센터 필요성에 대한 의지 유추 가능
관련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인구 관련 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전후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적 이슈가 심화되면서 광역단체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인구 관련 연구센터 설치 움직임(광주전남 연구원, 경북연구원) - 연구기관 자체 설치의 경우도 지역소멸대응의 중요성에 따라 광역단체 지원 확대를 통하여 연계 강화(경북도의 경북연구원 보조사업 확대) - 충북도의 경우도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지원기능을 선도적/적극적으로 검토, 충북도와 상시적 정책지원/협업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인구정책연구센터 필요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구정책 관련 사업 및 위탁 사항 구체화

• 정책추진 안정성 측면

구분	분석자료	타당성 평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사업 예산(충북도 100대 세부추진과제 시행 예산) - 지방소멸대응기금 예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2,700억 원의 인구정책사업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의 기본체계 마련, 조정, 진행과정 관리 및 성과 평가, 피드백 등 총괄적 정책지원조직 운영 필수 - 인구정책연구센터 운영비(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사례 연구센터 예산(1,500만 원 내외 ~ 1억 1,200만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사업: 인건비(최대 3인), 운영 및 사업비 포함 시: 2억 원 내외 • 수시사업: 겸직(분야별 전문가 5~8인 규모), 컨설팅/자문비용으로 충당 가능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명시 사업(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 3개 유사사례 인구연구센터 수행사무 - 충북연구원 인구 관련 연구수행과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명시사업과 함께 단기/중장기적으로 수행 필요한 인구정책 연구사업 확대 불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 관련 사무 지속 확대 • 인구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하더라도 업무 과부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및 직접/협업수행체계 명확화 필요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의 설치

• 설치방향

- 단기적 대응(제1안: 위탁 설치안/제2안: 관련기관 자체설치 협조의뢰안)
- 중장기적 대응: 직접 설립안(인구 관련 연구센터를 재단법인 형태 설립)

• 대안비교(단기적 대응안)

		위탁설치방안	자체설치방안	비고
설립 과정	법적근거	현 조례 근거	-	
	설립절차	의회 심의/민간위탁 절차	-	
조직 운영	역할/기능	(역할) - 충북도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지원 - 충북도 인구 관련 데이터 허브 및 민관네트워크 구축·관리	동일	계약비용 및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

		위탁설치방안	자체설치방안	비고
조직 운영	역할/기능	(기능) - 출산/육아, 인구유입 등 인구증가 사업 - 정주여건 개선사업 -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 인구 관련 포럼 운영 - 인구 관련 홍보·교육 사업 등	동일	계약비용 및 협의과정을 통해 조정
	조직/인력	센터장 아래 2개 팀 구성 - 인구정책대응팀: 계약직(상근) - 인구정책지원팀: 겸직(비상근)	2개 팀 구성 인구정책대응팀: 겸직 인구정책지원팀: 겸직(비상근)	자체 설치의 경우도 관련 보조사업(용역) 수행 시 전임직 확보 가능
	예산조치	위탁비용 (※ 위탁비용은 인건비+위탁사업 운영비)	별도 없음 (※ 관련 보조사업(용역) 계약을 통하여 간접적 지원 검토 필요)	
기타 (설치가능기관)	공공연구기관 대학/민간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활용방안

구분	활용방안	
센터-도/시군 관계에서의 활용	▶ 정책지원역할	- 도 인구계획 및 인구정책 수립 지원
	▶ 인구문제인식, 인구사업 개발의 기본 틀 개발 및 확산 역할	- 인구문제, 인구사업개발에 대한 기본틀 개발 - (가칭)인구정책협의회(도/시군의 인구계획/인구사업 관련부서 팀장급 이상) 구성 및 정기적 워크숍을 주관하여 관련 공무원 간 문제인식 및 사업개발방향의 공감대 형성
	▶ 현안과제에 대한 즉시적 자문-컨설팅 역할	- 인구연구센터 내 인구정책지원팀(전문가협업팀) 구성을 통하여 도/시군의 인구사업 관련 부서의 현안문제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컨설팅 제공
센터-도민 관계에서의 활용	▶ 인구문제/정책의 홍보 역할	- 언론 인터뷰(충북도 인구정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 제공, 인구쟁점 전문가 의견 등)를 통하여 도민의 인구문제 관심 지속적 제고 - 인구문제 및 정책대응 홍보자료 제작
	▶ 인구문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역할	- 초중등학교 특별교육(교육청 협업), 대학생 교양강좌 특강(관내 대학 협업) - 인구문제대응 시민강좌 개설
센터-전문가/시민집단 관계에서의 활용	▶ 인구문제에 대한 쟁점 선도 역할	- 인구 관련 포럼 운영을 통하여 선도적 쟁점 개발 및 대응 - 인구 관련 학술대회, 워크숍 등의 주관 및 참여를 통해 인구문제 관련 쟁점의 논의, 충북도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가 집단논의 및 피드백 등
	▶ 충북도 인구 관련 연구 데이터 허브 역할	- 충북도 인구특성을 반영한 인구지표 개발 - 관련 통계, 정책자료, 해외사례 등의 수집 및 제공 - 인구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

정책이슈리포트

서울특별시

- 1) 서울특별시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 김필, 주희진 119

부산광역시

- 2)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부산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 여효성, 양원탁 122

대구광역시

- 3)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 양원탁, 김민영 125

인천광역시

- 4)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방안 연구 - 홍근석, 전영준 128

광주광역시

- 5) '광주광역시' 디지털 전환 혁신 방안 - 이재용, 이경은, 김수동 131

대전광역시

- 6)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연구 - 정기용, 주희진 134

경기도

- 7)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경기도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 여효성, 이원도 137

강원특별자치도

- 8)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 이원도, 윤소연 139

충청북도

- 9)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 윤소연, 이원도 141

전북특별자치도

- 10)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 김민영, 윤소연 143

경상남도

- 11)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대책 - 유지영, 이경은, 안혜경 146

제주특별자치도

- 12) 제주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툴(tool) 개발 - 전대욱, 김해솔 149

4-1

서울특별시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주제어 안전교육 | 프로그램 설계 | 교육 전달 로드맵

연구책임 김필 · 연구진 주희진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인구 증가와 도시환경 복잡성 고도화로 인한 재난 취약성 상승

- 서울은 일일 평균 생활인구 10,643천 명, 다중이용업소 비율이 전국의 21.6%로 사회재난이 일어날 확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또한 최근 기술의 고도화, 대규모 네트워크화된 도시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단일 혹은 복수의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사회재난까지 이어지는 대형복합재난 위험도 큼

서울시의 안전 역량 및 시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도구 필요

- 사회 재난의 경우 간단한 매뉴얼 숙지만으로도 대형 참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안전 역량을 높이고, 시민대응력 강화를 위해서 대중화된 서울형 표준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이 필요
 - 자격 취득의 의미보다, 성인이 되면 운전면허를 누구나 취득하듯이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한다는 의미로 접근

II 연구의 주요 내용

서울시 재난 취약성 증가에 따라 민관 협력 거버넌스 강화 필요성 요구

- 서울시 재난은 감소 추세이지만 전반적으로 위험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인 취약성(vulnerability)은 증가 추세

- 재난 예방 및 대응 중심의 시민 교육을 통하여 공공 재난관리의 한계를 민관 협력을 통한 극복 필요

안전교육 수요 분석 결과, 현장체험관 중심의 안전교육 관심 증대

- 이태원 참사 전후로 안전교육에 대한 언론보도 증가
 - 최근 3년간 서울시가 교육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에 이어 경찰청,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보다 언론에 더 높은 가중치로 등장하는 정부 행위자로 나타남
 -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이수, 인증제 관련 등 안전교육 제도 관련 이슈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함
- 구글 검색트렌드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해 왔으며, 특히 현장 체험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음. 분야로는 보건, 산업, 건설, 소방, 도로교통이 부각되었음
- 현장 소방안전강사들은 심폐소생술, 화재안전, 생활안전, 응급처치가 재난안전교육에 포함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서울시 안전교육 현황 분석 결과, 교육시간이 길고 교육회차당 대상인원이 많은 편

- 시민안전파수꾼은 교육시간이 다소 긴 편(2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소방안전교육은 교육회차당 대상인원이 다소 많은 편(회당 100명)으로 나타남
- 2028년까지 다섯 개의 안전체험관이 모두 건립되면 연간 104만 명의 체험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분포된다는 강점이 있음

우수사례 분석 결과, VR 도입 강제이며 교육과정마다 이론·실습 강조가 뚜렷함

-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한국소방안전원 제주지부 등은 가상현실로 재난을 체험하여 교육 효과성을 높이는 VR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 싱가포르 CEPP는 실습 위주 교육, 호주 Get Ready Queensland는 이론 위주 교육을 채택 하고 있었음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전(全) 생애주기형 체계적 안전 교육, 현장 대응력 강화 참여 위주 안전교육, 커뮤니티 빌딩 안전교육 등 총 3개의 교육개발(안) 제안

- 전(全) 생애주기형 체계적 안전교육(1안)은 학교 의무교육으로 도입하여 안전의 생활화를

도모하는 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에 따라 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보다 예산과 조직규모를 확장할 필요 있음

- 현장 대응력 강화 참여 위주 안전교육(2안)은 심폐소생술 등 현장대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 안전 가이드라인 공식화·표준화 하는 안으로 싱가포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한국소방안전원 제주지부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현상 유지하되 예산 및 조직을 개편하여 현장체험관에 VR 적극 도입 가능
- 지역커뮤니티빌딩 안전교육(3안)은 가족 등 비공식조직에 초점을 맞춰 안전홍보캠페인, 재난정보서비스와 통합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안으로 적극적인 소셜 미디어 활용을 통해 현장체험관, 구청을 거점으로 지역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음. 호주와 성동구 생명안전배움터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가용 자원과 안전교육의 미션에 따른 안전교육(안) 선택 필요

-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최신 기술 및 안전교육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2안이 적합하며, 서울시를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강도 높은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적·정치적 의지와 결합할 수 있다면 1안, 장기적으로 지역커뮤니티에 뿌리를 둔 안전 체제(system) 형성을 위해서는 3안이 적절함
- 인력·예산 등 자원의 소요 정도는 1안>3안>2안 순으로 예상되며, 민간(시민, 기업)의 주도 강도는 3안>2안>1안 순으로 예상됨

4-2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부산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주제어 지역경제·일자리 | 지역발전

연구책임 여효성 · 연구진 양원탁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부산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시장 확대

- 부산시 고령인구 증가추세는 204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2년 70.9만 명인 부산시 고령인구는 2045년 1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부산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에 대한 의료, 영양, 돌봄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의료, 건강관리 등 고령친화산업의 시장수요 확대가 예상됨

실버 이코노미 등장 및 대응 필요성

- 실버 이코노미는 장애가 없이 기대 수명을 향상시키거나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간병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음
- 실버 이코노미 등장과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친화산업 수요자 진입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연령별 인구구성 변화를 반영한 고령친화도시에 부합하는 정책 구상이 필요

II 연구의 주요 내용

부산지역의 고령화 현황

- 부산광역시의 현재와 미래의 인구구조와 세대별 특성과 베이비붐 세대의 가구 일반 사항, 질병 및 건강상태, 노후준비 현황을 파악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수요 특성을 파악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 현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용품 제조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산지역 고령친화산업의 사업체의 특성을 파악함

해외의 고령친화산업 특성

- 유럽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외 실버 이코노미의 시장 특성과 주요 기업의 비즈니스 사례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베이비붐세대 이전과 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고령친화산업 발전방향

-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현황과 해외의 고령친화산업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부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고령친화산업 발전 방향을 제안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시대의 도래

- 인구 고령화는 산업 섹터별로 구조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실버 이코노미에 속한 산업은 장기간에 걸쳐 인구 고령화 및 시니어 시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AI 및 ICT 기술은 잠재적으로 노인들이 직면하는 많은 일반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기업가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됨

기술 동향 및 고령자 수요를 반영한 유망 고령친화산업 선정

- (원격의료) 진료소에 가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의료 또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령 환자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의약품이 안전하게 배송되도록 국가 표준에 따라 의약품을 대신 배송
- (헬스테크) AI 및 사물 인터넷이 지원하는 모바일 앱, 웨어러블 장치 또는 스마트 장치를 활용하여 만성 질환 관리, 낙상 감지, 투약 준수 등을 지원하여 고령인구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
- (노인 영양) 병원 및 노인 요양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노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맛, 질감, 영양, 준비의 용이성 등이 변경된 식품의 개발과 영양식 제공 서비스를 제공

- (생활 지원) 더 많은 노인들이 독립적이고 존엄하게 늙기를 원함에 따라 지역사회와 통합된 시설을 제공하는 새로운 보조 생활 개념과 노인 간호의 “제도화된 스타일”에서 벗어나 개선된 요양원 모델에 대한 시장을 창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고령친화산업 육성

-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건강한 활동이 가능하고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특징이 있으며, 고령인구는 앞으로 총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인구계층으로 이들 자원을 활용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퇴 이후 연금개시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중소 규모의 기업이 다수 운영하고 있는 부산의 고령친화산업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고령친화 기업은 고령인구의 은퇴 후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일정 기간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노동 강도가 낮은 근로를 감당하면서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총인구의 44%에 육박할 수 있는 고령자들이 고령친화산업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4-3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연구책임 양원탁 · 연구진 김민영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에 따른 대규모 이전적지 발생

-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88년 북구 매천동 일대에 조성된 지방도매시장으로서, 대구권의 안정적인 농수산물 유통을 위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
- 2023년 3월 대구광역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 및 협소한 부지, 농수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달성군으로 이전을 결정
-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으로 도심과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대규모 이전적지가 발생하면서 활용 방향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고조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사례 검토 필요성

- 이전적지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발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우며, 이해관계자별 편의 차이로 사회적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필요
-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의 활용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이전적지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

II 연구의 주요 내용

이전적지의 개념과 특성

- 수익성과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전적지의 개념과 발생원인, 특성과 개발 용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분석 틀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이전적지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현황과 관련 계획 검토

-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주변 지역 현황과 대구시 및 대상지 일대 발전구상에 관한 주요 계획 및 정책을 조사하여 사례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함

국내외 이전적지 개발 사례분석

- 이론 및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분석의 틀을 마련하고, 츠키지 시장, 그랜빌 아일랜드, 안양평촌 스마트스퀘어의 개발 특성을 물리, 기능, 사회적 측면에서 고찰

합리적인 개발 방향을 위한 제언

- 현황과 계획 및 사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 개발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개발 여건 및 사례분석 결과

- 일본 츠키지 시장 이전적지는 글로벌 접근성(공항·여객터미널)과 도심부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제 비즈니스 교류 구역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 지역 차원의 부족한 기반시설 공급과 탄력적인 토지 활용(물리), 장소성을 고려한 소매기능의 유지와 민간 자원을 활용한 합리적인 개발 방식(기능), 충분한 정보공개와 체계적인 개발 방침 수립을 위한 검토회 운영(사회)의 특성이 나타남
- 캐나다 그랜빌 아일랜드는 업체 이탈로 인해 방치된 산업 공간에 지역 먹거리와 문화예술 중심의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보행친화적인 공공공간을 확보하여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편
 - 보행 친화적 공공공간 확충과 유보지 및 실험공간 확보(물리), 문화예술 중심 복합기능 도입과 지역 먹거리 접점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기능), 원주민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속성 확보와 전문성을 갖춘 협의체를 통한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도모(사회)의 특성
- 안양평촌 스마트스퀘어는 대규모 공장 이전적지에 산업단지의 체계적인 개발 수단을 도입하여 도시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 고도화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계획 수단을 활용한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 도모(물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업기능 고도화와 개발비용 충당을 위한 적정 수준의 주거 및 상업기능 도입(기능), 일관된 도시계획에 근거한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합의 도모(사회)의 특성

합리적인 개발 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 제언

- 물리적 차원에서 개발 편익이 도시민 전체로 이어지도록 풍부한 공공공간 확보, 지역 차원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 장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적정 규모의 유보지 확보 검토
 - 대구 도매시장 일대의 풍부한 생태·역사자원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시민 전체에 개방된 매력적인 공공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행 친화적인 동선 체계 구축 필요
 - 도시 편입과 주변 택지공급에 의한 난개발 가능성에 대응하여 해당 이전적지만이 아닌 매천동과 북구, 대구시 등의 지역적 차원에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검토
 -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의 일부 공간을 도시발전의 실험공간이 되는 유보지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도시 여건 및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 기능적 측면에서 입지 특성과 이전 비용을 고려한 복합용도 개발, 농수산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매시장 연계 기능 도입, 적정 도시계획 수단 및 개발 방식 확보 필요
 - 도매시장의 이전 비용과 이전적지의 접근성 및 지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수준에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능을 갖춘 복합용도 개발을 검토
 - 도매시장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민 접근성 감소 및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이전 도매시장과 연계한 기능 도입을 검토
 - 계획, 개발, 운영·관리 전 과정에 적절한 공공의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한 도시계획 수단을 확보하고 재정 여건과 사업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방식 필요
-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에 기반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상위계획과 정합성을 갖춘 개발 방향 검토가 필요
 - 대구 도매시장 이전적지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개발과정에서 절차적인 합리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필요
 - 대구시와 도매시장 이전적지 일대의 발전계획과 정합성을 갖춘 개발 방향을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회적인 합의를 도모할 필요

4-4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방안 연구



주제어 지방재정조정제도 | 보통교부세 | 보정수요

연구책임 홍근석 · 연구진 전영준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보통교부세 확보 여건 악화

- 경기 둔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와 중앙정부의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 기조로 인해 상대적으로 세수 여건이 양호한 인천광역시의 경우 보통교부세 확보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음
-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규모는 전체 광역시 중 울산광역시(9,960억 원) 다음으로 작은 규모(10,499억 원)임
- 보통교부세를 주민 1인당 값으로 환산할 경우, 인천광역시는 전체 광역시 중 가장 작은 규모(36만 원)를 나타냄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필요

- 인천광역시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인천광역시의 경우 교통관리비 수요 산정 시 항만 및 공항 관련 재정수요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II 연구의 주요 내용

보통교부세 현황분석

- 인천광역시 본청의 보통교부세는 2019년 5,960억 원에서 2023년 1조 499억 원으로 연평균 15.2% 증가함

- 다만 보통교부세 교부액 규모 측면에서는 인천광역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 즉, 인천광역시의 보통교부세 증가 속도는 다른 광역시보다 빠르지만, 규모는 다른 광역시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항만·공항 관련 재정수요 분석

- 항만·공항 관련 보정수요의 신설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본청 및 구·군의 항만·공항 관련 재정수요를 검토하였음
- 항만 관련 재정수요는 인천광역시 본청의 항만 관련 세출예산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음
 - 2023년 기준 인천항 관련 예산 1,201억 원 가운데 인천광역시가 888억 원(73.9%)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는 크게 소음 대책 지역 주민지원, 공항 관련 도로교통 개선, 공항 인근 지역 주민지원 및 환경개선 등으로 구분됨
 - 인천광역시 본청을 중심으로 공항 관련 세출예산의 재원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액 가운데 92.0%가 자체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항만·공항 관련 보정수요 산정 필요성

- 항만·공항의 편익은 전국적 또는 광역적으로 발생하고 항만·공항의 관리 주체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항만·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공항의 관리·운영에 대해 직·간접적인 책임성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항만·공항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만·공항 관련 재정수요를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상 “교통관리비는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관련 분야의 경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항만·공항 수요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항만·공항 관련 수요가 기초수요 중 교통관리비에 반영되기 어렵다면, 보정수요 항목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항만·공항 관련 보정수요 산정 방안

- 이 연구에서는 지역균형수요에 ‘항만·공항지역’ 측정항목을 신설하여 항만·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교통관리비 수요를 보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항만·공항의 화물 수송량을 보정수요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항만·공항의 화물 수송량(3개년도 평균값) × 단위당 평균 표준행정수요’를 보정수요에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함

- 신규 보정수요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은 시·도 70% 및 시·군·구 30%(시나리오 I)로 설정하거나, 특별·광역시 70% 및 자치구 30%와 도 30% 및 시·군 70%(시나리오 II)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함
- 항만과 공항의 화물 수송량 단위가 각각 운임톤과 톤으로 달라 항만 및 공항의 수요를 구분하여 단위당 평균 표준행정수요를 산출하였으며, 항만·공항 화물 수송량의 100% 또는 50%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항만·공항 관련 보정수요 산정 효과

- 시나리오 I과 II 모두에서 ‘합계(광역+기초)’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의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산정액의 증가 규모(‘합계’ 기준)는 시나리오 II-A, I-A, II-B, I-B, II-C, I-C의 순으로 크게 나타남
- 항만·공항 관련 보정수요를 산정한 결과 인천광역시의 보통교부세는 ‘합계’를 기준으로 기존 대비 최소 16,254백만 원(시나리오 I-C)에서 최대 66,150백만 원(시나리오 II-A)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4-5

광주광역시 디지털 전환 혁신 방안



주제어 디지털 혁신 | 업무자동화(RPA) | 디지털 전환

연구책임 이재용 • 연구진 이경은, 김수동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전환/혁신을 위한 실천적 노력 필요

- 디지털 전환은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디지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업무 수행 방식에 변화를 주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등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 혁신을 추진 중임
- 자치단체의 디지털 전환/혁신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의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됨

II 연구의 주요 내용

정부의 디지털 정책 방향 분석

- 디지털 플랫폼 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정책 방향을 검토함
 - 정책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정부 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AI·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체계 구축 등의 세부 사업을 검토함

디지털 혁신 사례 분석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본원칙 기반으로 분석기준을 도출하여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함
 - 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사례의 시민중심, 일하는 방식의 혁신, 인공지능 및 지역 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 여부를 다각적으로 분석함

디지털 혁신 사례 분석기준		
분석기준	전략 (구성요인)	주요내용
시민중심	선제적 서비스 제공 (적극성)	선제적 공공서비스 통합 제공 (서비스창구 일원화 등)
	행정 세부내역 공개 (투명성)	투명하고 신뢰받는 디지털 전환 추진 (행정 세부내역 공개 등)
	디지털 접근성 제고 (편의성)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 (통합업무 플랫폼 구축, 기기 접근성 제고 등)
	데이터 활용 (혁신성)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	부서 간 칸막이 해소 및 데이터 공유	관련 조례 및 규정 개정, 데이터 공유
	행정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및 효율적 업무방식	종이 없는 행정, 디지털 전환, AI 중심, 자동화 기술 도입 등
인공지능 및 지역 데이터 기반	개인정보 유통 활성화	개인정보 암호화 및 개방형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보안 모니터링
민관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	민관협력 생태계 구축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GovTech 기업 지원
	디지털 전환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디지털 기술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편의 증진

업무자동화 사례 분석

- 업무자동화의 도입 적정성 및 효과를 고려하여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함
 - 자치단체 업무자동화 사례의 적합성, 활용도, 효과성 여부를 분석함

RPA 분석 (자동화 적합성)		내용	여부
적합성	정형적 데이터 여부	단순·반복 업무(정형적 데이터)인가?	O/X
	업무 특성 여부	즉시성·신속성·정확성이 요구되는 업무인가?	O/X
활용도	전산화 여부	시스템 또는 웹 정보에 연결되는 업무인가?	O/X
	전 부서 공유·확산	전 부서에서 공유 및 확산이 가능한 업무인가?	O/X
효과성	인적오류 발생 여부	인적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인가?	O/X
	타 시·도 업무 개선 효과 검증	광주시에 적용이 가능하며 업무 개선 효과가 검증된 업무인가?	O/X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디지털 전환 방안

- 도시 정보와 시민 수요를 밀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

- 시민 수요형 대민 서비스의 개발 및 교통과 연계된 스마트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전환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보장과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보다 시민중심적인 디지털 전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업무자동화 방안

- 업무자동화의 도입 및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
 - 수요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시범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도입이 필요함
 -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 및 변동사항 등에 대한 시스템의 수정·보완이 필요함
 - 업무자동화의 성과 공유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및 사례 확산이 필요함

4-6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경제

연구책임 정기용 · 연구진 주희진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피해 증가

- 대청호의 수자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제한은 필수적이지만 대청호 유역 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가 제한되어 재산권을 침해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음
 - 1980년 11월 「수도법」에 따라 대청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중 대청호의 상수원보호구역이 가장 넓으며(178.98km²), 1990년 7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상수원보호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동시에 지정됨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적용으로 상수원관리규칙에 허용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된 시설물 외에는 모든 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 및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며, 전체면적의 96.5%(61.26km²)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동의 경제적 피해액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약 4,300억 원으로 추정됨

현행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내 대청호 유역 주민의 소득증대 방안 발굴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대청호 인근 주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지역소멸을 방지하는 등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청동 주민의 소득사업 발굴이 필요한 상황임
 -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 개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규제사항을 상충할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주민 소득증대 방안 마련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여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제시하기 위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발굴을 위한 대청동 SWOT 분석

외부요인		내부요인	강점(S) • 대전시와 높은 접근성 • 대전 인구 및 산업체 활용 가능성 • 자연환경 유지 • 관광자원 보유 • 유휴자산 활용 가능성 • 농업 경험 및 지식	약점(W) •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 인구 고령화 • 지역소멸 위기 • 지목 현황
		기회(O) • 환경정비구역 지정 •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관광 활성화 • 도시농업 관심 증가 • 새로운 인구개념을 활용한 사업	S-O 전략 • 대전시와의 접근성, 많은 인구 및 산업체를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전략 •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로 유휴자산을 활용한 주민-농업-농작물 연계 전략 • 소규모 카페·음식점 확대 전략	W-O 전략 •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 지목현황 및 인구 고령화를 반영한 신기술 농사기법 확대 전략 • 기존 주택 신축 증축을 통한 신규 인구 유입 증가 발굴전략
예시 • 도시농업(친환경 주말농장, 치유농업, 양봉장 등) • 로컬푸드 사업(농민 장터, 로컬푸드 직매장)	예시 • 스마트팜(시설원예) • 레지던시 프로그램, 한 달 살기 등 단지 조성			
위협(T) • 외지인 유입 증가로 환경오염, 갈등,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 타 관광사업 영향	S-T 전략 • 타 관광사업과 차별화된 자연환경 유지 관광상품 개발전략		W-T 전략 • 인구 고령화 고려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전략	
	예시 • 대청호 역사, 문화자원, 생태, 환경을 활용한 그린 투어리즘		예시 • 마을기업	

대청동 주민 인식조사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 사업 도출

- 대청동 주민의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을 반영한 소득증대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첫 번째 소득증대 사업 유형은 주민의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모두 높은 사업으로 농민 장터, 친환경 주말농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구성함
 - 두 번째 소득증대 사업 유형은 주민의 선호도는 낮지만 현실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치유농업 및 힐링팜, 스마트팜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구성함

- 세 번째 소득증대 사업 유형은 주민의 선호도는 높지만 현실가능성이 낮은 사업으로 자연관광 마을 및 예술마을과 함께, 기타 의견에서 제시된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기관 유치, 타 지자체와 교류 업무협약, 캠핑장 및 민박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현실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사업으로 구성함
- 네 번째 소득증대 사업 유형은 주민의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모두 낮은 사업으로 양봉 및 양봉체험, 마을기업으로 구성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대청동 주민 소득증대 사업추진 방안

- 도출된 소득증대 사업은 대청동의 지리적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특수성 강조와 함께 대전광역시 동구-주민 간 역량 결합이 필요함
 - 주민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높은 농민 장터, 친환경 주말농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는 유희공간을 활용한 판매 공간 지원과 친환경 주말농장 홍보 강화 및 적정 비용을 산정해야 함
 - 주민 선호도는 낮지만 현실가능성이 높은 치유농업 및 힐링팜, 스마트팜을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는 새로운 사업추진에 필요한 교육 및 경제적 지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주민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 선호도는 높지만 현실가능성이 낮은 자연관광 마을 및 예술마을 조성,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는 각종 제도 정비와 타 지자체와 협력이 추진하며, 주민은 관광객 증가에 따른 규제 준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주민 선호도와 현실가능성이 모두 낮은 양봉 및 양봉체험, 마을기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다양한 주민자치 및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참여 공모사업을 활성화하여 마을기업 형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대청동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대책 필요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거주인구와 외부인구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적절하게 제한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함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토지이용 및 행위제한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
 -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고도시설의 설치와 하수관로 확충을 통해 대청호의 수질환경을 보존하면서 생활환경의 변화 및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인구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4-7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경기도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주제어 지역발전

연구책임 여효성 · 연구진 이원도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테마형 임대주택의 필요성

- 경기도 테마형 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 테마형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장기간의 안정적 거주, 공공임대 장점과 입주자 맞춤형 주거 및 공유공간이라는 민간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 또한, 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주택공급 유형의 다변화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주택 정책의 일환임
 - 경기도는 사회주택을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운영하는 등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운영 테마가 있는 신축매입 약정 방식의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2026년도까지 사회주택 8,550호 공급 추진)

II 연구의 주요 내용

- 사회주택의 운영관리업무 구체화
 -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관리소홀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주택 관리·운영 및 점검계획의 구체성과 이행가능성 평가가 필요
 - 임대차 계약에서 입주주민 보증금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사고 대비 방안 마련이 필요

-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과제
 - 사업자 선정까지 걸리는 소요 기간으로 인한 토지매매 계획의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
 - 또한, 테마/프로그램과 관련된 커뮤니티 시설 설치가 필요하나, 감정평가가 낮게 산정되어 사업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 취약계층 주거안정 지원정책
 - 주택 매매가격 상승으로 주거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완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경기도는 특히 주택 매매가격 지수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므로, 권역별 배분과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
- 매입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 사업 추진 시 토지매매 계획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업심사 및 산정에 걸리는 시간 최소화를 고려
 - 구체적인 운영관리업무를 통한 관리 소홀방지 노력이 필요

4-8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주제어 인구감소 | 지역발전

연구책임 이원도 • 연구진 윤소연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 인구감소 위기: 총인구 감소와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의 심화

-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생활인구 개념을 통한 인구감소 대응전략
 - 중앙정부가 관리·감독을 통한 국가적 인구정책에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인구전략으로의 전환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 및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대안적 인구개념인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를 도입하였음
 - 이는 방문자 및 단·장기 체류인구 증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단기적인 성장동력 회복할 수 있음
 - 하지만 생활인구를 구성하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등록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 인구의 월별 산정결과는 24년도부터 제공될 예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선 주민등록인구와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인구와 유사한 높은 시공간 해상도의 인구 현황 및 특성분석을 통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인구의 정책적 활용도를 살펴보았음

II 연구의 주요 내용

강원 주민등록인구 및 생활인구의 현황 분석

- 강원 주민등록인구 현황 및 공간적 분포
 - 강원도의 최근 5년간 주민등록인구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청년순유출과 고령화율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소지역(격자 단위) 현황을 통해 살펴보면, 주요 도시(예: 원주, 춘천, 강릉 등)에 집중된 주민등록인구는 도시 내에서도 특정 지점에 매우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 강원 생활인구의 현황 및 공간적 분포

- 본 연구에선 일주일간(2023.07.03.~09.) 수집된 이동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연구지역인 원주, 강릉, 양양의 외지인 체류인구와 외국인 인구의 현황과 시공간적 패턴을 탐색하였음
- 탐색적 분석에선 1) 생활인구 유형별로 어디에서 와서 어느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지, 2) 시공간적으로 얼마나 규모와 특성에서 차이가 확인되는지, 그리고 3) 주로 어느 지역에 체류하는 지를 살펴보았음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강원 생활인구의 특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외지인 체류인구의 지역별 분포 특성

- 원주는 외지인 체류인구의 규모와 시간대별 변동 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며, 주말에 방문하는 비중이 적음
- 강릉은 고정적으로 많은 외지인 체류인구가 고른 시간대에 지역에 방문·체류하고 있으며, 숙박하는 외지인 체류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양양은 주민등록인구는 적으나 원주, 강릉과 비슷한 규모의 외지인 체류인구가 방문하며, 특히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말에 방문하는 외지인 체류인구가 많음

• 단기체류와 장기거주 외국인의 지역별 분포 특성

- 강릉의 일주일 누적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자는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광특구와 서울-양양 고속도로, 강릉선 KTX 운행과 같이 교통접근성 향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됨
- 원주의 일주일 누적 장기거주 외국인은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등록외국인 인구현황과 부합하는 특성이며, 중국 국적 소지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빅데이터의 장점 및 한계점

- 이동통신 데이터를 통해 작성한 유동인구 데이터는 생활인구와 유사하게 특정 시점에 지역을 방문·체류인구의 현황 및 규모 측정에 유용하며, 특히 출발지(주민등록지 기준)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하지만 규모(양적정보)와 달리 방문·체류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및 방문목적(질적정보)의 습득이 어려움에 따라 이종데이터의 가명결합 등 활용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4-9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주제어 소방

연구책임 윤소연 · 연구진 이원도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의 소방활동 여건을 고려한 소방기관의 효율적 설치·운영 필요

- 소방기관 설치·운영 기준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소방서비스 제공의 불균형 발생
 - 현행법상 소방기관(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등) 설치는 인구·면적 등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일부 현장에서는 소방서비스 지연·공백 및 지역별 업무량 격차 등의 문제 발생
- 한정된 소방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별 실질적인 소방활동 여건(사고발생 현황, 소요시간, 업무량 등)에 대한 고려 필요
 - 효율적인 소방력 운영을 위해서는 소방기관 신설·재배치·통폐합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지역의 실질적인 소방활동 여건을 고려한 소방기관의 효율적 설치·운영 필요

II 연구의 주요 내용

충청북도 소방활동 현황 분석

- 충청북도 소방기관별 일반현황 비교·분석
 - 충청북도 소방기관의 조직·인력 현황, 관할구역별 면적·인구·소방대상물 현황 등 조사·분석
- 충청북도 소방기관별 소방활동(화재·구조·구급) 비교·분석
 - 충청북도 소방기관의 화재·구조·구급사고 출동 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기관별 소방활동(발생건수, 건당 동원인력, 현장 출동소요시간, 평균 이동거리 등) 비교·분석

충청북도 소방서비스 제공 범위 분석

-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의 소요시간별 예상 출동 범위 분석
 - 충청북도 소방서별 출동소요시간에 따른 도달 가능지역 분석(차량 이동시간 적용)
 -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의 소요시간별 예상 출동 면적 및 인구 비율 분석
- 소방활동자료 기반 골든아워 초과지점 분석
 - 충청북도 화재·구조·구급활동 자료를 기반으로 골든아워를 초과한 사고 지점에 대한 공간분석 수행
 - 읍·면·동별로 활동유형별·연도별 출동소요시간 초과 사고 건수 비교

소방활동 분석 기반의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충청북도 내 추가 또는 분리신설·재배치·통폐합 등의 개선 필요 지역 파악
 - 소방활동 분석 결과(업무량·접근성) 기반 유형화
 - 충청북도 소방기관별 업무량·접근성 비교·분석 및 효율화 방안 제시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역의 소방활동 여건을 반영하여 소방기관 설치·운영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 본 연구는 충청북도 내 소방기관의 소방활동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을 제시함
 - 충청북도 내 소방기관의 소방활동 현황 및 특성을,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살펴보고, 효율적인 소방기관 설치·운영(신설·이전·통폐합 등)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기준으로 업무량과 접근성의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하여 충청북도 소방기관을 진단함
- 본 연구결과는 향후 충청북도 소방기관의 신설·이전·통폐합 등 중·장기적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가능함
 - 또한, 소방활동 기반의 대책 수립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방활동 지연·공백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지역별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10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경제·일자리 | 관계인구

연구책임 김민영 · 연구진 윤소연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내부 행위자와 자원만으로 한계

- 수도권 스타트업 생태계와 지방 스타트업 생태계 간 정보 및 네트워크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그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전북특별자치도 스타트업 생태계 내부 행위자와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한계 극복을 위한 관계인구 개념 활용 방안 마련 필요

-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II 연구의 주요 내용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분석

- 지역 내 민간 창업 지원조직이 부족하고 기술기반업종 창업이 저조하나, 최근 기업가적 역량이 향상되고 창업기업 생존율이 개선되는 등 강점을 보유함
- 경제 여건 악화로 창업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창업지원에 대한 전북의 관심이 높고 전북 내 연구개발 역량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창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 조사

- 중앙정부는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방향성을 갖고 창업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 전북도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추어 TIPS 운용사 유치,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민간 중심 창업정책 자문단 운영 등 민간 주도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처럼 사업화나 자금 지원을 중심으로 창업정책이 추진되는 동시에, ‘글로벌 벤처창업 엑셀러레이팅 지원’, ‘d·camp와 함께하는 리모트워크 #전북’과 같이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한계 극복을 위해 외부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관계인구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사례 분석

- 관계인구 활용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유사사례인 ‘일본 도쿄도 NEXs Tokyo의 연계사업창출 프로그램’, ‘일본 효고현 고베시의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을 조사함
- 일본 도쿄도 NEXs Tokyo의 연계사업창출 프로그램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간 관계 형성 및 발전과 관련된 사업임
 - 관계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상주직원의 전문성이 높고 관계 형성을 위해 비교적 장기간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 일본 효고현 고베시의 스타트업 입지 촉진 사업은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 창업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임
 - 광역 지자체(효고현)와 재원을 분담한다는 점,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육성산업을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발한다는 점, 고베시에서 기업 진출을 돕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업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할 수 있음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관계 형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 제안

-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관점에서 ‘관계인구’는 지역과 관련된 외부 창업자, 창업기업부터 외부 투자기관, 지원조직까지 포함함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형성을 위해 중개자 역할을 하며, 내·외부 행위자 간 수요를 매칭하고, 시간, 자금, 법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역할은 외부에 있는 창업자, 창업기업, 투자기관, 지원조직 등과 관계를 맺고 이들이 지역으로 유입되도록 지원하는 것임

관계 수준에 따른 정책대상 세분화

- 관계 수준에 따라 ‘무관계 스타트업’, ‘무관계·유관심 스타트업’, ‘유관계·무관심 스타트업’, ‘이전 스타트업’ 등으로 정책 대상을 세분화함

표 | 관계 수준에 따른 정책대상 세분화

정책대상	특성	예시
무관계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과 관계가 없는 스타트업 • 전북 지역에 관심이 적은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지역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전북과 관계가 없는 경우
무관계·유관심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지역에 관심이 있는 스타트업 • 전북과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내 거래처를 탐색하고 있는 경우 • 스타트업이 전북 기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경우
유관계·무관심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에 전북과 관계가 있었으나 관심이 줄어든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내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경우 • 이전에 전북에서 활동하던 스타트업이 현재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이전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기회를 찾아 전북으로 이전하려는 스타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에서 사업을 확대하려는 경우 • 전북에서 성장한 스타트업이 외부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다가 다시 전북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계별 추진방안 제안

- 1단계는 ‘스타트업 관계 수준 파악’, 2단계는 ‘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3단계는 ‘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4단계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5단계는 ‘관계 안정화를 위한 지속 성장 지원’ 순으로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안함

4-11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대책



주제어 지방자치 | 지방행정

연구책임 유자영 • 연구진 이경은, 안혜경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

-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의 맥락에서 더욱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과거에 비하여 지역 간 인구이동의 절대적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인구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이동 양상의 차이가 존재함

경남 20대 청년인구 감소 및 유출 심화

- 경남 주력산업 침체로 인한 청년인구 유출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교육과 직업 요인으로 지속적 청년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세분화된 연령대별 청년인구 유출 원인 탐색이 요구됨

II 연구의 주요 내용

경남 20대 세부 연령에 따른 유출 원인 탐색

- 경남 20대 청년인구 변화 추이를 연령별, 성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탐색함
 - 여성 비중 감소 폭이 남성에 비해 더 크며, 특히 20~24세보다는 25~29세 인구의 전국 대비 경남 비중 감소 폭이 성별과 관계없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경남 20대 청년인구는 서울로의 유출이 가장 크나,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2019년 이후부터 부산으로의 유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임

- 경남의 청년들은 가족요인으로 인해 경남으로 유입되고, 교육과 직업 등을 이유로 경남을 떠남

경남 20대 청년의 출도 원인

- 교육, 일자리, 문화, 여가, 교통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교차하여 경남의 열악한 정주환경을 구성하고 있음
 - 다양한 원인이 결국 청년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는 기제로 작동하여 20대 초반에 경남을 떠나게 되며, 이는 단순히 특정 시기를 서울 및 수도권에서 보내고자 하는 결정이라기 보다 이후 전반적인 삶에 대한 선택으로 판단됨

경남 20대 청년의 귀환가능성

- 경남 출도 청년의 귀환가능성에 대해서는 3가지 조사 방법 중 경남 출신 서울 소재 대학생 10명의 의견과 경남 거주 청년 2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을 취합하여 분석함
 - 현재 경남을 떠난 학생들의 귀환가능성에 대하여 서울 소재 대학생 10명 대상 면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경남으로의 귀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응답함
 - 이에 대한 원인을 크게 청소년 시절 교육·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결핍, 전공 적합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미래 설계의 제약, 기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경남 거주청년의 만족도 및 정주가능성

- 경남도 거주 20대 청년 234명(만19~ 28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현재 경남에서 거주 중인 청년들의 경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경남의 교육 및 일자리 만족도, 경남에서의 정주 가능성 등의 항목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 만약, 관외 지역으로 이주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귀환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청년의 미래 설계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경남 거주 20대 청년에게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상이한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교육-일자리 분야

- 지역 내 교육과 일자리를 분리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교육기관과 지역 내 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함
- 청년창업, 특히 지방의 창농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마련함

경남 어메니티 분야

- 생활환경 조성 및 생계지원, 문화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보, 지역 문화 개선, 경남 거주 20대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전반적인 삶의 조건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4-12

제주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툴(tool) 개발



주제어 지역발전 | 지역경제·일자리 | 인구감소대응

연구책임 전대욱 · 연구진 김해솔

1. 기본연구과제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4. 정책이슈리포트

5. 자체연구과제

6. 지원연구과제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주 지역의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정책을 위한 분석툴 필요

-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의 수요가 많지만 이에 대한 유치 여부의 판단은 어려움
 -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의 지역경제 효과는 크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간 제주 지역에서 단일 이벤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존재
 - 이러한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툴을 개발함으로써, 제주 지역에서의 이벤트 유치 정책의 의사결정 및 지원이 시급함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툴 개발

- 본 연구는 대회·훈련 규모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의 신속한 계산을 위한 툴을 개발
 - 향후 개별 이벤트의 유치에 따른 효과분석을 손쉽게 파악함으로써 제주도의 스포츠 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행·재정적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제주 스포츠 대회·전지훈련 현황 및 정책 분석

- 제주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최근 동향 및 현황 분석
 -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참가국·지역, 규모·방문객, 종목, 시기 등 최근 동향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등 제주도 지원정책의 현황 및 행·재정적 지원현황 분석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

-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특성에 따른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 유형 구분
 - 지출구조 및 행태, 동반자 참석 여부 등 특성요인에 따른 이벤트 구분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치는 범위·규모에 따른 이벤트 유형 분석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이론적 접근

-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모형 리뷰
 -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모형에 관한 이론 및 지역산업연관분석에 의한 추정방법 리뷰
 - 제주지역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의 파급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주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의 파급효과 신속계산 툴 개발

- 제주지역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의 계산 툴 개발을 위한 입력값 추정
 - 지역산업연관분석표 투입계수 및 이벤트 지출구조·행태 사례분석 등 모수 추정값 도출
- 신속한 파급효과 계산을 위한 스프레드시트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
 - 이벤트 유형 및 규모, 참가대상·연령, 기준값과 다른 1일 1인당 지출행태 등을 입력하는 경우 해당 이벤트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속 계산하는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예시·사용방법 제시
 -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의 지출에 따른 관련 산업전후방 연쇄효과로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을 산출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스포츠 이벤트의 신속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계산 및 관련 정책 지원

-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의 유치와 관련 행·재정적 지원의 손쉬운 효과분석 툴 제공
 - 스포츠 이벤트 유치와 관련된 증거기반 행정을 위한 분석 툴 보급 및 관련 자료 축적
 - 향후 중장기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등

자체연구과제

기획조정실

- 1)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 153
- 유수동, 최지민, 이서희, 윤소연, 강희승, 문혜리

자치분권제도실

- 2)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기초 연구 156
- 주희진, 최인수, 전대욱, 박재희

지방행정혁신실

- 3) 디지털 기반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및 실효성 향상 방안 연구 161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 이재용, 강영주, 김지수, 이경은, 김수동

지방재정경제실

- 4) 지자체 기반의 지역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 164
- 이서희, 전성만, 유보람, 전영준

지역균형발전실

-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 - 지방소멸대응전략 167
- 이소영, 이제연, 김도형, 양원탁, 윤준호, 최민정
-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170
- 양원탁, 이소영, 김도형, 김민영, 김진언, 김나현

★ 핵심과제

5-1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



주제어 지속가능발전 | 지방분권 | 지역발전

연구책임 유수동 • 연구진 최지민, 이서희, 윤소연, 강희승, 문혜리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급격한 사회·기술·경제·정치적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능동적·미래지향적 대응을 통한 문제해결 중심적 사고와 행동 요구 증대
 -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세와 방향을 예측하여 여러 가지 대응전략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
 - 과거와는 다른 문제해결방식이 요구되며, 미래예측과 그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래예측은 선택이 아닌 필수

- 미래예측에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의 열쇠가 있음
 - 선호하는 미래와 다양한 대안적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노력이 필요함
-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를 분석하고, 트렌드별 미래 방향성을 제시함
 -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의 바람직한 미래모습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
 - 지방행정의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여 미래환경변화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및 거시적 환경분석

-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 국제사회의 큰 흐름과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칠 요소 파악
- STEEP 분석을 통한 글로벌 메가트렌드 요인별 구체화
 - 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정치적 요인 도출 및 미래사회의 시대적 요구 제시
- 퓨처스 휠 기법을 활용한 미래사회 핵심 동인 도출
 - 미래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상호 연관관계 분석
 - 사회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미래사회 핵심 동인 분석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 LDA 토픽 모델링을 통한 미래사회 주요 이슈 발굴
 - 미래사회 핵심 동인에 관한 토픽 및 키워드, 토픽 비중 분석
 - 미래사회 주요 이슈 도출 및 구체화(개념화)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도출
 - 영역별 전문가 대상으로 2차 라운드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안) 도출
 - 트렌드별 중복성 및 한국적 맥락 검토,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확정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와 정책방향

-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강화
 - 전략적·장기적 관점의 계획수립·추진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협업 활성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기술 적극 활용 등
- (지역인재와 지역일자리) 지역 특색을 반영한 인재 육성 재구조화
 - 특성화 산업 선정 기획단계부터 유관 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 취업-교육 연계성 확보, 지역혁신을 위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안전관리 및 재난위기 대응) 재난·안전관리 회복력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 장기적 방향에서 사회·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난·안전관리 접근방식 유도, 민간·지역사회 촉진 및 협력 거버넌스 구축, 신기술 적극 도입·활용을 통한 재난관리 역량 강화 등
- (지역 보건·의료와 시민건강) 보건의료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대
 - 인간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불평등 완화, 의료기술 혁신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정책 마련,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력양성 정책의 체계적 추진 등

- (자치역량과 책임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수평적 관계 재설정, 기능별 초광역화, 맞춤형 분권 추진을 위한 차등적 분권방식 논의 활성화, 주민 중심 소규모 지역기반 자치 확대 등
- (디지털혁신 생태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행정의 문제해결력 강화
 - 온라인 플랫폼 형식의 활동 분야 매칭을 통한 시민사회 공간 창출, 지역 단위 다양한 사안의 지방의회 의제화, 시민 참여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 (교육자치와 교육혁신) 교육 수요를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미래교육의 세부적 사업 설정 및 명확한 재원 산출 근거 도출, 중장기적 관점의 교육재정 구조 개편 논의 활성화 등
-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균형 잡힌 지역성장 생태계 조성
 - 자원환경 및 사회·경제적 측면의 균형,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전환, 지역의 녹색경제 생태계 강화, 지역 수준의 역할 강조, 국가-지역 수준 간 연계 강화 등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방행정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

-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더욱 발전된 사회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혁신적인 접근방법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함
- 장기적 관점의 정책결정,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의사결정역량과 문제해결역량 제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기존 미래연구의 한계 극복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현실 가능성과 체감도 제고
 -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미래 트렌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국가 전체 차원의 분야별 트렌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함
 - 기존 미래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핵심적인 논의 수준을 지방행정 분야로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구체적이며,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지방행정의 현재를 더 잘 이해하고, 미래전망에 대한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프레임워크 제공

5-2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기초 연구



주제어 법령총조사 | 생성형 AI 모델 | 자동화모델구축

연구책임 주희진 • 연구진 최인수, 전대욱, 박재희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가-지방 사무배분 및 사무수행체계 현황 파악을 위한 노력 지속

-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국가-지방 사무 배분 및 사무수행체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중심으로 1994년부터 약 5년 단위로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진행해 왔음
- 그러나 기존의 방식은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과도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입, 조사 결과의 일관성·신뢰성에 대한 비판 우려 등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모델 개발을 통한 「법령상 사무총조사」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 데이터 기반 행정의 대두와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정 기조 하에 본 연구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령사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생성형 AI 전문기관을 통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모델을 개발 및 향후 생성형 AI를 활용한 법령상 사무총조사의 수행 가능성 등의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인공지능을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모델은 사무판단모델과 사무유형모델로 구분됨

- 법령에서 개별 조항이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무판단모델(AI Model 1)은 94.9%의 재현율을 달성함
 - 사무판단 모델(AI Model 1)은 Transformer Encoder을 활용한 2-layer 신경망 모델을 적용함
- 법령상 사무가 어떤 유형(국가, 지방, 공동사무)인지를 판단하는 사무유형모델(AI Model 2)은 81%의 정확도를 보임
 - 사무유형 모델(AI Model 2)은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RF) 모델과 Transformer Encoder+2-layer neural network 모델을 결합한 앙상블 모델을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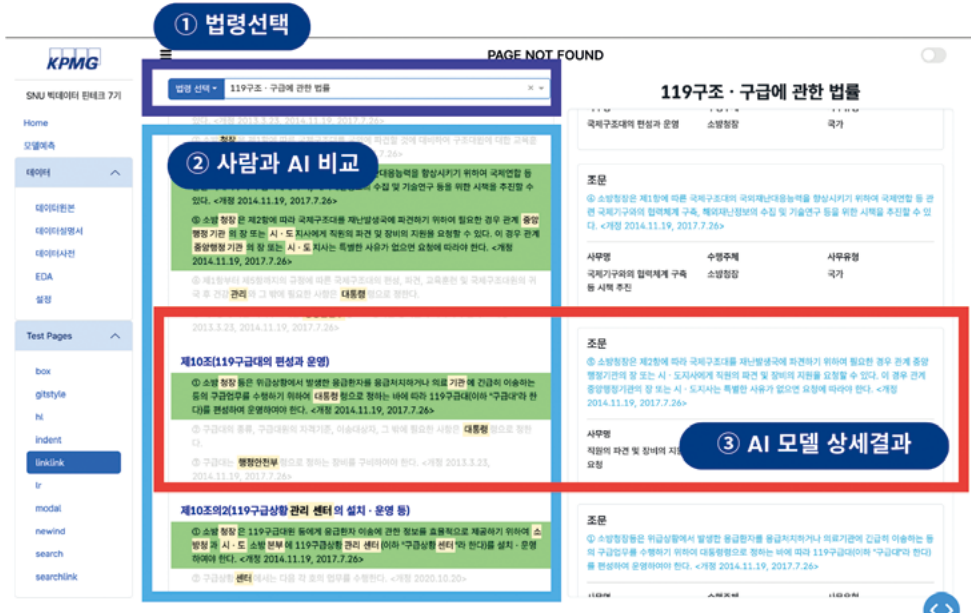
그림 | 2022년 법령에 대한 인공지능의 사무판단 및 사무유형 추출 결과(예시)

법령명	조문제목	조문	사무판단	사무유형(대분류)	rule-based	사무판단예측	사무판단배속률	수행주체	사무유형(대분류)결과	대사무판	국가판	지방판	공동판	need_to_check
0	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총칙	0	0	0.0	0	0.00439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	0	0	0.0	0	0.59747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	0	0	0.0	0	0.07633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3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1항 제1호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0	0	0.0	0	0.02239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4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 제1항 제1호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파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0	0	0.0	0	0.26156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848067	수도법 시행규칙	기술인단 결과의 평가	0	0	0.0	0	0.00781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848068	수도법 시행규칙	기술인단 결과의 평가	0	0	0.0	0	0.00247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848069	수도법 시행규칙	규제의 재검토	0	0	1.0	1	0.61423	[장관, 환경부]	0.79397	0.0893	0.05175	0.06098	0	
848070	수도법 시행규칙	규제의 재검토	0	0	0.0	0	0.02749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848071	수도법 시행규칙	규제의 재검토	0	0	0.0	0	0.00429	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	

848072 rows x 15 columns

- AI 모델의 결과 제공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시보드(샘플)를 제시함
 - 사용자가 원하는 법령을 선택하면, 해당 법령의 모든 조문에 대하여 사람(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결과치와 AI에 의한 결과치가 색깔로 제시됨
 - 동시에 왼쪽의 상세결과로서 AI 모델이 해당 조문에 대한 사무판단 여부 및 예측 확률, 사무명, 수행주체, 사무유형 등의 세부 정보를 제시함

| 그림 | 대시보드의 전체 구성



| 그림 | AI모델의 상세결과

사무 유형	확률				AI 판단	사무명	수행 주체	실제 정답
	비사무	국가	지방	공동				
국가	0.2	0.6	0.1	0.1	확실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소방청장 시도 중앙행정기관	국가

「2022년 법령사무조사」에 대한 자동화 모델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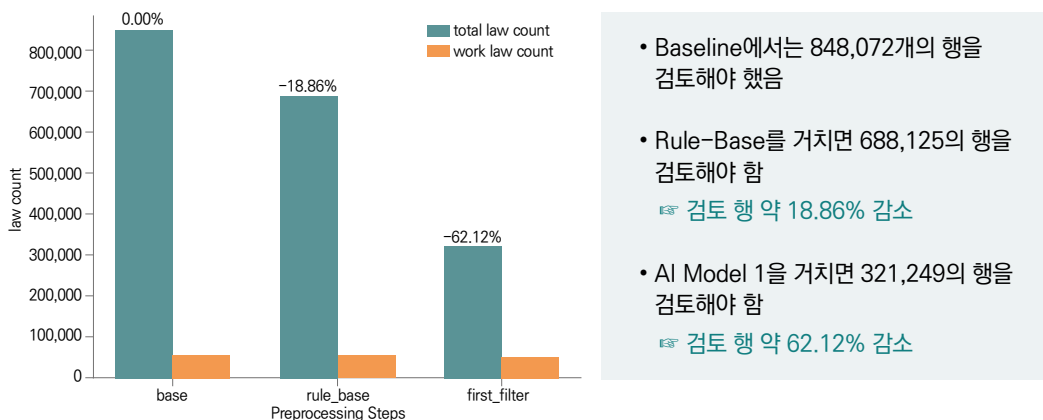
-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모델을 적용하여 「2022년 법령사무조사」에 대한 오류를 검증한 결과 전체 조문 행(844,220개) 중 14,546개의 오류 데이터를 추출함
 - 인공지능이 오류 데이터로 추출한 데이터(14,546개, 100%) 중 인간의 입력 오류에 의한 오류는 79개로 약 0.5%에 불과한 반면, AI 학습 미흡 등의 이유로 추출된 데이터 오류는 14,467개로 약 9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오류는 본 연구가 자동화 모델 개발의 초기이기 때문에 향후 보다 면밀한 수준의 모델 개발 및 지속적인 딥러닝을 통해 보정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기대효과

- 「2022년 법령상 사무총조사」의 경우 2022년 5월을 기준으로 시행 중인 법령 4,339개의 법령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직접 판단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음
 - 각 법령의 모든 조문을 엑셀파일에 크롤링한 결과, 전체 엑셀의 행 수는 84만여 개로 각 조문의 조, 항, 호 모두에 대한 판단이 투입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방대하게 많은 연구진의 노력이 투입되어야만 하였음
- 그러나 자동화 모델의 적용을 통하여 1차적인 rule-based의 단계를 통하여 약 19%의 법령 데이터는 판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rule-based 규칙은 무조건 비사무로 판단될 수 있는 35개의 원칙을 인공지능이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는 조문을 1차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임
 - 이를 통하여 당초 검토해야 할 전체 행 848,072개 중 18.9%의 행이 원천적으로 제기되어 688,125개의 행이 검토대상 행으로 추출될 수 있음
- 또한 사무판단 모델(AI Model 1)을 통하여 인공지능이 확실하게 비사무인 사무만을 제거하면 검토 행의 약 62.1%가 감소한 321,249개의 행만 검토가 필요한 행으로 추출됨

| 그림 | 자동화 모델의 성능지표- 모델 적용에 따른 검토 행의 감소 규모



정책적 제언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구현을 위한 법령상 사무 및 사무배분 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모델을 구축·적용 가능성 모색 필요

- 자동화 모델의 구축·적용을 통하여 사람(연구진)의 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법·행정·사회적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자동화 모델을 통한 결과 검증 등을 통하여 그동안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사무총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문제 역시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복잡한 판단에 대한 로직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1차적으로 연구진이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자동화 모델을 거치는 2차 검증의 역할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동화 모델에서 기능 중심의 키워드 추출 방식의 도입을 통하여 타 분야에의 적용 확대 가능성 모색 필요
 - 사무는 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 승인이 필요한 사무의 추출 등 ‘행정절차’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무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한다면 이와 관련한 타 분야까지 확대하여 적용·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법령뿐만 아니라 조례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등의 실태뿐만 아니라 자치사무 등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법령상 사무총조사를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필요
 - 프로그램 개발자의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은 법령상의 사무를 AI가 정확하게 포착하는 로직 개발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 광범위한 법령 데이터를 구축·관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법령의 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제정과 개정을 반복하는 법령의 특성상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령 데이터를 전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임

5-3

디지털 기반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및 실효성 향상 방안 연구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주제어 디지털 혁신 | 지역 재난안전관리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업

연구책임 이재용 · 연구진 강영주, 김지수, 이경은, 김수동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상시적인 안전관리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시설물의 노후화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업무의 증가 및 안전 문제 발생과 관련됨
- 국내 시설물 점검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노후 시설물의 증가로 인해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 변화하는 재난환경 및 새로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예측과 예방 중심의 상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II 연구의 주요 내용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제도 분석

- 노후시설물, 시설물 관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수조사하여 안전관리 차원에서의 시설물 관련 법·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함
- 해당 법률 유관부처의 속성, 법률의 목적 및 성격, 안전 및 시설물 관리 사항의 비중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노후 시설물과 관련한 높은 수준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 이외 별도의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의 기준 수립 필요성을 고려할 때 주관 부처로 행정안전부가 적합함

행정안전부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업 실효성 분석

-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시설물의 진동, 기울기, 균열 데이터의 실효성을 분석함(6개 자치단체, 63개 지점(시설물), 146개 센서 대상)
 - 건축물·구조물의 정적 및 동적선형분석 관점에서 수집 데이터는 유지·보수 및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지표임을 확인함
 - 사업 수행 자치단체의 시스템 구축 대상 시설물 현황 분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시설물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 향후 기울기, 진동, 균열 측정 자료의 신뢰성 향상 방안 도출이 필요함
 - 측정 자료를 활용한 균열 예측 방안 마련 및 재난안전 관련 플랫폼(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함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지방자치단체 수요 분석

- 현장 수요 파악 및 실효성 개선 방안 제시를 위해 6개 사업 수행 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
 - 다수의 자치단체는 사업의 실효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사업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 센서 오작동, 센서 자체 결함으로 인한 오류, 센서 내구성에 따른 문제 등을 업무 증가로 인식함
 - 하드웨어 설치 기준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보완이 필요함
 -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데이터 수집·관리·분석 시스템 구축에 대한 수요가 높음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초기 자치단체 전담 부서(또는 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IoT 센서 등의 하드웨어 및 전산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담당 주체와의 즉각적인 소통과 협력이 가능한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임계치 설정이 미비한 사업 초기 단계에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사업의 확장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별 측정 데이터와 통합 데이터 관리 플랫폼 간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함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주체별 정책 방안

- 중앙(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협업 차원의 시스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제시함

주체별 시스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안		
중앙(행정안전부)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	민간협업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서 설치 대상 시설물의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시설물에 센서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운영 및 확장을 위해 행정안전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시설물에 센서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나, 시설물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을 통한 우수 사례의 지속적인 개발 및 이와 관련한 홍보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지역사회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지역 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해당 정책의 주민 수용도 향상이 필요함

5-4

지자체 기반의 지역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



주제어 지역경제 활성화 | 디지털 플랫폼 | 데이터기반 지자체 혁신

연구책임 이서희 • 연구진 전성만, 유보람, 전영준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데이터 기반 지자체 혁신 필요성 증대

- 정부혁신 ‘디지털 플랫폼’ 하에서 공공주도의 데이터 구축·공개 등 양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민·관협력의 질적 지역경제 현안 플랫폼이 부재함
 - IT기술 발달에 따라 지자체 기반의 데이터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데이터 기반의 지자체 경제활동 모니터링에 관한 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플랫폼이 전무한 실정
-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정책 담당자가 정책을 기획할 때,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제공 및 장기적 관점에서 개방성을 높여 누구나 자신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대국민 지역경제 플랫폼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II 연구의 주요 내용

국내 지역경제 플랫폼 현황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공공기관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하며, 이러한 예외 사례는 ‘법적근거, 데이터 특화성, 보안성’이라는 세 가지 주요 기준을 중심으로 고려됨
 - 115개의 개별 데이터 포털이 국내에 운영 중이고 이를 유형화하면 ①데이터 개방 전용(39개), ②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데이터 제공 기능 추가(29개), ③기관 DB의 검색조회 기능의 정보공개형(47개)으로 구분

- 광역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대표적 지역경제 플랫폼인 경기지역경제포털, 경남 빅데이터 허브플랫폼,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플랫폼은 공통적인 플랫폼의 설치 목표는 대시민 서비스를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다만,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지만, 활용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구체적 내용이 없어 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각화 정보를 위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임

해외 지역경제 플랫폼(일본 RESAS) 현황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일본 RESAS는 내각부 지역창생본부(마을·사람·일창생본부)에서 일본 내 각 지역의 다양한 빅데이터(기업 간 거래·사람의 이동·인구동태 등)를 수집, 시각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효과적으로 ‘지역발전종합전략’을 수립·실행·검증(PCDA)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임
 - 특히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정부나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국가가 일괄해서 구입·정비해서 시각화 툴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 시민이 언제든지 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일본은 환경성에서 민간경제연구소에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순환분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바, 한국에 적용할 시에는 공공연구원 주도의 시스템 운용 검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지역경제활동 분석 플랫폼 구상안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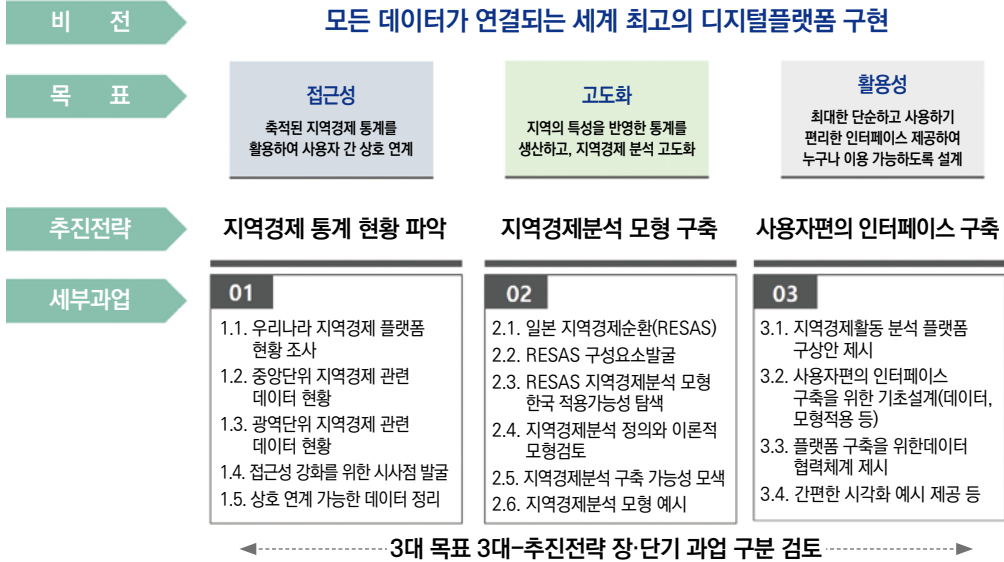
- 지역경제활동 분석 플랫폼 설계 구상안을 연구보고서 내 제시 항목(display items)과 인터페이스(interface) 구축과 결합하여 예시를 작성하였음(보고서 5장 참조)
 - 덧붙여 지역경제분석 모형을 고도화하기 위해 산업연관분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기본모형을 도출(예)가격하락을 추정 → 소비지출 증가 효과 추정 → 총생산량 기준 소비지출 증가분 추정 → 관련사업 소비지출 증가분 추정 → 산업유발계수 추출 및 산업유발효과 도출)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역경제활동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제시

- 플랫폼 구축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과업으로 구분하여 로드맵을 제시함

| 그림 | 플랫폼 구축 로드맵



민간 데이터 협력체계 강화 및 관리 고도화 노력 필요

- 공공데이터 외 가용 가능한 민간데이터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활동 추정을 고도화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필요함

5-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 - 지방소멸대응전략



주제어 지역발전 | 인구감소 | 지역경제일자리

연구책임 이소영 • 연구진 이제연, 김도형, 양원탁, 윤준호, 최민정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방소멸 위기대응의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적 정책 추진 필요

- 지방소멸대응정책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주체별 협력과 이해관계자의 이해 제고 필수
 - 지역활력 제고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복합적인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과 지원 필수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의 추진 및 관련 논의의 전략보고서 작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3년 인구감소지역대응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담론 형성과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을 기획·운영
 -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은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관할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대학 및 분야별 전문가, 민간단체, 언론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지역 간 협력, 교육, 관광, 산업, 일자리 등 핵심 의제별로 순회 토론한 결과를 정리하여 전략보고서로 작성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II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의 지역별 핵심 의제

구분	주제	시기 및 장소
강원권	지방소멸대응 전략의 협력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6.22 • 강원 (원주)
충청권	지자체와 대학 연계 지방소멸위기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8.30 • 대전/충북/충남 (대전)
영남권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0.25 • 부산/대구/경북/경남 (부산)
호남권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11.28 • 광주/전북/전남 (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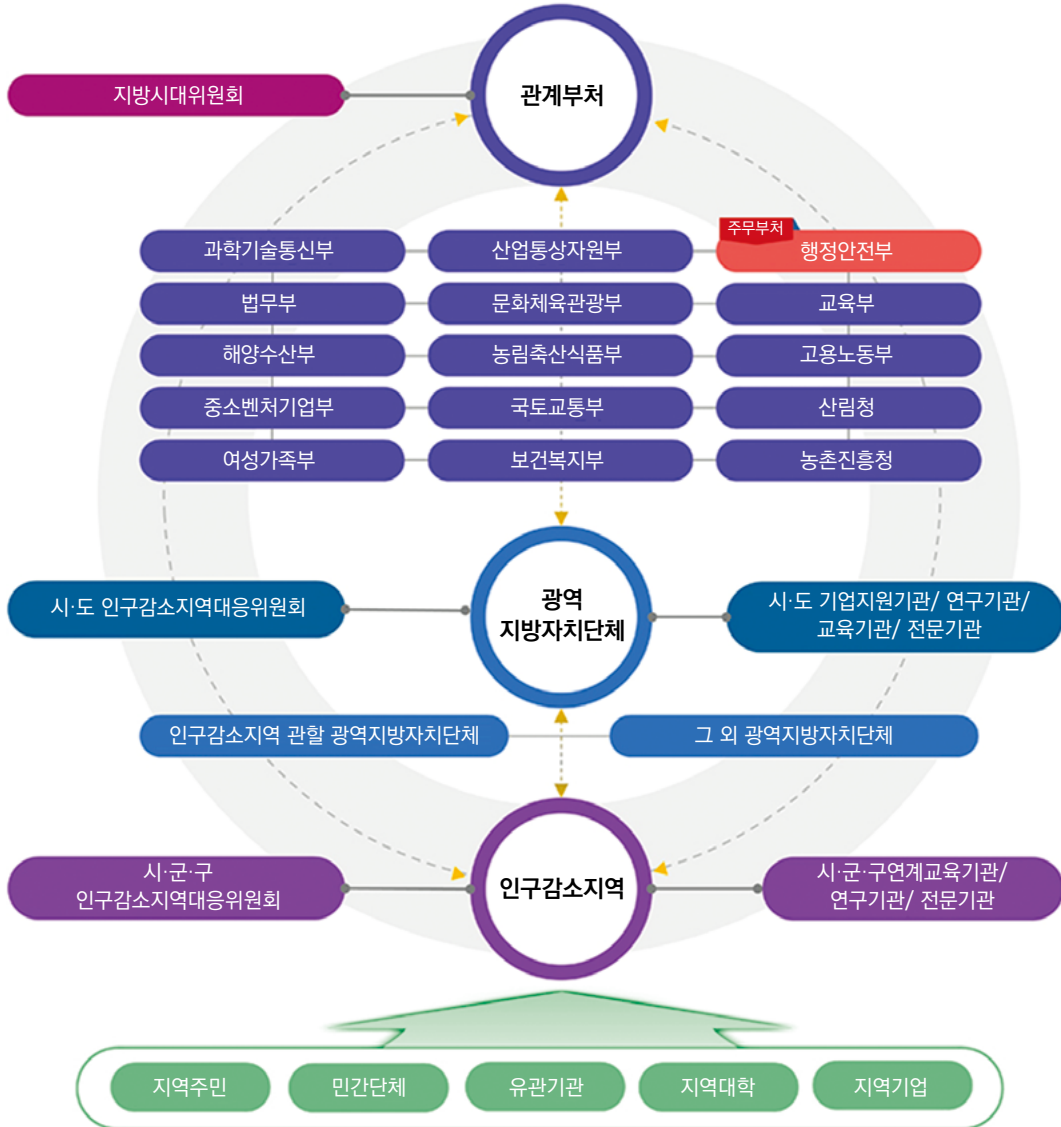
- 제1회 포럼에서는 지방소멸대응 전략의 협력적 추진 필요에 대해 상호 협의
 - 강원도를 사례로 협력적 추진사례 및 우수 시군 사례를 논의
- 제2회 포럼에서는 인구감소시대 지방대학의 위기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관계자 협의
 -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의 주제 발제와 충청권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와 대학을 연계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전략 마련
- 제3회 포럼에서는 관광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관광을 통한 지방소멸대응전략 마련
 - 생활관광, 치유관광, 위케이션,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다양한 지역관광 시책 및 지역의 우수사례를 상호 학습하고, 구체적인 위기 탈출 해법으로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지역간 협력방안 논의
- 제4회 포럼에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특화산업 및 일자리 창출 전략 논의
 -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혁신의 중요성을 상호 공감하고, 호남권을 대상으로 지역고유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전략을 모색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방소멸대응 협력적 추진방안 제언

-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광범위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중앙정부 관계 부처 간, 중앙부처-지자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내 다양한 협력 주체 간 다층적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필요



지방소멸대응정책 이해관계자들의 정책자료로 활용

-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관련 시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 제시
 - 교육, 지역관광, 산업, 일자리 등 지방소멸대응 관련 다양한 의제를 하나의 전략보고서로 제안

5-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주제어 지역발전

연구책임 양원탁 · 연구진 이소영, 김도형, 김민영, 김진언, 김나현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지역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

- 지난 50년간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발생
- 정부는 급격한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집중과 이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에 대응하고, 낙후 지역의 발전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지역균형발전 방안 필요성

- 2000년대 이후 세계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
-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지역 자원과 혁신역량에 근거한 내생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지방분권 요구가 증가하면서 중장기 지역균형발전의 방안 수립이 요구

II 연구의 주요 내용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동향

-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개념과 특성, 주요 쟁점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를 조사하고, 정책 동향과 주요 정책의 특성을 파악하여 연구의 전반적인 토대를 마련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특성 분석

- 지역균형발전 관련 이론 및 정책 동향을 바탕으로 낙후도지수를 산출하여 낙후지역을 도출하고, 이들 지역의 낙후성 및 현행 정책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낙후지역의 특성을 분석

지역균형발전 관련 해외사례 분석

- 우리보다 앞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수행한 영국, 일본, 프랑스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동향과 지역자원에 근거한 지원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안 제시

- 지역균형발전 정책 동향과 사회·경제적 여건 전망을 고려하여 중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구상하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지역균형발전 여건과 중장기 방향 설정

- 국내외 인구·사회·경제적 여건과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는 중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방향과 내용 전반에 걸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효율성에 의한 양적 성장에서 가치에 의한 질적 성숙으로, 국가 주도 일률적 처방에서 지역 주도 맞춤형 처방으로, 개별 정책·지역·주체의 접근에서 연계·통합적 접근으로 전환이 요구

표 | 지역균형발전 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방향 전환

구분		과거와 현재	중장기 방향
여건과 관점	시대 여건	성장 사회	성숙 사회
	정책 관점	경제적 격차 해소, 외생적 성장	포괄적 격차 해소, 내생적 성장
정책 내용	정책수단과 강도	일률적 인프라 확충/ 정책별 접근(대상 지역 동일 강도)	지역자원 기반 특화발전 지원/ 지역별 접근(낙후도 기반 차등화)
	대상 선별	정책별 접근/정책 간 연계 부족	낙후도 기반 과학적 선별/정책 간 연계
	공간 단위	행정구역 단위	기능지역 단위
주체별 역할	중앙정부	주도적 역할	지원자 역할
	지방정부	수동적인 집행/참여자 역할	주도적 역할/능동적인 진단과 처방
정책 기반	거버넌스	수직적(중앙→시도→기초)	수평/협력적(중앙-지방/공공-민간)
	모니터링	정책별 진단 및 모니터링	낙후도 기반 통합 모니터링

중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안

- 중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비전은 ‘활력이 넘치는 지역, 골고루 사는 국가’로 설정하고, ‘자립적 성장’, ‘특화 발전’, ‘연계·통합 지향’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
- 자립적 성장 측면에서 급변하는 사회·경제구조 속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책임과 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조성
 - 지역이 문제점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주체의 양성과 고유한 브랜드 창출 및 강화를 지원
 -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재정력 확보를 위해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확보
- 특화 발전 측면에서 각 지역이 지닌 특화자원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융·복합 발전을 도모하고, 특화자원에 기반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투자환경을 개선
 - 지역의 고유한 자연생태, 역사문화, 산업경제 자원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융·복합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특화발전 기반을 조성
 -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투자기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산업인프라 확충, 정주여건 개선, 지역 내 산-학-연-관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
- 연계·통합 지향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
 - 낙후도와 정책별 목적을 토대로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의 체계를 확립하고, 낙후지역 도출 및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낙후지역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확산을 도모
 -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구분하여 별도 사업화 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분절된 사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확보

지침연구과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 | |
|----------------------------------------------------------------|-----|
| 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문지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 김남주, 심대용, 조현민, 김진호, 심환희 | 175 |
| 2)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발전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 함윤주, 김도영, 박소연 | 178 |

6-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문지 작성 방법에 관한 연구



주제어 지방재정투자사업 | 타당성조사 | 설문지

연구책임 김남주 • 연구진 심대용, 조현민, 김진호, 심환희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는 수요 및 편익 추정 그리고 정책적 분석 등을 위하여 각종 설문조사가 수행되어 왔으나, 타당성조사에서의 설문지 작성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함에 따라 설문지가 과제별로 명확한 설명 없이 상이하게 작성되고 있음
- 사업별 특수성에 따른 맞춤형 설문조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응답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문 구성의 순서나 설문응답자에게 민감한 인적사항 관련 문항, 설문대상 연령, 조사 부수, 대면 설문 여부 등 설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의 경우에는 조사과제별로 명확한 설명이나 사유 없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
-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수행된 기존 연구들의 경우 타당성조사 사업유형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설문작성의 전 과정에서 연구진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LIMAC에서 수행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 활용되는 설문조사의 작성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문지 및 보기카드 작성방법, 설문조사의 수행과정, 리맥연구진, 외부연구진, 설문조사기관 등 참여주체별 역할 및 유의사항 등 설문 작성 방법을 연구, 제시함

II 연구의 주요 내용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문조사 개선방향 검토

- 그간 LIMAC에서 수행된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문조사 현황 검토 및 타당성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다음과 같은 6가지 개선방향이 도출됨

- ①응답자 인적사항 수집정보의 축소 필요성, ②설문대상연령의 기준 수립 및 대상연령 확대 필요성, ③설문조사방법(대면설문조사) 준수 및 명기 필요성, ④설문문항의 축소 필요성, ⑤보기카드 작성 관련 가이드의 필요성, ⑥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및 확인 필요성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개선방향

- **응답자의 인적사항 수집정보 최소화**
 - 타당성조사 수행 시 지역, 성별, 나이, 가구주 여부, 가구 구성원 수, 가구 단위 세후 소득을 필수항목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문항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제시함
- **설문조사 대상연령 기준 수립**
 -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법정 통계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불필요한 만 15세 이상의 범위에서 대상사업별 특성에 따라 설문조사 대상연령을 조정하여 수행하되, 그 사유를 보고서에 명기하도록 함
- **조사 방법 및 조사 부수 설정**
 - 설문조사 방법은 본 설문지와 보기카드를 활용한 대면설문조사로 수행하고, 설문조사 부수는 1,000부를 원칙으로 하되, 수요층의 제약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1,000부를 조사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명기하도록 함
- **설문지 본문 작성 시 유의사항**
 - 설문지 본문은 대상사업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사업에 대한 이용 및 지불의사, 통계적 분류의 순서로 구성하고, 질문형태 및 문항순서, 단어 등 설문 작성 시의 각종 고려사항을 제시함
- **보기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
 - 보기카드는 설문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을 6페이지 내외로 간단하게 작성하되, 사업의 주요내용 및 추진목적/기대효과, 사업의 건립계획, 사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설명, 유사 및 경쟁시설에 대한 설명 등의 순서로 제시토록 함
- **설문조사 수행 과정 및 참여주체별 역할 제시**
 - 설문조사 수행과정은 크게 설문조사 수행 여부 판단, 사업내용 파악, 설문조사 준비, 예비검토 및 본 설문조사 수행, 설문조사 결과 확인과 검증, 설문조사 결과 활용의 6단계로 제시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총 16가지 수행과정을 제시함
 - 세부 수행 과정별로 LIMAC 연구진, 외부연구진, 설문조사기관 등 참여주체별 역할을 구분, 제시함

- 설문조사 수행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제시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문조사 수행 시, 조사결과의 질적 확보 및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진과 설문조사 수행기관이 유의하여야 할 각종 고려 사항을 제시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연구 결과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LIMAC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중 특히, 산업부문에 대한 기업입주 수요조사,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활용한 비사용가치 중심의 일반인 설문조사 외에 아직까지 명확한 세부 수행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이용의향 및 지불의향금액 중심의 사용가치에 대한 일반인 설문조사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단위사업별 사업유형 및 세부 사업별 특성이 다름에서 기인되는 사업별 특수성을 감안한 설문조사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도록 후속연구에서 사업유형별 설문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사항 및 기준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2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발전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주제어 지방재정투자사업 | 이력관리

연구책임 함윤주 · 연구진 김도영, 박소연

I 연구배경 및 필요성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 모색 필요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 후 6년 경과 시점에서 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점검 필요
 - 지방재정투자사업의 경우 2016년부터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를 운영하여 심사 이후 사업관리 제도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사업 추진 이력정보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 담보 문제, 이로 인한 중점관리사업 선정의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
 - 투자사업 이력관리 결과에 대한 실효성, 운용상의 문제점, 환류방안 등에 대해서는 논의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으로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 이력관리 수행기관의 실무적 문제를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 필요
 -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접하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 필요

II 연구의 주요 내용

투자사업 이력관리 운영실태 및 주요쟁점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가능
 -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 300~400여 건의 투자사업 사후적으로 관리하며, 사업계획 변경이 큰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관리사업을 선정해 자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투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독려하고 관리계획 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

- 제도를 둘러싼 주요쟁점 검토결과, 대상, 범위, 관리방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 이력관리 자료 수집 및 검토의 어려움, 차세대 이호조 활용 시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력관계 등 자료수집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관리범위, 관리대상에 대한 논의 검토 및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이력관리 결과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선정기준 검토 및 선정 이후 문제성 사업에 대한 관리계획 이행에 대한 구속력 부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델파이 분석 및 단계적 발전방안 도출

- 델파이 결과, 이력관리 대상 단계적 확대 및 결과 환류를 위한 정책적 수단 강화 필요
 - 이력관리 대상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전체로의 확대가 필요하되, 전문기관의 법적 지정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행보다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페널티, 컨설팅 자료 공개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환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전문가 델파이 결과 및 제도를 둘러싼 환경, 각 대안별 영향 및 효과성을 검토하여 단계적 발전방안 제시
 - 환경적 측면(이력관리 대상사업, 중점관리사업 선정기준), 투입 및 과정적 측면(이력관리 전문기관 역할 및 협업체계, 제도 수행 과정), 활용적 측면(페널티 또는 인센티브)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단계적 발전방안 제시

투자사업 이력관리 매뉴얼 주요 개선사항 도출 및 매뉴얼(안) 마련

- 이력관리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세부작성지침 필요
 - 1차 자료 제출-중점관리 후보사업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자체관리계획 제출 등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자료 제출 시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작성지침 필요
 - 전담기관의 지정 및 이력관리 확대에 따른 추가 전담기관 지정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력관리 수행기관의 입장에서도 각종 분석 기준 등에 대한 매뉴얼 필요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기관이 모두 참고할 수 있는 이력관리 매뉴얼(안) 마련

III 연구 결론 및 기대효과 / 정책제언

투자사업 이력관리 단계적 발전방안 마련

- 제도 발전방안으로 1~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제도의 대상 및 범위 확대 및 강화

-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대상 및 범위는 1단계 기반조성(전문기관 지정, 가이드라인 배포 및 교육, 자료수집체계 및 방식 명확화 등) 이후 2단계 시범실시를 통해 3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유형별 확대를 제시함
- 중점관리사업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대상범위를 운영단계까지 확대하는 2단계 시점부터 운영관련 지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활용적 측면에서는 향후 자료 공개 우선 실시 후 2단계부터 사업유형별 컨설팅 제도 단계적 실시를 목표로 하며, 자료공개 및 컨설팅 제도 안정화 및 보상체계가 보편화되면 합동평가, 재정분석 등 이미 정착된 다른 제도에 추가하여 이력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이력관리 매뉴얼의 주기적 개정 필요

- 향후 제도 확대 및 강화와 더불어 향후 차세대 이호조 활용 이후 변경사항 반영 필요
 - 현행 이력관리제도의 대상 및 범위, 기존 자료제출방식 하에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으나, 향후 제도 발전과 더불어 차세대 이호조를 투자심사 단계부터 활용하여 이력관리까지 연계할 시 이력관리 자료 제출 방식, 주기, 항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사항을 반영한 매뉴얼 개정 필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연구성과보고서



III

정기간행물

1.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2. 지방의정브리프
3. 인포그래픽스
4. 카드뉴스
5.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6. 지방행정연구
7. 세계지방자치동향
8. 연구성과 콘텐츠(유튜브)

정기간행물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 1) 2023년도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185

지방의정브리프

- 2) 2023년도 지방의정브리프 186

인포그래픽스

- 3) 2023년도 인포그래픽스 187

카드뉴스

- 4) 2023년도 카드뉴스 188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 5) 2023년도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189

지방행정연구

- 6) 2023년도 지방행정연구 192

세계지방자치동향

- 7) 2023년도 세계지방자치동향 195

연구성과 콘텐츠(유튜브)

- 8) 2023년도 연구성과 콘텐츠(유튜브) 199



2023년도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No	호수	제목
1	제161호	지역 특성이 반영된 접경지역 권역별 특화발전 추진방안 김민영 부연구위원
2	제162호	지역이 주도하는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방안 윤소연 부연구위원
3	제163호	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김윤승 부연구위원 / 전성만 부연구위원
4	제164호	지방행정 통계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김필 부연구위원
5	제165호	지방자치-교육자치 연계 강화 방안 모색 김진 부연구위원
6	제166호	외국인 주민 관련 정책의 분권화와 지역맞춤형 정책의 추진 전대욱 연구위원
7	제167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효율화, 그 해법은? 김지수 연구위원
8	제168호	2022년도 일본의 고향납세 실적 공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신두섭 선임연구위원
9	제169호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 방안 이원도 부연구위원
10	제170호	지방자치단체 디지털플랫폼, 무엇이 문제인가? 이경은 부연구위원
11	제171호	읍면동 재난안전 기능개선 모델 유자영 부연구위원 / 최지민 부연구위원
12	제172호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에 따른 지방행정의 검토과제 최지민 부연구위원



2023년도 지방의정브리프



No	호수	제목
1	제29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쟁점과 개선방안 주희진 부연구위원
2	제30호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의 현황과 과제 고경훈 연구위원
3	제31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방안 고경훈 연구위원
4	제32호	지방분권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지방의회법안 입법동향 정기용 부연구위원
5	제33호	미래를 위한 지방의회지표 혁신: 지표 현황과 진보적 대안 김필 부연구위원
6	제34호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표준업무관리를 위한 제언 최지민 부연구위원
7	제35호	정책지원관의 효과적 활용방안에 대한 제언 주희진 부연구위원
8	제36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 이후: 현황과 과제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교수
9	제37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현실과 대안의 모색 박순중 前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0	제38호	지방의회 후원회제도의 도입방안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11	제39호	광역의회 교섭단체의 의의와 과제 고경훈 연구위원
12	제40호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년도 인포그래픽스



No	호수	제목
1	제34호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우수연구과제
2	제35호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공공플랫폼 운영을 위한 제언
3	제36호	지방자치 교육자치 연계·협력 강화 방안
4	제37호	보통교부세 개편을 통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방안
5	제38호	대규모 지역축제·행사의 효과적 안전관리를 위한 제언
6	제39호	온천도시 지정사업과 온천도시의 활성화 노력



2023년도 카드뉴스



No	호수	제목
1	제10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신설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2	제11호	챗GPT가 말하는 지방행정 미래트렌드
3	제12호	2023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 국민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을 소개합니다!
4	제13호	특별자치시·도 맞춤형 자치모델의 제안
5	제14호	재난안전 중심의 읍·면·동 기능개선 모델 제안
6	제15호	지방규제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2023년도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47호 (4월)

내용	
주제	기회발전특구
인터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소멸위기의 해결책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기회발전특구는 혁신성장의 발판 구교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슈	지역균형발전과 '기회발전특구' 이서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집중조명	기회발전특구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설계 방안 김정숙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지방시대' 철학과 기회발전특구의 방향 김민석 경상북도 정책실장
	인구구조에 기반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전략 심훈 주식회사 메쥬 수석연구원/공학박사
	교육자유특구 : 한국판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이해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교육연구원장
입법동향	경상북도 의장에게 듣는 앞으로의 경상북도 배한철 경상북도 의회 의장
우수사례	저발전지역으로 자본을 유입 시키기 위한 미국식 해법 : 미국 기회특구(Opportunity Zone) 사례와 우리의 기회발전특구에 주는 시사점 이윤석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살맛나는 으뜸도시" 해남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48호 (8월)	
내용	
주제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인터뷰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슈	특별자치시·도의 진단기준과 미래 모델의 제안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집중조명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의미,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일반자치와 조화를 이루며 예측가능한 특별자치시·도 제도 운영을 위한 제언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인성 제주특별자치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입법동향	세종시법(약칭) 개정 필요성과 발전방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특별자치도의 전망과 과제 김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수사례	영국 대도시권 사례 : 웨스트요크셔의 권한이양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탐방	지방소멸 역주행 프로젝트 전국 모델 제시 살고싶고 오고싶은 화순군 : 전라남도 화순군 김수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49호 (12월)

내용	
주제	지방교육재정
인터뷰	첨단과 청정이 공존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슈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 김성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집중조명	지역 혁신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 주요 쟁점과 성공적 운영 방안 김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개선방안 정종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다가온 유보통합, 지자체와 교육청의 대응 방안은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직학부 교수
입법동향	프랑스의 교육재정분권으로 성공한 <소피아 앙티폴리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수사례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변화 방향 주상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단체 탐방	군민과 함께 미래산업 육성 및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부안군 심대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년도 지방행정연구



제37권 제1호 (통권 제132호)

No	논문명	저자명
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진단 및 제도화 방향 모색	김흥주, 김강현
2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재명
3	주택 보유세 관련 제도개편의 소득분배효과: 2020~2022년 개정안을 중심으로	허등용
4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 조례 도입 영향요인 연구: 정치적으로인을 중심으로	임지현, 문소영
5	PCSE 모형을 적용한 노인복지예산 결정요인의 탐색: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심은주, 김애진
6	지방 중소도시 지역아동센터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정혜주, 류주현, 정규형
7	자산기반 지역사회 발전(ABCD) 모델을 적용한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 연구: 안산 일동을 중심으로	신수경, 이상현
8	충청권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협력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	박재희
9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의 시계열 변동성 분석	이원도, 유수동, 김영롱
10	공유경제에서 공유도시로의 전환? : 거버넌스 전략과 도시정부 역할에 대한 서울시 사례 분석	김상민
11	청년세대 지역 간 이동자의 직업 가치관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김현우
12	대규모 정부사업에 따른 마을소멸 위기와 그 역설: 가덕도 대항마을을 중심으로	김민주
13	비도시지역 거주가 요인별 만족도를 매개로 주거환경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김태건, 이슬, 김갑성

제37권 제2호 (통권 제133호)

No	논문명	저자명
1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지방행정 통계지표의 현황분석과 새로운 지표 제안	김흥주, 김강현
2	스마트시티 정책의 유용성, 공공성, 지방정부 신뢰가 주민의 증세 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재명
3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광역시를 중심으로	허등용
4	공공투자 의사결정 합리화를 위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개선방안 연구	임지현, 문소영
5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본 청년기본조례 제정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심은주, 김애진
6	커뮤니티웰빙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비선호시설에 대한 정책대상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해주, 류주현, 정규형

제37권 제3호 (통권 제134호)

No	논문명	저자명
1	균형발전 정책변동 분석: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	김형진
2	전국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제 운용 실태 및 실효성 연구 : 쿼터제 적용을 중심으로	신수경
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지원 조례 도입 현황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정인
4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가?: 중앙의 인구지원정책이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정숙, 한승혜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효율화 방안: 지니계수 분해 기법을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이서희, 홍근석, 문소영
6	지역적 특수성이 지역의 자체수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섬지역을 중심으로	유승원, 심연우, 김수희
7	항만에 대한 배후지역 주민의 수용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송효진
8	부모의 지역사회 육아친화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위계적 선형모형의 활용	구한민, 김서영, 허연, 김나영
9	장애인의 환경 특성이 지역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재난 취약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병윤

제37권 제4호 (통권 제135호)

No	논문명	저자명
1	〈기획논문〉 지역 간 재난 대응 협력 네트워크 분석	윤소연
2	플랫폼 정부의 유형과 발전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간 정책확산을 중심으로	유란희, 이경은
3	지방정부의 능력과 가치에 따른 신뢰의 영향	김정숙, 전미선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 조직몰입을 중심으로	홍상우, 김동욱, 이대웅
5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정부 예산 지원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 가족센터사업을 중심으로	이재호
6	인구감소지역의 경제성장 방안에 관한 연구: 창조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민곤, 김지수
7	지역의 첨단산업환경이 청년인구유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임태경
8	지역의 생활인구 형성의 동인은 무엇인가? : 지역 문화관광 재정지출의 효과를 중심으로	서충완, 배정아
9	청년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예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정인
10	세종시의 노인복지 정책헌신도 비교분석: 행정적, 사회경제적, 규범적 준거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성은, 유란희



2023년도 세계지방자치동향



42호

No	나라	제목
1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의 신개념 사회보장정책
2	미국	미국 주 정부간 재정 격차 총과세 가능 자원 (Total taxable resources TTR)
3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성 전환
4	중국	푸젠성 내 중국-인도네시아, 중국-필리핀 산업단지 조성
5	한국	투자심사사업 사후관리 개편방향

43호

No	나라	제목
1	미국	미국 아이오와주 North Liberty 시의 근린지역 엠버서더 프로그램
2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산타 모니카 시 (City of Santa Monica) 가뭄 대비를 위한 지속가능한 수자원 시설 프로젝트
3	일본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관한 이용자 의식 및 이용실태 조사
4	독일	독일의 지역 간 공동체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실험
5	한국	민간역량 중개형 플랫폼 운영 - 경기도 '배달특급' 사례

44호

No	나라	제목
1	일본	일본에서의 지방 이주-정책 시책의 모범사례
2	미국	ChatGPT, AI 그리고 지방정부
3	일본	SDGs달성을 위한 일본 지자체의 정책사례
4	독일	매력적인 보행 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도시 테라스 프로젝트
5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향

45호

No	나라	제목
1	독일	독일의 온천도시 제도
2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일부사무조합
3	중국	중국의 서비스업 확대·개방 종합 시범지역 지정과 사업의 전개
4	일본	요코하마 특별자치시 구상과 기대효과
5	한국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의 지역균형발전 반영 방안

46호

No	나라	제목
1	미국	미국 지방정부 공공계약 지원 프로그램
2	일본	일본의 지역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구축을 위한 노력
3	미국	미국의 커뮤니티 커넥터 프로그램(Community Connectors Program)
4	한국	광역지자체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선 방향

47호

No	나라	제목
1	독일	유럽연합의 챗GPT 규제와 독일 지방행정에서의 도입 시도
2	미국	“공실에서 공생으로(Vacant to Vibrant)”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정책
3	일본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모색과 정부지원
4	일본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액화수소 공급망 정비
5	한국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관련 동향

48호

No	나라	제목
1	미국	휴스턴시 및 해리스 카운티의 커뮤니티 COVID 주거 프로그램
2	미국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속가능채권: Sustainability Bonds
3	미국	고령화 대응을 위한 미국 인디애나주 정부의 노력
4	한국	'석탄광산(鑛山)에서 문화광산(光山)'으로: 영월군 문화도시 사업

49호

No	나라	제목
1	일본	일본 지자체가 실시한 '아동·육아 지원 신제도'의 성공 사례 3선
2	일본	일본 저출산 대책의 모범지역 사례
3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논의 -쓰시마시(対馬市)
4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로스앤젤레스 시(City of Los Angeles) "잔디밭 교체 프로그램(Turf Replacement Program)"
5	한국	건설안전과 지역발전

50호

No	나라	제목
1	네덜란드	'쇼핑거리' 보다 '사람 사는 거리'로의 전환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농촌 인구감소 대응전략
3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방 활성화 보조금 정책(Local Aid)
4	한국	시민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이행 - 탄소중립 그린도시, '수원특례시'

51호

No	나라	제목
1	일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원전 재가동 검증 : 니가타현(新潟県)
2	일본	일본의 정부 간 보조금과 지방재정 형평화 추진
3	미국	애틀랜타 대도시 권역의 취약계층 교통지원 프로그램(Simply Get There.or,Atlanta, GA)
4	한국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지방시대위원회, 2023)

52호

No	나라	제목
1	미국	매사추세츠주 공유 재산 정보 관리 시스템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2	미국	119 신고 센터에 AI 도입, 지방정부의 향후 과제는
3	독일	독일 솔레스비히-홀슈타인주 스마트헬스 프로젝트
4	한국	일하는 병식 변화, 행정업무 혁신 광주시 업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53호

No	나라	제목
1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우발성 마약 사용 관리 프로그램(Contingency Management Program)” : 바우처 제공을 통한 마약 재범 방지 및 관리 정책
2	일본	일본은 지방재정을 활용하여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했나?
3	네덜란드	인재육성을 위한 지역인가? 지역을 위한 인재육성인가?
4	일본	일본의 스포츠를 통한 지역활성화
5	한국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자체 대응과 개선 방향



2023년도 연구성과 콘텐츠(유튜브)



No	업로드일	제목
1	2023.5.30.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영상
2	2023.5.31.	대규모 정책지원관의 등장!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	2023.6.21.	인구감소의 명암
4	2023.6.29.	1회용품 제로 챌린지
5	2023.7.19.	인구감소, 제도적 대응이란?
6	2023.8.7.	인구감소, 제도적 대응의 2가지 시각-적응과 완화
7	2023.9.15.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도 공동세미나
8	2023.9.27.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의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9	2023.10.31.	정책지원관의 업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할까?
11	2023.11.21.	인공지능의 디지털 플랫폼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11	2023.11.30	인공지능 정책활용 및 디지털플랫폼 해외사례
12	2023.12.1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 어떻게 할까?
13	2023.12.21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 방안
14	2023.12.21	공공데이터 규제 현황과 과제
15	2023.12.27.	스마트지방행정의 현재와 미래
16	2023.12.28.	제5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기회발전특구 지역경제 활성화포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연구성과보고서



IV 부록

2023년도 연구과제 수행목록





2023년도 연구과제 수행목록

1. 기본연구과제

분야	No	논문명	저자
자치 분권 제도	1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협력제도 강화방안 연구	전대욱, 권오철, 김필
	2	지방의회 자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	주희진, 고경훈, 정기용
지방 행정 혁신	3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책임성 확보 수단 설계에 관한 연구	강영주, 김지수, 박해육
	4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혁신 준비도 모형 연구	이경은, 이재용, 김수동
	5	지방자치단체 정원운영 실태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관리방안	최지민, 유자영
지방 재정 경제	6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우발채무 관리제도 개선방안	김성주, 김진, 전영준
	7	재정분권 수준 측정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유보람, 홍근석, 이서희
지역 균형 발전	8	로컬브랜딩을 활용한 골목상권 육성방안	김도형, 양원탁
	9	지역 주도의 맞춤형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윤소연, 김민영
	10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활성화 방안	이원도, 유수동
지방 투자 사업 관리	11	해상교량 개통으로 인한 섬지역 생활환경 변화 연구	김지훈, 김상기, 김성규
	12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조건부가치추정법(CVM) 개선방안 연구 : WTP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송지영, 이민기, 정연백

2.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저자
자치 분권 제도	1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중소기업, 고용, 환경분야) *	고경훈, 주희진
	2	온천도시 유형화 제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대욱, 최인수
	3	맞춤형 자치모델 구현 : 특별자치시·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희진, 고경훈, 정기용
	4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평가 *	고경훈, 주희진
	5	지방규제 개선효과 분석 및 매뉴얼 연구 *	정기용, 전대욱, 김해솔
지방 행정 혁신	6	재난·안전 중심의 읍·면·동 기능개선 모델 방안 연구	유자영, 최지민, 원혜연
	7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타당성 분석	이경은, 유자영, 황선영
	8	 이북5도위원회 실질적인 역할·기능 강화 방안 연구	김수동, 이재용
지방 재정 경제	9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	김성주, 김진
	10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정형평화 기능 분석 및 효율화 방안	홍근석, 유보람
	11	지방자치단체 데이터 기반 재정정책 결정을 위한 재정지표 및 예측모형 개발 -가용재원을 중심으로-	김성주, 전영준, 이민아
지역 균형 발전	12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검토 및 개선방안	김민영, 이소영
	13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이원도, 이소영, 홍근석
	14	접경지역 지정 기준 검토 및 재정·규제 특례 발굴 *	김도형, 이소영
지방 투자 사업 관리	15	자체타당성 검토 개선 연구 : 운영수지 분석을 중심으로	송지영, 김성규, 이민기, 조현민, 이정희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3.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과제

No	지역	과제명	저자
1	서울특별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 및 재정확충 방안 *	이서희, 홍근석
2	부산광역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중심형 정책지표 개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이경은, 최지민, 유자영
3	대구광역시	대구 업사이클 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김민영, 양원탁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전담기구 설립방안 연구	유보람, 홍근석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방안 연구	김지수, 김수동
6	대전광역시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김필, 전대욱, 김해솔
7	울산광역시	 도시 물순환 회복력 향상 방안 연구	윤소연, 김도형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자체(단체제) 조직진단 기법연구 *	최지민, 김지수
9	경기도	경기도 다중운집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력 운영에 관한 연구	윤소연, 김민영
10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유보람, 신두섭
11	충청북도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권오철, 금창호
12	충청남도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권한 지방이양(RISE체계)에 따른 충남형 고등교육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진, 김성주
13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및 기업유치 특성 분석 연구 *	양원탁, 김민영, 류동훈
14	전라남도	지방대학 권한 지방이양 대응 및 경쟁력 강화 방안 *	김필, 정기용, 하선우
15	경상북도	경북연구원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재용, 김지수
16	경상남도	경남지역의 산과 바다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지리산권 및 거제·통영권을 중심으로) *	김도형, 김현호
17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방안 *	전성만, 전영준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4. 정책이슈리포트

No	지역	과제명	저자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김필, 주희진
2	부산광역시	4차 산업시대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부산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여효성, 양원탁
3	대구광역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적지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양원탁, 김민영
4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산정 수요 발굴 등 개선방안 연구	홍근석, 전영준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디지털 전환 혁신 방안	이재용, 이경은, 김수동
6	대전광역시	대청호 유역 주민 소득증대 방안 연구	정기용, 주희진
7	울산광역시	해오름동맹 상생협의체 발전 방안	전대욱, 주희진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형 자체조직진단 매뉴얼 개발 *	최지민, 김지수
9	경기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경기도 테마형 임대주택 공급방안	여효성, 이원도
10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활성화 방안	이원도, 윤소연
11	충청북도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윤소연, 이원도
12	충청남도	2024년 충청남도 지방세 세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수추계 방안 *	홍근석, 이서희
13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인구 개념을 활용한 전북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김민영, 윤소연
14	전라남도	전라남도 청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우수사례 중심으로 *	정기용, 최인수
15	경상북도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 체계 확립 *	고경훈, 주희진
16	경상남도	경남 20대 인구 유출에 대한 세부 원인 분석과 대책	유자영, 이경은, 안해경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스포츠대회·전지훈련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툴(tool) 개발	전대욱, 김해솔

* 비공개 기간 만료 후, 홈페이지 게시 예정

5. 자체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저자
기획조정	1	 지방행정 미래 트렌드 분석 연구	유수동, 최지민, 이서희, 윤소연, 강희송, 문혜리
자치분권제도	2	생성형 시를 활용한 법령사무조사 자동화 기초 연구	주희진, 최인수, 전대욱, 박재희
지방행정혁신	3	디지털 기반 노후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및 실효성 향상 방안 연구	이재용, 강영주, 김지수, 이경은, 김수동
지방재정경제	4	지자체 기반의 지역경제활동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	이서희, 전성만, 유보람, 전영준
지역균형발전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 - 지방소멸대응전략	이소영, 이제연, 김도형, 양원탁, 윤준호, 최민정
	6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양원탁, 이소영, 김도형, 김민영, 김진연, 김나현
	7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표 발굴 및 사례분석 - 생활인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윤소연, 전대욱, 이경은, 이원도, 유수동

6. 지침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저자
지방투자사업 관리센터	1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설문지 작성방법에 관한 연구	김남주, 심대용, 조현민, 김진호, 심환희
	2	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발전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함윤주, 김도영, 박소연
	3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고도화 방안 연구	외부 위탁

7. 수시연구과제

분야	No	과제명	저자
기획조정	1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신규 아젠다 발굴	유수동, 문혜리
자치분권제도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전대욱, 최인수
	3	경제·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구통계 연구*	전대욱, 김필, 이경은, 이원도
지방행정혁신	4	초광역행정구역 제도연구	최지민, 김지수
지방재정경제	5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금 지원 개선방안	김성주, 김진
	6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전영준, 신두섭, 오유리

* 유관기관(통계개발원) 공동 수행

8.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분야	의뢰기관	과제명	연구진
자치분권제도	충북 괴산군	청년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정기용, 전대욱, 주희진, 최인수
지방행정혁신	전북 임실군	조직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 컨설팅	김지수, 최지민, 안혜경
지방재정경제	강원 횡성군	보통교부세 현황 진단 컨설팅	홍근석, 이서희, 유보람, 오유리
지역균형발전	전북 임실군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컨설팅	이원도, 윤소연, 윤준호

9. 수탁연구과제

- '인구감소지역 원인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연구' 등 총 16과제

10. 타당성조사과제

- '경부간선도로 재구조화사업 타당성조사' 등 총 83과제